

SDGs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ODA 정책의 심층 연구

김세원·김종일·강동근

2016. 12.

머 리 말

2015년에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가 종료함에 따라 향후 15년간 국제개발협력의 지향해야 할 목표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가 채택되었습니다. SDGs 채택에 따르는 향후 국제개발협력전략의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나라 ODA 정책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SDGs의 17대 목표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등이 명시적으로 채택됨에 따라 산업 ODA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SDGs의 기본취지에 부응하여 개도국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ODA 전략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살펴보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구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중소기업 ODA 분야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산업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의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이론적, 정책적 기여를 해왔으며, 이제 한국의 산업분야 ODA에 적극 참여하여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는 사업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당 연구원이 기획하고 있는 일련의 산업 분야 ODA 정책 연구 시리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오늘날 개도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경향에 맞추어 산업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 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산업분야 ODA 연구와 사업들은 산업화 경험의 비교우위를 살려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는 산학연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산업 ODA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사회연구원의 김세원 이사장님과 동국대학교 김종일 교수, 강동근 박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값진 연구 결과를 만들어주신 연구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구 과정을 자문하고 도와주신 당연구원의 주동주 박사와 홍석일 위원, 윤정현 연구원, 그리고 KIEP의 권을 박사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사업에 참여한 저자들의 견해로서, 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2016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차 례

머리말	3
요약	13
제1장 서론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6
제2장 SDGs의 의의와 중소기업의 역할	29
1. SDGs의 취지와 중요 내용	30
2. 국제사회의 중소기업 개발협력 동향과 주요 논의	45
3. SDGs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소기업 육성 방향 ..	54
제3장 개도국 중소기업의 위상과 중소기업 개발협력의 내용	80
1. 중소기업의 범위와 위상	81
2. 중소기업 ODA 대상이 될 만한 기업군	90
3.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본 중소기업 ODA역할	93
4. 중소기업 ODA의 내용	98
5. 민간부문개발(PSD)의 시각에서 본 중소기업 ODA	110
6. 개도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을 위한 개발협력	121
제4장 개도국에서의 중소기업 현황과 육성정책	127
1. 서론	127
2. 아시아 국가의 중소기업 현황과 육성정책	129

(1) 베트남	129
(2) 인도네시아	137
(3) 태국	147
(4) 말레이시아	155
(5) 필리핀	161
(6) 미얀마	167
(7) 라오스	174
(8) 캄보디아	180
3. 소결	187

제5장 주요 선진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중소기업 개발협력 191

1. 중소기업분야 ODA 현황	191
2. 주요 공여국의 중소기업 ODA 현황과 지원전략	198
(1) 일본	198
(2) 미국	206
(3) 독일	213
(4) 영국	219
(5) 북구 공여국 :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225
3. 주요 국제기구의 중소기업 ODA 현황과 지원전략	229
(1) EU(유럽연합)	230
(2) WB(세계은행)	233
(3) ADB(아시아개발은행)	236
(4) IDB(미주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UNDP(유엔개발계획)	238
4. 시사점	241

제6장 한국의 중소기업 개발협력 현황 244

1. OECD DAC의 ODA 자료(CRS code(32120))	245
--------------------------------------	-----

2. EDCF의 중소기업 관련 ODA 사업	248
3. KOICA의 중소기업 관련 ODA 사업	250
4. 한국의 중소기업 관련 ODA 사업의 특징	255
제7장 결론 : SDGs와 한국의 중소기업 개발협력 정책 방향	257
1. SDGs의 한국의 중소기업 ODA 정책에 대한 시사점	258
2. S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중소기업 ODA 방향	266
참고문헌	282
Abstract	288

표 차례

〈표 2-1〉 SDGs의 기본요소와 관련 목표	34
〈표 2-2〉 SDGs의 분야별 목표	36
〈표 2-3〉 SDGs의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인프라 건설 및 산업화 목표	63
〈표 2-4〉 SDGs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및 정책협력	69
〈표 3-1〉 주요 국제기구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84
〈표 3-2〉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국제비교	85
〈표 3-3〉 소득군별 중소기업의 위상	88
〈표 3-3〉 중소기업 ODA의 지원형태 분류	108
〈표 3-4〉 중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민간부문개발(PSD)을 위한 중소기업 개발(하위스트림) 관련 지원전략	114
〈표 4-1〉 한국의 해외투자현황	128
〈표 4-2〉 베트남의 경제현황	130
〈표 4-3〉 베트남의 중소기업 정의	131
〈표 4-4〉 베트남의 중소기업 수 현황	132
〈표 4-5〉 베트남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현황	133
〈표 4-6〉 베트남의 중소기업 제도	134
〈표 4-7〉 베트남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137
〈표 4-8〉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	138
〈표 4-9〉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정의	139
〈표 4-10〉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수 현황	140
〈표 4-11〉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현황	141
〈표 4-12〉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총생산 현황	141
〈표 4-13〉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수출 현황	142
〈표 4-14〉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제도	143
〈표 4-15〉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146
〈표 4-16〉 태국의 경제현황	147
〈표 4-17〉 태국의 중소기업 정의	149
〈표 4-18〉 태국의 중소기업 수 현황	150

〈표 4-19〉 태국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현황	150
〈표 4-20〉 태국의 중소기업 총생산 현황	151
〈표 4-21〉 태국의 중소기업 수출/수입 추이	152
〈표 4-22〉 태국의 중소기업 관련제도	153
〈표 4-23〉 태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154
〈표 4-24〉 말레이시아의 경제현황	156
〈표 4-25〉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 정의	157
〈표 4-26〉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 수 현황	158
〈표 4-27〉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현황	158
〈표 4-28〉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 총생산 현황	159
〈표 4-29〉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제도	160
〈표 4-30〉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160
〈표 4-31〉 필리핀의 경제현황	162
〈표 4-32〉 필리핀의 중소기업 정의	163
〈표 4-33〉 필리핀의 중소기업 수 현황	163
〈표 4-34〉 필리핀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현황	164
〈표 4-35〉 필리핀의 중소기업 제도	165
〈표 4-36〉 필리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166
〈표 4-37〉 미얀마의 경제현황	168
〈표 4-38〉 미얀마의 중소기업 정의	169
〈표 4-39〉 미얀마의 중소기업 수 현황	170
〈표 4-40〉 미얀마의 중소기업 제도	172
〈표 4-41〉 미얀마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173
〈표 4-42〉 라오스의 경제현황	174
〈표 4-43〉 라오스의 중소기업 정의	175
〈표 4-44〉 라오스의 중소기업 현황	176
〈표 4-45〉 라오스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현황	177
〈표 4-46〉 라오스의 중소기업 제도	178
〈표 4-47〉 라오스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179
〈표 4-48〉 캄보디아의 경제현황	181

〈표 4-49〉 캄보디아의 중소기업 정의	182
〈표 4-50〉 캄보디아의 중소기업 수 현황	183
〈표 4-51〉 캄보디아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현황	183
〈표 4-52〉 캄보디아의 중소기업 제도	184
〈표 4-53〉 캄보디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185
〈표 5-1〉 2002~2014년 산업분야 ODA 지출액 구성	192
〈표 5-2〉 2002~2014년 주요 공여국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194
〈표 5-3〉 2002~2014년 주요 공여기관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195
〈표 5-4〉 2002~2014년 대륙별 중소기업 ODA 수원규모	195
〈표 5-5〉 2002~2014년 중소기업 ODA 주요 수원국 현황	197
〈표 5-6〉 일본의 개발협력현장(2015)	199
〈표 5-7〉 JICA의 지역별 핵심지원전략(2015)	200
〈표 5-8〉 2002~2014년 일본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변화	202
〈표 5-9〉 일본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상위 5개 국가	202
〈표 5-10〉 2002~2014년 일본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204
〈표 5-11〉 미국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상위 10개 국가	209
〈표 5-12〉 2002~2014년 미국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210
〈표 5-13〉 통일독일 이후의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214
〈표 5-14〉 2002~2014년 독일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변화	215
〈표 5-15〉 독일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상위 7개 국가	216
〈표 5-16〉 2002~2014년 독일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217
〈표 5-17〉 2002~2014년 영국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변화	221
〈표 5-18〉 영국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상위 7개 국가	222
〈표 5-19〉 2002~2014년 영국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223
〈표 5-20〉 2002~2014년 EU의 대륙별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232
〈표 5-21〉 2002~2014년 EU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232
〈표 5-22〉 2004~2014년 세계은행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변화	234
〈표 5-23〉 세계은행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상위 6개 국가	235
〈표 5-24〉 2004~2014년 세계은행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235
〈표 5-25〉 아시아개발은행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상위 5개 국가	237

〈표 5-26〉 2009~2014년 ADB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238
〈표 5-27〉 2002~2014년 IDB, UNDP, AfDB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239
〈표 5-28〉 주요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PSD 중점분야	242
〈표 6-1〉 2006~2014년 한국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변화	245
〈표 6-2〉 한국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상위 5개 국가(2006~2014 집행액) ..	247
〈표 6-3〉 2006~2014년 한국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247
〈표 6-4〉 2006~2014년 한국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248
〈표 6-5〉 EDCF의 중소기업 관련 ODA 프로젝트	249
〈표 6-6〉 KOICA의 중소기업 관련 ODA 프로젝트	250
〈표 6-7〉 산업통상자원부 ODA 프로젝트	255
〈표 7-1〉 한국의 산업 및 중소기업 ODA 유망 사업 분야	272

그림 차례

〈그림 2-1〉 SDGs 매트릭스의 통합체계(예시)	40
〈그림 3-1〉 민간부문개발(PSD) 관련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금융원조(ODF, 2013) ..	110
〈그림 4-1〉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수 추이	139
〈그림 4-2〉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추이	140
〈그림 4-3〉 태국의 중소기업 수출/수입 추이	151
〈그림 4-4〉 필리핀의 중소기업 추이	164
〈그림 4-5〉 미얀마의 중소기업의 가내수공업 및 산업별 구성	171
〈그림 5-1〉 2002~2014년 중소기업 ODA의 변화	193
〈그림 5-2〉 2002~2014년 대륙별 중소기업 ODA 수원액 비중의 변화	196
〈그림 5-3〉 2002~2014년 미국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변화	208
〈그림 5-4〉 2002~2014년 EU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변화	231

글상자 차례

〈글상자 3-1〉 민간부문개발(PSD)을 위한 도전기금(Challenge Funds)의 역할과 활동	118
--	-----

요약

이 보고서는 2015년 9월 UN이 채택한 SDGs 2030을 달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ODA의 의의 및 동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등장에 따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중소기업 ODA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MDGs와는 달리, SDGs는 과거 UN현장에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정부와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띠며, 인류가 공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조건을 제시한다. SDGs는 빈곤퇴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stakeholders)들의 의식적인 공동노력을 통해서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SDGs는 특히 중소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의 모형을 모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서로 연결되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SDGs의 의의와 중소기업의 역할)에서는 SDGs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ODA의 의의를 재조명한 후 새로운 전개 양상을 전망한다. SDGs의 제안이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형태들은 한국이 그간 익숙하게 해 온 전통적인 개도국의 중소기업육성 ODA 정책에 대해 많은 개선의 여지를 시사해 준다.

우선 17개로 구성되는 SDGs는 169개의 이행목표(Targets)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지속가능개발이라는 하나의 대주제로 수렴·통합된다. 중소기업 ODA가 추구하는 목표는 직접적으로 ‘경제적 번영’에 있으나 넓게는 ‘인간 존엄성’, ‘지구환경보존’, ‘인간중심사회’ 및 ‘정의(正義)’ 등과 같은 다른 기본요소를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 즉, 중소기업 개발협력은 빈곤퇴치, 양성평등, 자원보존 및 환경보호, 사회통합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절 및 제3절은 SDGs 시대에 들어서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민간 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이하 PSD) 및 포용성장(Inclusive Growth)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다. 선진공여국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를 보면 이들 요소가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의 중소기업 ODA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세계 공통적으로 국내에서 기업의 수는 물론 고용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개도국 내에서는 노동집약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부가가치생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SDGs가 추구하는 제일 기본적인 목표 중 하나인 포용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PSD와 포용성장은 서로 시너지를 실현한다. 개도국이 자립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빈곤층 친화적(Bottom of Pyramid, BOP)인 민간시장부문을 육성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의 형성과 발전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포용성장의 취지는 여성, 빈곤층 및 청년을 비롯한 소외계층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생산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데 있다.

제3장(개도국 중소기업의 위상과 중소기업 개발협력의 내용)에서는 개도국 내 중소기업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와 함께 SDGs시대에 개발협력이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 검토한다.

제1절~제3절은 한국의 중소기업 ODA정책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중소기업을 왜,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분석한다.

이 보고서는 ODA 대상기업의 기준으로 네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째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용증대와 함께 다수의 빈곤층을 포함하는 포용성장 그리고 동시에 PSD를 취지로 하는 기업을 들고 있다. 둘째, 대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 셋째, 산업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및 넷째,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편입할 수 있는 기업 등은 첫째 기준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개도국 내에서는 비공식부문의 중소기업 및 미소기업이 GDP(부가가치)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또 비공식부문의 공식부문으로의 편입을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OECD/DAC 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개도국의 미소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의 내용과 형태를 정리하고 있다. 우선 기업경영환경개선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로

서 수원국 내 규제, 공정성, 소유권, 계약제도, 세제 등 전반적인 경제 개혁의 추진이 요구된다. 다음, 직접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역량구축을 통한 경쟁력강화가 강조되며, 공여국의 범분야적인(cross-cutting) 지원전략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예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중소기업지원제도 및 집행역량제고, 비즈니스 개발서비스(BDS)의 강화, 인적자원개발 및 인프라 투자확충 등이다.

그 밖에도 수원국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으로의 편입이 요구되며, 이러한 개발협력은 수원국 내 PSD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여국의 개발협력은 정책 일관성(PCD)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 본문의 <표 3-4>는 중요 선진공여국 및 국제개발기구의 PSD를 위한 중소기업 ODA의 구체적인 사례를 종합하고 있다.

제4장(개도국에서의 중소기업 현황과 육성정책)에서는 아세안 8개국(10개국 중 싱가포르 및 브루나이 제외) 내 중소기업의 위상,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의 중요한 협력국가들인 이들에 대한 개발지원은 파리선언의 원조일치(alignment)원칙에 따라 수원국의 제도 및 개발정책과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발협력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 국가들은 중소기업의 기준을 각각 달리하기 때문에, 금융지원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중소기업의 정의 자체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보다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이 국가들이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떤 중점 제조업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필요한 개발협력이 무엇인가를 추출하는 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들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 같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

한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장기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금융접근성의 확대를 위한 개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국별로는 산업화의 진전정도에 따라 부문별로 역량강화에 대한 개발협력에도 비중을 둔다. 예로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는 미얀마, 라오스 및 캄보디아 등에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2016년부터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진전함에 따라 역내 분업이 촉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 ODA분야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국이 구체적으로 대상부문을 선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우위부문에 집중하는 한편, 선진공여국의 중소기업 ODA지원부문과 AEC에 의한 역내분업전망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제5장(주요 선진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중소기업 개발협력)에서는 파리선언의 원조조화(harmonization)원칙을 고려하고, 동시에 한국의 중소기업 ODA 제공에 있어서 참고하기 위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ODA정책의 동향 및 지원 분야를 검토한다.

2002~2014년간 총 산업분야 ODA에서 중소기업 ODA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11%에서 꾸준히 확대되어 2011년 57%에서 정점을 기록했으며 그 후 4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제1의 공여국은 일본(25%)이며 미국(15%)이 다음을 잇고 그 외 독일, 영국 및 이탈리아 등의 순위이다. 한국의 경우는 19위로서 미미한 비중(11백만 달러)을 차지한다.

국제기구의 지원규모를 비교하면 EU가 최대 공여(67.6%)기구이며,

세은그룹(WB Group), 아시아개발은행(As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및 유엔개발계획(UNDP) 등의 순위이다.

한편, 국별 중소기업 ODA 수원규모에 있어서는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대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아프리카대륙 및 아메리카대륙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아직까지는 개발협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동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요인은 무엇보다도 빈곤감소, 생산 및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미소 및 중소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PSD의 확대가 개도국의 자립경제의 달성에 있어서 기본요소라는 점도 작용한다.

이 보고서의 본문 <표 5-28>은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공여주체들이 PSD육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ODA정책이 비중을 두고 있는 분야를 포괄적으로 정리한다. 앞에서 소개한 <표 3-4>는 구체적인 지원조치(measures)인 데 비하여 이 표는 포용성장, 빈곤감소, 고용증대, 거버넌스개선 및 녹색성장 등과 같이 PSD 지원의 목표 아래서 중소기업 개발협력이 중점을 두고 있는 대상 분야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두 표는 서로 연결된다.

거의 모든 공여주체들은 투자여건의 개선과 생산역량강화 중에서 사업 환경의 조성, 기업발전 및 가치사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이외 일부 주체를 제외하면 인프라 건설, 금융서비스개발 및 무역정책 등을 위한 협력에 치중하고 있다.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파리선언에 따라 공여주체들 사이에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개발협력의 대상

부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로 일본은 전자, 기계 및 자동차 등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누리고 있는 제조업부문에 치중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기계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및 기술이전에 비중을 둔다. 영국의 경우에는 금융접근성 제고, 환경보호 및 투자환경개선을 지원해 준다.

제6장(한국의 중소기업 개발협력 현황)에서는 이제껏 한국이 제공한 중소기업 ODA의 내용을 분석한다. OECD/DAC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2006~2014년간 연도별로 DAC회원국 중소기업 ODA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간 0.1~0.4%(0.4백만~2.1백만 달러) 사이에 위치하며, 그 규모는 매년 불규칙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중소기업 ODA를 제공하는 담당기관은 EDCF 및 KOICA이며, 2012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소규모의 ODA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 지원하는 대상 국가는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외에 소규모이기는 하나 아프리카, 중남미 및 중동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 ODA 사업 내용을 보면 초청연수, 봉사자 및 전문가파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정책자문 등과 같이 주로 인적교류나 지식공유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 산업기술연구센터나 교육기관 건립사업 등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한국이 비교우위를 누리는 산업연구개발 역량강화나 무역 역량강화와 같은 순수한 중소기업 ODA사업의 경우는 극히 제한되었으며, 또 그 내용도 실제로는 정책자문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때, SDGs의 취지에 따라 PSD를 내용으로 하는 포용성장을 추구하는 중소기업 ODA정책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정책기조의 수립과 함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설계부터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SDGs의 중소기업 ODA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국제적인 중소기업 ODA의 추세 및 한국의 중소기업 ODA정책의 경험 등을 고려한 제7장(SDGs와 한국의 중소기업 개발협력 정책방향)은 총 결론에 해당하며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절에서 SDGs가 한국의 중소기업 ODA정책에 주는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 후, 제2절에서는 이들을 반영하여 SDGs달성을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중소기업 ODA 사업의 방향을 제시한다.

제1절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 ODA정책에서 기본적으로 SDGs 17개 목표의 통합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직접적으로는 SDGs(8-9)가 열거하고 있듯이 PSD를 통해서 포용성장, 일자리 창출, 산업화 및 인프라개발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 PSD는 이제 개도국 내 빈곤추방,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서민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여성고용, 환경친화적 (녹색)성장, 소득증대 등을 대변하는 대명사와도 같이 사용된다. 이를 실현하는 주체는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 ODA는 이러한 다분야목표에 기여해야 한다.

아울러 제1절 (3)은 중소기업 ODA의 수행방식의 개선을 제안한다. 예로 가능한 한 중간매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원국 내 실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 PSD의 취지에 기여하는 PPP방식 또는 최근 선진공여국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도전기금(Challenge)의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제2절은 제1절의 내용을 한국의 중소기업 ODA정책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완하고 있다.

우선 제1절에 이어 제2절 (1)은 이제껏 초청연수나 봉사자파견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인적교류에서 벗어나 SDGs의 취지에 맞는 다년간 사업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2)는 한국 ODA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자주 강조되듯이 정책일관성(PCD)을 위해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정책과 상치되는 대내외 경제·사회정책을 지양하는 한편, 환경정책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은 기존 중소기업 ODA정책을 개선하고 원조의 효과성제고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역량강화를 취지로 하는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인적교류 및 지식 공유사업이 실제로 중소기업육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대안으로 사업 간 연계 및 패키지화, 정책자문의 수원국 중소기업 정책과의 일치성 확충, 초청연수와 파견사업의 내실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 밖에 중소기업 ODA 수행방식의 개선을 위해 현장중심의 사업 수행방식의 확충 및 민간기업의 최대한 활용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 이제껏 G2G방식의 ODA정책에 익숙해 왔으나 PSD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SDGs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 ODA를 위해서는 그 특성상 경제적인 요소 이외에도 의료, 보건, 교육, 양성평등 등과 같은 사회개발적 요소도 동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범분야적 전략(cross-cutting strategy)이 요구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에 MDGs가 종료함에 따라 향후 15년간 국제개발협력의 지향해야 할 목표로 SDGs가 채택되었다. SDGs는 MDGs에서 미흡했던 점이 보완되어 17개 목표가 설정되었는데, MDGs에 비해 목표가 매우 포괄적이다. 새로이 채택된 SDGs에서는 MDGs에서 추구한 빈곤 퇴치, 교육, 양성평등 등 기존의 목표와 더불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개발과 함께 경제개발 및 환경보호가 중요한 목표의 축으로 구성되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MDGs가 사회개발에 집중한 반면, SDGs에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새로운 목표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SDGs의 채택에 따른 향후 국제개발전략의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나라 ODA 정책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SDGs의 17대 목표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등

이 명시적인 목표로 채택됨에 따라 산업 ODA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미 2010년 이후 시작되었다. 2010년 서울 G20에서 채택한 서울개발컨센서스에서 개도국 빈곤퇴치에 경제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이 SDGs의 채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에 대한 개도국의 개발협력 수요가 상당하며, 한국은 앞으로 주도적으로 산업 분야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SDGs에서는 경제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MDGs에서 성과가 미흡했던 최빈국의 개발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도국의 중소기업 육성이 SDGs 이행을 위한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래 전부터 개도국에서의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에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나, 중소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종류가 다양하여 개발협력을 통해서 지원해야 할 중소기업과 이를 위한 접근법에 대해서는 논의도 부족했고 체계도 정립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OECD 등 국제기구들은 SDGs가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관련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에는 미소기업을 포함하는 민간 부문개발 논의도 포함된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의 산업발전과정에서 개발초기에는 경공업이 성장의 중심이 되었는데, 경공업은 중소기업이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며, 이 산업에서 성장한 중소기업이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며 경제전반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게 된다. 비록 각

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정의는 국가마다 차이가 나고 각국의 중소기업이 처한 환경도 다르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경험은 개도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수립, 정책의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많은 중소기업정책 수단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개도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도국의 적합한 중소기업 ODA 사업을 개발한다면 개도국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여지가 많다.

중소기업 분야 ODA는 2012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수행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한국형 ODA 모델 수립연구에서 유망한 사업분야로 선정된 바 있으나, 기존의 한국의 중소기업 관련 ODA 사업은 선진공여국에 비해 규모나 건수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또한 이미 수행한 중소기업 ODA도 초청연수, 전문가 및 봉사자 파견이 다수이며, 이것도 국가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방식으로 단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개도국의 중소기업의 생산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SDGs의 기본취지에 부합하고 개도국의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소기업 ODA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SDGs의 기본취지에 부응하는 대상으로서 중소기업은 어떠한 기업이 되어야 하는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구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중소기업 ODA 분야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에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SDGs 하에서의 중소기업 ODA의 역할 및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정리한다. 특히 UN과 OECD를 중심으로 한 주요 국제기구들의 SDGs와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고, 개도국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정의와 위상에 대해 알아보고 개발협력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중소기업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이와 함께 개도국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산업분야 중소기업 지원의 중점 국가가 될 수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중소기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을 정리하였다. 이들 국가는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한 곳으로서, 중소기업 ODA는 개도국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진공여국과 국제기구의 중소기업 ODA의 현황을 알아보고 한국의 중소기업 ODA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찾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의 기존 중소기업 관련 ODA 사업실적을 조망하고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중소기업 ODA 방향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SDGs에서 채택한 목표를 중심으로 SDGs의 비전과 전략 및 SDGs의 체계와 특징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SDGs에서는 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중시하고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민간부문개발(PSD : Private sector development)로서의 중소기업 육성 측면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SDGs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육성 방향과 이를 위한 국제협력의 이행방향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상반된 두 관점이 점차 수렴하는 점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 ODA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개도국에서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정의되며 중소기업 부문이 국가경제와 고용창출에 대해 기여하는 정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 ODA의 대상이 될 만한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인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중소기업 ODA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4장에서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각국의 중소기업의 현황과 육성정책을 전반적으로 개괄하여 보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8개국에 대해 각국의 중소기업의 위상, 중소기업 발전전략, 당면한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제5장에서는 주요 선진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중소기업 개발협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북구 공여국 등 중소기업 ODA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국가의 중소기업 ODA 현황을 알아보았다. 우선 OECD DAC의 원조통계에서 중소기업 육성 사업으로 명기된 사업의 규모 및 동향을 알아보고, 각국별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온 분야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EU, 세계은행, ADB, IDB, AfDB, UNDP 등 주요 국제기구의 중소기업 관련 사업을 간략히 조망하여 보았다.

제6장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 ODA 현황을 OECD DAC 자료와 함

게 한국의 주요 원조기관이 수행한 중소기업 관련 ODA 사업내용을 정리하고 한국의 중소기업 ODA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제7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SDGs체제 하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개발협력의 방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살펴본 SDGs의 비전과 전략이 한국의 중소기업 ODA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SDGs의 기본취지가 시사하는 점과 선진국의 중소기업 ODA에서 배울 만한 교훈을 기초로 한국의 중소기업 ODA의 방향을 도출하여 보았다.

제2장

SDGs의 의의와 중소기업의 역할

제2장에서는 SDGs의 의의와 SDGs 달성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SDGs의 기본철학과 이행목표(Targets)를 분석·정리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알아보기로 하자.

SDGs는 여러 측면에서 MDGs와는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도 SDGs는 과거 UN헌장에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정부와 민간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띠며, 인류가 공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한다. 또 SDGs가 제안하는 전 부문에 걸친 다양한 목표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를 이룬다.

SDGs는 단순한 정치적인 선언이나 정책제안의 차원을 넘어서 각국이 지켜야 할 일종의 행동준칙(Code of Conduct)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할 단계별 프로그램과 이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개발협력

도 SDGs가 개발협력의 근간이 되는 국제적 흐름을 최대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제1절에서는 SDGs의 취지와 내용을 정리한다. 제2절에서는 국제 개발협력 사회에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다. 제3절에서는 개도국 발전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간략히 살펴보고, 나아가 포용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SDGs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자세히 검토한다.

1. SDGs의 취지와 중요 내용

(1) SDGs의 비전 및 취지

1) SDGs의 채택과정

UN 총회는 2015년 9월 만장일치로 SDGs¹⁾를 채택하였다. MDGs시한이 2015년에 종료됨에 따라 그 후속을 위해서 UN은 2012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SDGs를 준비하여 왔다. 이와 같이 SDGs는 MDGs를 잇는다는 의의를 갖기도 하지만, 이에 더하여 그간 추진해 온 국제 개발협력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국제여건의 변화 및 인류가 나아가야 할 장기방향의 제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개발연대를 추구하기 위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인간개발과 사회발전을 중요목표로 출범한 MDGs-2015의 업

1) UN SDGs는 SDGs-2030 또는 Post MDGs-2015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나 이 보고서에서는 SDGs로 통일한다.

적을 보면 무엇보다도 빈곤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8~9억 인구가 1일 1.90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별로 그리고 각국 내에서는 아직도 사회계층 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UN 2015b).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은 빈곤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에 크게 미흡하다.

UN이 SDGs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두 개의 보고서가 그 기초를 제공하였다.²⁾ 하나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이래 20년 만에 소집된 UN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 : 리우+20)는 MDGs를 중심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이 그간 이룩한 업적을 되돌아보는 한편, 현존하는 빈곤상황 및 국제적 빈부격차에서 비롯되는 향후의 과제를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보존,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자원개발, 생물다양성 보호 및 에너지 사용을 비롯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그 밖에도 사회개발, 인구 및 교통과 같이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주제들이 폭넓게 등장하였다(UN, 2012).

다른 하나는 UN사무총장이 주재한 소위 UN 고위급패널(High Level Panel)보고서로서, 빈곤퇴치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통해서 경제체질을 전반적으로 전환하고 인류의 삶을 바꾸자는 과감한 제안을 담고 있다. 불평등의 해소에서부터 환경보호, 분쟁 및 폭력의 근절, 적절한 거버넌스, 포용성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인류가 지속가능한 조건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전달하고 있다(UN, 2013).

2) SDGs의 채택과정에 대해서는 김세원 외(2015a), p.54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요약한다.

UN 공개작업그룹(UN Open Working Group)은 주로 이 두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그간 다양한 차원의 논의 및 제안을 참고하여 2014년에 다음에 소개하는 SDGs의 17개 일반목표(Goals)와 169개의 이행목표(Targets)를 확정하였다. 논의가 광범위한 주제를 대상으로 걸쳐 진행되었으나 UN은 이들을 다시 정리하여 포괄적이고도 핵심적인 주제인 불평등해소, 경제성장, 좋은 일자리, 도시 및 인간주거, 공업화, 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평화, 정의 및 제도 등으로 종합하였다.³⁾

2) SDGs의 비전과 전략

UN 공개작업그룹이 준비한 이 종합보고서는 SDGs의 기본취지를 담고 있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 목표로서 6대 기본요소(Essential elements)를 제시한다.⁴⁾ SDGs의 17개 목표는 이들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6대 기본요소의 내용은 (1) 존엄성 : 빈곤의 종식 및 불평등 해소, (2) 인간중심 : 건강한 삶, 지식,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포용성 확립, (3) 번영 : 견고한, 포용적인 그리고 전환적 경제의 육성, (4) 지구환경 : 모든 사회와 후손을 위한 생태계 보호, (5) 정의 :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및 견실한 제도의 확립 및 (6) 파트너십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차원의 유대축진 등으로 요약된다. 이 내용들은 UN총회가 2015년 9월에 채택한 ‘우리 세계의 전환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

3) UN(2014), p.13 이하.

4) 동, p.20 이하.

다'의 서문이기도 하다.⁵⁾

인류공존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Goals)가 뒤따르고 있는데, 6개의 기본요소별로 이들 17개의 목표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이와 함께 목표별로 이를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목표(Targets)의 수가 169개에 달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본 보고서의 주제인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협력과는 <목표 8>, <목표 9> 및 <목표 17>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들 목표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행목표의 내용을 아래에서 별도로 소개한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MDGs가 제시한 8개 목표들이 SDGs의 17개 목표들 중 일부와 중복되거나 혹은 이행목표의 일부로 삽입됨으로써 MDGs 거의 전부가 SDGs에 포함된다. 이는 과거와 미래의 목표들이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말한다.

한마디로 SDGs는 인류의 공존은 물론 번영이라는 시각에서 우리 모두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인간개발이나 사회발전을 따로 떼어내어 독립적으로 이룩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된다. 예로 만약에 수원국이 선진공여국의 협력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빈곤상태를 개선했다 하더라도 이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상태가 지속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논리를 연장, 확대한다면 결국 SDGs의 취지대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간 단편적으로 제기되어 온 모든 관련 분야별

5) Transformation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표 2-1〉 SDGs의 기본요소와 관련 목표

기본요소	SDGs의 달성목표
존엄성	목표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7)
	목표 2. 기아해소, 식량 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8)
	목표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시정(10)
번영	목표 8. 모두에게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12)
	목표 9. 견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8)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확보(11)
지구 환경	목표 7. 모두에게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 제공(5)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 도시 및 주거여건 조성(10)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 시행(5)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10)
	목표 15. 육상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활용도모,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방지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12)
인간 중심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및 복지(웰빙) 보장(12)
	목표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10)
	목표 5. 성 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9)
	목표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이용 가능한 환경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8)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 도시 및 주거여건 조성(10)
정의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추구,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및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12)
파트너십	목표 1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19)

자료 : UN(2014), p.20 이하를 필자가 종합·정리.

주 : () 안은 목표별 구체적인 이행목표(Targets) 수.

위기의식을 종합하여 어떻게 하면 지속적이고도 포용적인 사회를 이룩할 것인가를 포괄하게 된다. 이와 같이 SDGs는 최상위 개념인 인류의 가치에서 시작하여 목표를 거쳐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개념인 이행목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이상에서 17개 목표를 가치와 연결하여 정리해 보았는데 이를 다시 ‘지속가능성’이라는 시각에서 정리해 보면 그간 자주 제기되어 온 경제, 사회 및 환경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인간의 중요한 가치인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한편 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가 그 기반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빈곤추방 및 기아해소를 종식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다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대다수 구성원이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적절하게 소비할 수 있으며, 사회활동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건강유지를 비롯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로 국내에서 기회, 성별, 권능, 계층별 소득 및 부 등에서 격차가 크거나 불평등이 지속된다면 사회적인 불만이 쌓이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각국이 처한 여건에 따라 이러한 불평등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조건의 개선을 비롯한 환경보호 및 보존의 과제는 그간 꾸준히 관심을 모았으면서도 MDGs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주제이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2012년의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UNCSD)에서의 논의와 그 결과 채택된 보고서(‘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SDGs의 목표를 선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

다. 그 결과로 SDGs에서는 분야별로 가장 많은 5개의 목표가 지구환경과 관련을 갖는다.

1972년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가 예견하였듯이 이미 우리는 기후변화나 토지, 수질 및 대기오염이 가져오는 폐해를 실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환경여건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경제·사회활동은 환경조건에 기초하고 있으며, SDGs는 다른 목표들이 개도국의 개발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선진국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들의 의식적인 공동노력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볼 때 SDGs는 경제성장, 사회통합 및 환경보호 사이의 통합적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동시에 상호 시너지효과를 지향하고 있

〈표 2-2〉 SDGs의 분야별 목표

분야별	SDGs의 관련 목표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	목표 1 : 빈곤퇴치, 목표 2 : 기아해소
사회발전	목표 3 : 보건증진, 목표 4 : 교육보장, 목표 5 : 성 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목표 10 : 불평등 해소, 목표 16 :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확립
환경 보호 및 사회생활	- 환경 목표 7 : 에너지, 목표 13 : 기후변화대응, 목표 14 : 해양자원 보호, 목표 15 : 육상생태계, 목표 16 : 육상생태계 보호 - 사회 목표 6 : 물과 위생, 목표 11 : 도시여건, 목표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경제성장	목표 8 : 경제성장과 일자리, 목표 9 : 인프라와 산업화
글로벌 파트너십	목표 17 :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자료 : 〈표 2-1〉에서 재정리.

다. 17개 목표는 다음에서도 보듯이 서로 불가분(indivisible)의 통합을 이룬다. 또 여기서 제시된 과제들은 특정국가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 전 인류가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공존, 공영을 목표로 의식적이고도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SDGs의 17개 목표를 분야별로 다시 간단히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2) SDGs의 체계 및 특징 : 보편성 및 실천성, 통합성, 일관성

이상에서 소개한 내용을 종합해서 SDGs의 특성을 정리하면 보편성, 실천성, 통합성 및 일관성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보편성 및 실천성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SDGs는 인류의 가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6대 기본요소)에서 시작하여 현실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17대 목표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구체적으로 실현을 위한 169개 이행목표를 제시한다. SDGs는 UN헌장의 채택 이후 전 인류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최초로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주제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새로운 지평과 함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행목표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SDGs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뚝뚝으로써 모든 주체들의 동참을 요구한다. 또 국가 간 상이한 현실과 여건 그리고 능력, 발전 정도, 국가정책 및 개발우선부문은 물론 개도국의 개발수요 등의 요소를 반

영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SDGs는 UN헌장 및 UN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를 비롯한 중요 국제회의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들과는 달리 단순한 정치적 선언에 머무르지 않으며, 현실적인 실천방법을 예정하고 있다. 즉, 행동 지향적(action-oriented)인 측면을 보여준다.

가장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환경보호와 관련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목표 12>)이다. 모든 국가들이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관리의 효율적인 사용, 폐기물 처리 등을 비롯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 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그 대상은 선진국 및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정부에 해당하며 또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조가 요청된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SDGs는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체제 및 제도에서는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산업화 및 인프라 구축 등 소위 세계 ‘번영’을 지향하기 위한 국제협력(<목표 8> 및 <목표 9>)에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도국 정부·기업 자체의 노력과 함께 선진공여국이 지원을 제공하는 원칙 및 방향도 제안하고 있다. 거의 모든 개도국이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 내 영세·중소기업육성을 중심으로 한 민간기업의 육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력은 SDGs의 추구에 있어서 수요자 및 공급자를 전제로 하는 민간부문(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특히 이와 같이 SDGs가 보편성에 기반을 두면서도 동시에 실천적인 측면을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 절에서도 보듯이 SDGs의

17개 목표이다. UN은 앞으로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개발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과 함께 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2) 통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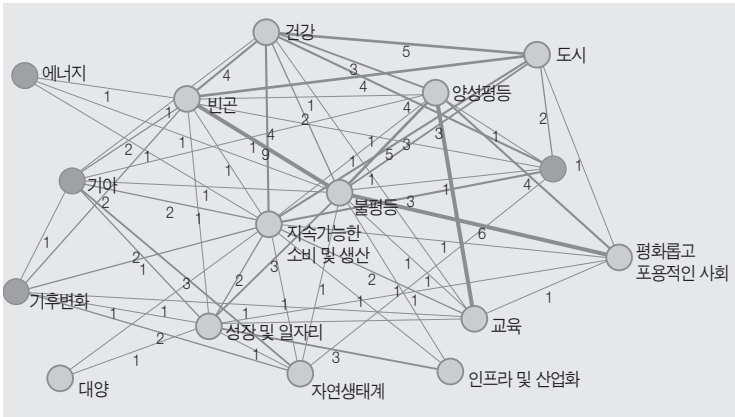
앞에서 SDGs가 가치(6대 기본요소)를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얼핏 보아서 성격이 다른 목표들 사이에 분산된 느낌을 주지만, SDGs는 17개 목표의 매트릭스에서 다시 169개 이행목표들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서로 연계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SDGs는 이들 전체를 통합하여 복잡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대형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통합적이고도 일관성을 유지함은 물론 목표들 상호 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UN DESA의 작업에 따르면 그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세부적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이 보고서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을 다음 <그림 2-1>에서 간단히 요약한다.⁶⁾

우선 ‘성장 및 일자리(<목표 8>)’를 중심으로 한다면 가장 근접한 목표인 ‘인프라 및 산업화(<목표 9>)’와 1인당 지속적인 경제성장(이행 목표 8.1), 산업의 다변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8.2) 및 개발 지향적 정책(8.3) 등을 통해서 일관성을 이룬다. 이 <목표 8>은 생산·소비에서의 효율적 자원사용(8.4) 및 생산성 향상(8.2)이라는 이행목표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목표 12>)과도 연계된다. 이 목표는 또 남녀 간, 장애인 및 청년 등의 생산적 고용 및 양질의 일자

6) Le Blanc(2015), p.3 이하.

〈그림 2-1〉 SDGs 매트릭스의 통합체계(예시)



자료 : Le Blanc(2015), p.5.

주 : 지도에서 목표(Goals)들 사이에 표시된 수치는 이들 간 연결시켜주는 이행목표(Targets)의 개수를 표시함. 예로 성장 및 일자리를 중심으로 보면 3개를 통해 인프라 및 산업화와 그리고 기후변화와는 1개를 통해서 각각 연결되고 있음.

리 증진 및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8.5), 실업청년에 대한 고용, 교육 등의 증진(8.6) 그리고 이주노동 및 여성을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8.8) 등을 통해서 불평등 해소(목표 10)와 그 맥을 같이한다.⁷⁾

이러한 논리를 다른 목표에도 연장 적용한다면 상호 직, 간접적으로 연결됨으로써 SDGs가 총체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형성하면서 6개의 기본요소로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DGs는 이와 같이 통합성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실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즉 최근에 발표한 한 보고에 의하면(UN, 2016a), 우선

7) SDGs의 이행목표(targets)에 대해서는 UN(2016)을 참조. 목표 8과 9에 대해서는 〈표 2-3〉을 참조.

적으로 실천이 요구되는 목표들을 선정함으로써 다른 목표들과 연관 효과가 큰 핵심 분야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접근은 전략적이고도 우선적인 목표에 비중을 뒀으로써 그 과급을 통해 동시에 다른 목표들의 실현에 도움을 주자는 일종의 ‘거점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UN이 SDGs의 출발과 함께 서둘러 설정한 제1순위의 기본과제는 어디까지나 빈곤퇴치(목표 1)이다. ‘낙오자가 없는 사회(No one is left behind)’는 MDGs가 남긴 과제이며 앞에서 보았듯이 인류의 ‘존엄성’과 ‘번영’을 추구하는 첫 단계이기도 하다. ‘누가 낙오자인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추려낼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적인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가?’ 등을 과학적으로 실증적인 방법에 의해 구체화함으로써 SDGs의 이행에 한발 다가설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SDGs의 통합적 특성에 따라 다른 관련 목표들의 추진에 긍정적인 과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⁸⁾

이 밖에도 이 보고서는 인프라건설-불평등시정-복원력구축, 과학·기술향상 및 SDGs를 위한 포용적 제도의 구축 등 총체적으로 시급하게 떠오르는 4개 주제에 대한 세부적인 부문들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⁹⁾ UN은 이러한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SDGs들 사이에 통합적인 연관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행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하고 나갈 전망이다.

뒤이어 UN이 발표한 보고서는 입수 가능한 최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17개 각 목표들과 관련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현재 상황

8) UN(2016a), p.11 이하.

9) 같은 자료, p.129 이하, Annex.

간의 갭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15년간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들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명시하고 있다. 빈곤퇴치(〈목표 1〉)의 예를 든다면 이 보고서는 1일 최저생계비기준을 1.90달러로 할 때 2012년 세계 인구의 13%가 여기에 해당하는 반면에 개도국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15%에 달한다(선진국의 경우 0.1%). 이 보고서는 빈곤퇴치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인 대안으로 개도국 내에서 사회적 보조 및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 보호’를 취지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¹⁰⁾

3) 일관성

한편, 이러한 이상적 네트워크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려면 각국이 SDGs에서 제시한 목표의 취지를 살려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인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SDGs는 이행수단의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목표 17〉)의 추구를 위한 이행수단으로 안정적 거시경제안정(17.13) 및 지속가능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이하 PCD)의 제고(17.14)를 규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SDGs가 법적으로는 비록 권고의 성격을 띠고는 있으나 UN 회원국들의 만장일치의 합의에 의하여 채택된 이상 개도국을 포함하는 각국이 이 목표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충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정책을 채택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10) UN(2016b), pp.12-13.

구체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을 조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회원국들에게 제안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OECD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선진공여국의 국별 ODA정책의 효과성(effectiveness) 및 효율성(efficiency)의 제고를 취지로 회원국 내에서는 물론 회원국 간 정책의 일관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개발정책과 원조 외의 분야, 예를 들면 조세, 무역, 농업, 식량안보, 교육, 환경, 기후변화, 교육, 과학기술 및 이민 등의 정책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 간 서로 장애를 가져오거나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이 정책들 사이에 오히려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원조를 통한 개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¹¹⁾

OECD는 MDGs 기간 중에 회원국들에 대해 PCD의 실행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SDGs의 준비과정에서 정부, 국제기구, 기업계 및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토론을 거쳐 꾸준히 그 내용을 보완하였다.¹²⁾ SDGs에 이르러서는 PCD가 이행목표의 하나로 채택됨에 따라 그 범위가 MDGs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 사회 및 환경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PCD는 목표의 범위가 크게 증가하여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이하 PCSD)’으로 확대되었으며, OECD는 여기에 맞추어 관련 정책들 사이의 조정을 통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복잡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PCSD는 SDGs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우선 각국 내 관련된 정책들 간 조정을 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가들 간 관련정책들이 서

11) 이와 관련한 OECD 자료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산업연구원(KIET) 보고서에서도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김세원 외(2015a), p.74 이하.

12) OECD(2016a), p.4.

로 상충되지 않고 보완을 이루면서 동시에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회원국들에게 제안한다.

하나의 예로 물(<목표 6>), 에너지(<목표 7>) 및 식량(<목표 2>)을 든다면, 농업부문개선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대량의 물이 필요하지만 물과 식량의 생산에는 에너지의 적절한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식량생산과 공급 사이에 얽힌 사슬(chain)은 대량의 에너지 소비를 매개로 진행된다. 이러한 예는 이 세 부문에 대한 정책이 식량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서로 보완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¹³⁾

이와 동시에 PCSD는 환경평가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 조세 및 무역정책 등과 같이 관련정책들은 물론 국제적인 정책협력과정에서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OECD는 PCSD에 관한 제안을 전담하는 국제기구이며, 그 권고사항은 한국의 ODA정책에도 많은 교훈을 준다. 우선 국내에서 그간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유상 및 무상원조 간 통합이 정리됨으로써 분절화(fragmentation)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그러나 ODA정책의 기조와 대상 수원국별로 종합적인 지역별, 분야별 이행체제의 확립과 같이 하나의 통합된 정책체계를 이루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상이한 분야들 사이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협력 정책들을 포함하는 PCD의 도입에 의한 ODA정책의 재조정도 요구된다.

이러한 국내에서의 조정단계를 거친 후에 이를 배경으로 국제적인 차

13) OECD(2016b), p.15 이하.

원에서도 분업과 PCSD를 위한 정책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SDGs체제 하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은 목표 8의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DGs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살펴보기 전에 다음 절에서는 개도국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우선 살펴보기로 하자.

2. 국제사회의 중소기업 개발협력 동향과 주요 논의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빈곤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개발협력분야의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하여 수립된 MDGs가 사회개발에 편중되어 교육과 보건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의 관심이 집중된 것에 대한 반향으로 2000년대에 들어 오며 개도국내의 빈곤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빈곤퇴치와 이를 이끌고 나갈 주역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SDGs에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하나의 목표로 명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개도국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그간의 논의와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1) 중소기업과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개도국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의 공여방식이 공여국이나 공여기관이 개발협력에서의 개도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직접적으로 개도국의 시장이나 빈곤층의 경제활동에 개입하여 top-down 방식의 시장요소를 시혜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 원조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향을 이끌어 낸 Moyo(2009)에서 예로 든 아프리카에 대한 모기장 제공 원조에서 잘 드러난다. 아프리카의 주요 질병인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기장은 기존에 지역의 모기장 제조업자들이 제공하고 있었으나, 개발협력활동을 통하여 해외에서 생산된 모기장이 지급됨에 따라 기존의 모기장 제조업자의 시장이 구축되게 된다. 모기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하고 찢어지게 되어 지속적으로 모기장의 공급이 요구되지만 원조가 중단되면 역내의 모기장 제조산업이 쇠퇴하여 과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개도국에서 해당 중소기업의 성장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의 치유없이 현상에 대한 대증적인 원조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미 1990년대 말부터 국제개발협력 사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2000년대에 들어오며 개발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오며 Prahalad(2004)는 빈곤층의 경제활동을 통한 빈곤퇴치를 강조하며 빈곤층에 친화적인 시장개발이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켰다.¹⁴⁾ Para-

14) Prahalad(2004)의 서명 “The Fortun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Eradicating Poverty through Profits”에서 알 수 있듯이 빈곤층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시장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이윤추구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halad는 경영학자로서 생산활동과 가치창출에 있어서 소비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개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빈곤층을 시장에 참여하여 생산하고 소비하는 능동적인 경제주체로 보아야지 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수동적 원조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빈곤층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시각을 변화시키면 다국적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시장으로 인식되며, 다국적기업들은 이들에게 적합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주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기존의 수혜적 원조와는 달리 기업의 사회적책임 하에서 이윤추구와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통하여 빈곤층의 경제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2005년 UNDP의 inclusive business 이니셔티브, 2004년 OECD/DAC(2004)의 민간부문개발을 통한 빈곤친화적 성장논의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는 민간부문개발(PSD : Private Sector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원조분야로 형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핵심은 빈곤층이 시장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여건의 조성과 이를 통한 창업활동의 유도에 있다.¹⁵⁾

이러한 PSD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공여국과 공여기관에서 개도국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부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1979년에 발족된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공여국 위원회(DCED : 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로 PSD에 대한 정보교환에 적극적이며, 현재 22개

15) PSD의 접근 방식으로는 비즈니스 환경조성, 빈곤층 참여가치사슬 개발, 비즈니스 개발 서비스 제공, 빈곤층을 위한 시장조성, 여성의 창업 활성화, 지역경제 개발, 민관협력, 금융접근성 제고, 빈곤층을 위한 산업 및 혁신 정책 등 다양한 방식을 포괄한다.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Private_sector_development, URL 검색일 : 2016.7.7) 참조.

국제기구와 공여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¹⁶⁾ DCED는 개도국 시장구조, 산업정책, 가치사슬 개발, 비즈니스 개발 서비스, 비즈니스 환경 조성, 여성 창업, 지역경제개발 등 개도국의 민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모범사례 공유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DCED에 가입한 국가의 명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PSD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한 공여국으로 네덜란드 등 북유럽 공여국과 영국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영국(DFID(2009)), 스위스(Springfield Centre(2008)), 스웨덴(SIDA(2003)) 공여기관의 보고서에 나타난다.¹⁷⁾ 이들의 사업이 주로 추진된 개도국으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국가들이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연합(EU)에서도 PSD를 개발협력의 독립적인 분야로 간주하고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¹⁸⁾

이와 함께 PSD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2000년에 결성된 UN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이다. 이는 UN이 주도한 기업의 지속

16) 회원은 ITC, IFC, ILO, FAO, OECD, UNIDO 등 국제기구와 UE,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일본, 영국, 덴마크, 독일,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등 공여국, 기업으로는 마스터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7) 이들 기관의 보고서는 DFID(2008), Prosperity for all : Making Markets Work, London; Springfield Centre(2008), A Synthesis of the Making Markets Work for the Poor Approach', Bern :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ctober 2008;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2003), Making Markets Work for the Poor : Challenges to Sida's Support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Stockholm, October 2003이다.

18) 각 공여기관은 홈페이지에 PSD를 하나의 분야로 구성하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AfDB(<http://www.afdb.org/en/topics-and-sectors/sectors/private-sector/> URL 검색일 : 2016.7.7 이하 동일), ADB(<http://www.adb.org/documents/private-sector-development-revised-strategic-framework>), EU(http://ec.europa.eu/europeaid/sectors/economic-growth/private-sector-development_en) 등의 홈페이지 참조.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글로벌 컴팩트에는 다수의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170개국 13,000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한 기업은 이 네트워크가 제정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에 대해 10가지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⁹⁾ 이를 통하여 기업들은 기업활동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모범사례를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파하기도 한다. 10개 원칙은 지금까지 기업이 개도국에서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개도국의 기득권층과의 결탁을 통하여 개도국의 부패를 심화시키거나, 선진국에서 통하지 않는 노동이나 환경문제를 수반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정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원칙은 직접적으로 PSD나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과 관련이 없으나, 선진 다국적기업의 건전한 기업활동과 사회적 책임의 완수는 개도국의 기업환경이나 제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10개 원칙 중 고용조건의 개선이나 환경친화적 기술의 전파 등은 앞으로 SDGs와 조화되는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과 관계가 깊다.²⁰⁾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은 자금, 기술, 네트워크에서 개도국의 기업환경을 바꿀 능력이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하여 개도국의 중소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PSD와 함께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개도국의 중소기업의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졌다. OECD는 중소기업 관련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였는데, 2004년 두 번째

19) UN 글로벌 컴팩트 홈페이지의 안내페이지(<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 URL 검색일: 2016.7.8) 참조.

20) 환경과 관련된 8번째 원칙은 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회의에서 포용적 세계화를 지향하는 글로벌 경제에서의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 육성문제를 다루었다. 이 회담의 결과는 OECD(2004)로 정리되었는데, 개도국에서 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고용과 소득창출의 주요 동력으로 인정하고 개도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범분야적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여기에서는 중소기업 발전요건으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무역과 투자를 통한 글로벌 경제 참여, 재정과 통화의 안정성, 개도국 중소기업 역량과 시장개척을 위한 정책일관성과 원조효과성의 제고를 제시하였다.

(2) 민간부문개발과 중소기업 육성의 효과에 대한 논의

이러한 민간부문개발과 중소기업 발전이 개도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개발협력이나 육성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특히, 빈곤계층에 집중된 PSD를 위한 개발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빠르게 고조되었으나 이것의 실제 효과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일어났다.

Wharmholz(2007)는 실제로 빈곤층(Bottom of Pyramid)이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하루 수입 2달러 미만의 빈곤층의 경우 1,410억 달러 정도로 생각만큼 크지 않으며, 실제로 PSD에서 논의한 정도로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정의가 기존의 빈곤층 정의보다 커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Prahalad(2004)가 빈곤층 시장여건 조성의 중요한 전략으로 주장한 다국적기업과 개도국 빈곤층의 윈-윈 전략의 실질적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Hubbard and Duggan(2009)은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이루어진 거액의 공적자금원조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경제발전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것에 원인이 있으며, 개도국의 산업발전이나 역량구축이 없는 원조와 지원은 빈곤퇴치에 실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부흥에 기여한 마셜원조는 이들 국가의 산업인프라와 산업복원에 투자를 집중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적원조도 효과가 지속될 수 없는 수혜적 원조의 나열보다는 개도국의 민간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빈곤층의 소비활동과 이를 둘러싼 미소영세 자영업에 편중하는 PSD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세계은행은 2000년대에 들어오며 중소기업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개도국의 중소기업의 현황, 중소기업 육성의 경제적 효과, 정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 세계의 중소기업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Ayyagari et al.(2005), Beck et al.(2005) 등의 보고서로 나타났다.

Ayyagari et al.(2005)은 전 세계의 중소기업 실태,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고용과 생산에 대한 국가별 자료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의 전체 규모, 중소기업 정책과 중소기업 성장의 관련성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보고서는 제조 중소기업의 GDP와 고용에 대한 기여도는 고소득국가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저소득국가에서 비공식부문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고소득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이나 고용 비중이 높은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나 경직적인 노동 혹은 기업관련 규제보다는 경쟁적 경영환경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소득이 높아짐

에 따라 비공식부문이 감소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증가가 높아지는 예상할 수 있는 구조변화를 통계적으로 밝힌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빈곤층 중심의 PSD를 넘어서는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의 발전이 저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 가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Beck et al.(2005)는 중소기업 성장과 경제성장의 관련성, 중소기업 성장과 빈곤퇴치와의 관련성에 대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중소기업 성장과 경제성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으나 중소기업 성장이 반드시 빈곤퇴치로 연결된다는 실증결과를 발견하기 힘들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미소영세기업을 넘어서 역량구축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르는 대규모 빈곤층 감소로 인해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이를 위한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다수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며, 생산의 국제화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에 따라 무역과 투자를 통한 개도국 중소기업 발전, 이와 함께 개도국의 중소기업의 수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OECD/DAC의 분류에서도 독립적인 항목으로 분류되는 무역에 대한 원조(Aid for Trade)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WTO와 OECD가 2013년 무역원조의 핵심사항으로서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를 들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즉 개도국에 대한 무역원조를 가치사슬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 개도국의 민간과 공공 부문의 전략, 전략의 우선순위, 프로그램 구성을 선정하는 데 긴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회의를 요약한 보고서(WTO·OECD(2013a,

Interconnected Economies))에서는 무역원조의 핵심은 개도국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접근하는 데 저해가 되는 제약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WTO와 OECD는 무역원조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역관련 제도정비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민간부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WTO·OECD(2013b, Aid for Trade in Action)). 여기에서는 무역관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출촉진 프로그램, 민간부문개발, 여성의 무역참여 촉진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5가지 사업범주로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2010년 G20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G20 개발 의제인 서울 개발컨센서스에서 개발협력의 6개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개발협력의 성장집중,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의 강화, 글로벌 및 지역적 제도적 이슈에 대한 우선대처, 개발협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기존의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개발협력 노력의 보완성과 비교우위분야 집중, 성과지향 개발협력 등이다. 특히 개발협력의 성장집중과 개발협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가 중시됨으로써 개발협력을 통하여 개도국의 산업발전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제 개발협력의 무게 중심이 과거의 원조중심에서 시장지향적 경제협력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조는 2015년에 post-MDGs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SDGs)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SDGs에서는 MDGs와는 달리 17개의 포괄적인 목표가 채택되었는데, 이 중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인프라와 산업화 및 혁신이 8번째와 9번째 목표로 채택되었다. 이들 2개 목표에는 20개의 세부목표가 선정되었는데, 이 중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세부목표는 <표 2-3>과 같다. 세부목표 8-3에서 생

산적인 활동과 양질의 일자리, 창업과 혁신이 가능한 경제개발 지향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함께 이를 실현할 중소기업의 육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를 위한 관련 산업, 기업의 역량 구축, 기업활동의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세부목표가 제시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2000년대 들어오며 개발협력에서의 개도국의 자생적인 활동역량을 강조하며 개도국 내부에서의 개발 동력의 발견이 중시되었다. 이는 빈곤퇴치를 위한 빈곤층을 위한 시장형성과 영세기업 활동을 발전시키는 PSD가 하나의 원조분야로 정착되게 하였으며, 이와 함께 점차 개도국의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하여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표인 빈곤퇴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SDGs의 목표로 채택됨으로써 개도국 개발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공유가 형성되었다.

3. SDGs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소기업 육성 방향²¹⁾

(1) 개도국의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기대되는 중소기업의 역할

일반론적으로 개도국의 발전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은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의 수나 고용측면에서 다수를 차지하

21) 개도국 내에서는 미소기업(micro-enterprise)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이들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또 이 보고서에서는 ‘미소기업’과 ‘영세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이 대부분 소규모 기업이므로 중소기업의 성장은 개도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개도국의 영세서비스업에서의 소규모기업 활동은 빈곤층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둘째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경쟁적이고 창업기업이 많아서,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다. 이는 동태적으로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더욱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의 중소기업의 역할에서 자주 지적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 전체 고용에서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지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20% 정도 기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Haltiwanger et al., 2013).

이상을 고려할 때, 개도국 발전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은 고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소기업은 고용비중에 있어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일자리 창출에서 기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에서의 소규모 기업은 다수의 빈곤층을 소비자나 고용자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개도국의 빈곤층의 생계와 생활 수준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다수의 개도국에서는 대기업은 주로 천연자원 채굴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이며, 개도국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관련된 생산 활동의 대부분이 통용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볼 때 중소기업이다.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와 함께 다국적 기업이 개도국에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또는 개도국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등 개도국에서의 대기업은 해외투자기업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국적 대기업에 대응하여 국내 생산활동을 영위할 주역이 바로 중소기업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도국의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SDGs의 달성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에서는 SDGs의 핵심 취지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추구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2) SDGs의 포용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

1) 포용성장의 의미

SDGs의 특징의 하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목표와 병행하여 추구한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면 포용성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본요소의 하나이다(〈표 2-1〉 참조). 그간 학술적으로는 불평등이나 빈곤이 생산성 및 성장에 기여하는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으나 이제 UN이 공식적으로 이 전략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중소기업이 개도국의 성장전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육성의 방향에서도 이러한 포용성장의 취지가 담겨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선진국의 경우에도 포용성장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

고 있다.²²⁾

한 예로 국제개발협력을 관장하는 선진국 클럽인 OECD는 지난 2016년 6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제고(Enhancing Productivity for Inclusive Growth)’라는 주제로 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²³⁾ 그 취지는 그간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노동 및 금융부문 등의 개혁을 통해서 생산성제고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그 목표를 포용성장의 추구에 둔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경제·사회부문 내 불평등을 제거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포용성장을 이룩한다는 전제 아래 이들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보고서도 출간되었다.²⁴⁾

OECD의 입장은 SDGs의 추진과 관련하여 선진국 내 장기적인 저성장-저고용의 함정으로 인해 최근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경제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제성장추세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자본, 금융 및 과학·기술협력이 활력을 띠고, 결국 개도국의 포용성장의 추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각은 ‘효율성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주류경제학과는 총체적으로 그 접근방법을 달리한다. 1980년대 영미(英美)를

22) 포용성장이라는 개념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개발이론에 관한 관심이 고조될 당시에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로 논의된 적이 있다. 국제적으로 빈곤퇴치의 과제가 강조되기 시작한 이후 최근에는 분배중립적인 성장(distributive-neutral growth)보다는 재분배적 성장전략이 빈곤의 감소를 유도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성장의 한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것은 MDGs가 채택되면서부터이다. What is Inclusive Growth, UNDP(IPC)(2013).

23) OECD(2016e).

24) OECD(2016d).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특히 부 및 소득 격차의 심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따랐다. 또 그 후 2008년 금융·경제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1% 대 99%’ 추세의 고착화경향은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자아냈다. 이에 더하여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저고용-소득격차의 확대는 포용성장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도 작용한 것으로도 보인다.

물론 포용성장은 아직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개념은 아니며, 현실적으로는 ‘광의의 경제부문에 기반한 성장(broad-based growth)’, ‘공유성장(shared growth)’ 또는 ‘친 빈곤 성장(pro-poor growth)’ 등과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같은 포용성장 목표를 추구하더라도 구체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각국이 처한 고유한 여건에 따라 방법이나 내용 등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추구하는 기본철학은 같아도 정책의 운영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우선 포용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이를 종합한다면 총체적으로 ‘인구의 많은 계층이 생산에 참여하는 기회를 창출하고 그 산출에 따르는 이득을 최대한 많은 사회계층이 공유하는 성장전략’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포용성장의 주 관심이 소득과 부에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수단이 불평등의 확대를 시정하는데 있다. 그렇지만 그 목표가 단순히 사회구성원 간 소득수준의 개선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보다는 다면적(multidimensional)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출물 및 생산과정에서의 참여와 그 결과물에 대한 이익 공유(benefit-sharing)의 원칙을 동시에 병행해서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포용성장은 단순히 화폐뿐만 아니라 비화폐적 조건도 대상으

로 한다.²⁵⁾

이와 같이 포용성장의 취지는 단지 시혜적인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으며, 고용확대뿐만 아니라 생산적 고용을 통한 생산성제고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 그 대상도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함으로써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고자 한다.

예로 교육증진 및 직업교육의 강화, 청년실업의 해소, 성 평등의 실현이나 보건·의료와 같은 사회적 보호차원의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서 현재 유희상태에 있지만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생산자원의 활용은 국가 전체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온다.

따라서 포용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이들 이행목표는 불평등해소(목표 10)와도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생산과정에 대한 참여기회의 불평등은 전반적인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성장에 대한 제약요소가 될 수 있다. SDGs는 사회적으로는 물론 개개인 차원에서의 기회 불평등을 제거함으로써 일자리 보장을 통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이며, 이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2) 포용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개도국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

이상에서 논의한 포용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해당한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일자리 문제와 이와 함께 악화되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개도국은 개

25) 포용성장을 소개하는 문헌은 많다. 그 중에서 이 보고서는 OEC(2016d), UNDP(2013), World Bank(2009) 및 World Economic Forum(2015) 등을 참고하였다.

도국 경제구조의 특징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SDGs가 추구하는 포용성장에서 중시되는 두 가지 문제, 개도국에 있어서 비공식부문 및 노동취약계층의 문제, 그리고 환경과 자원고갈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 내 중소기업의 두드러진 특징은 종사자가 대부분 최빈곤층을 형성하며 가내수공업, 대기업에 대한 소규모 하청기업, 행상, 영세 가족농업 등이 중소기업의 주류를 이루며, 현대식 생산이나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는 크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도국에 있어서 기업 수는 절대적으로 많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최빈국에 있어서는 취업자 수나 GDP에의 기여에 있어서 공식부문보다는 비공식부문, 즉 지하경제(shadow economy)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부문은 공식적인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이들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매우 열악한 생산환경과 낮은 생산성으로 다수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전 세계 노동인구의 28%가 1일 1.90달러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2015년에 이르러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이 비중은 10%에 달함으로써 소위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해소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이 중 15~20세 사이의 젊은 ‘일하는 빈곤층’은 이 평균치보다 높아 비중이 16%에 이르고 있다. 2015년 기준 ‘일하는 빈곤층’에 있어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노동인구의 1/3)나 남아시아(18%)의 경우는 심각한 수

준에 이르고 있다.²⁶⁾ 이렇게 볼 때, 개도국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소기업의 생산성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목표 5>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평등(gender equality) 및 여성의 권능향상은 여성에 대한 일자리제공이나 대우개선의 필요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개도국 내 여성노동인력의 대부분은 지하경제에 속하는 영세자영업에서 활동하며, 공식적인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또 개도국 내에서는 여성은 대부분 무보수로 힘든 가사돌보기와 남성작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 시간의 거의 20%를 힘든 작업이나 가사를 돌보는 데 할애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동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수는 요원한 실정이다.²⁷⁾ 이러한 노동에 있어서의 성평등 문제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과제이면서도 개도국의 사회개발의 후진성에 기인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이와 같이 개도국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 두 부분(공식적인 부문 및 비공식부문)의 분리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제도적 개혁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이 공식부문으로 전환됨으로써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불평등 기회의 시정과 함께 과학·기술증진, 교육기회의 확대 및 직업훈련 강화와 같이 전반적인 사회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좀 더 높은 부가가치 생산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해야만 취약계층의 소득이 향상된다.²⁸⁾ 이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개도국 내 또 다른 문제는 환경과 자원고갈이다. 이에 대한 대응

26) UN(2016b), p.13.

27) 같은 자료, p.21.

28) OECD(2004), p.11 이하.

이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절약적인 생산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며 여기에서도 중소기업의 역할이 기대된다.

한 예로 1인당 자원사용량에 있어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2000~2010년간 17.5M/T에서 15.3 M/T로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사용량은 오히려 72% 증가함으로써 8.9M/T로 확대되었다.²⁹⁾ 그 이유는 일부 개도국들(특히 동아시아)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자원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유해화학폐기물 처리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정(1989), 로테르담협정(1998) 및 스톡홀름 협정(2001) 그리고 최근의 파리기후변화협정(2015) 등은 개도국들도 지켜야 하는 국제규범이며,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적용된다. 앞으로 개도국들이 자원절약적인 생산방식을 도입·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진공여국들과의 R&D 및 기술혁신 부문에서의 협력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친화적 기술의 도입과 협력의 핵심적인 주체는 개도국의 정부와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이다.

3) SDGs의 이행목표에서 비추어 본 중소기업의 역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개도국 국가경제에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SDGs의 추구과정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담당할 위치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다음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봤지만 중소기업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GDP

29) UN(2016b), p.35.

에 대한 기여율은 60%를 상회하며 총체적으로 총 노동인구의 최소한 70% 이상을 흡수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그 특성인 유연성과 같은 이점으로 인해 신규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개도국 내 영세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은 총 기업수의 97~98%까지 차지함으로써 SDGs의 성공적인 달성은 이들의 활동 여하에 달렸다고도 할 수 있다.³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SDGs가 중소기업의 역할을 별도로 언급하는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목표 8>과 <목표 9>의 달성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음 <표 2-3>에서도 보듯이 <목표 8> 및 <목표 9>의 일부 이행목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언급되고 있다. <이행목표 8.3>에서는

<표 2-3> SDGs의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인프라 건설 및 산업화 목표

목표(Goal)	이행목표(Target)
목표 8 : 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8.1 지속적인 개인당 소득 증가, 최빈국은 최소한 연평균 GDP 상승률 7%
	8.2 (산업)다변화, 기술향상 및 혁신을 통한 경제 생산성 제고
	8.3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개발지향적 정책의 증진,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
	8.4.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소비 및 생산과정에서 글로벌 차원의 자원효율성 개선, 선진국의 주도에 의한 10개년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프로그램의 수행

(계속)

30)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비중은 국가에 따라 그리고 중소기업의 정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중소기업의 정의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정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각국의 경제·사회정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정의는 2003년 EU가 도입한 개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각각 중기업(종사원 250인 이상, 자산규모 43백만 유로 이상), 소기업(50인 이상, 자산 10백만 유로 이상) 및 미소기업(10인 이상, 자산규모 2백만 유로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OECD도 이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EU, 2014).

목표(Goal)	이행목표(Target)
목표 8 : 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8.5 젊은이 및 장애인을 포함하는 모든 남녀에 대한 일자리 보장, 동일한 가치에 대한 동일 임금적용
	8.6 2020년까지 젊은이의 실업감소,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 기회의 대폭개선
	8.7 강제노동, 현대판 노예, 아동노동 및 인신매매의 종식
	8.8 모든 노동자(이주노동 포함)의 권리 및 근로조건의 보호
	8.9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및 지방문화(상품 포함)의 증진
	8.10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금융 제도의 역량강화
	8.a 개도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 지원체제의 강화
	8.b 젊은이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의 발전, ILO의 글로벌 일자리 협약의 이행
목표 9 : 복원력 있는 인프라 건설, 포용적, 그리고 지속적 산업화, 혁신의 촉진	9.1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경제개발 및 인간후생을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그리고 복원력 있는 인프라(지역, 접경지역포함) 개발
	9.2 2030년까지 고용 및 GDP에서 포용적, 지속적 산업화가 차지하는 비중의 대폭 확대, 최빈국의 경우에는 2배 확대
	9.3 개도국 내 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활용 가능한 신용을 포함하는 금융서비스 접근의 확대 및 가치사슬(및 시장)에로의 통합
	9.4 자원사용의 효율화, 환경기술 및 산업공정을 통해 인프라 및 장비산업을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격상
	9.5 혁신과 인구 1백만 당 연구·개발근로자, 공공·민간 연구·개발지출의 확대를 통한 과학연구 증진 및 기술능력의 제고
	9.a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최빈국에 대한 금융, 기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원조를 통해 전반적인 개도국 내 지속가능하고도 복원력 있는 인프라 개발지원
	9.b 개도국 내 산업다변화 및 1차산품의 부가가치증진 등과 같이 정책유도여건의 조성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이 실현되도록 지원
	9.c 2020년까지 최빈국 내 ICT(정보통신기술)접근. 인터넷에 보편적 그리고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접속

자료 : UN(2015b), p. 16 이하를 정리.

주 : 밑줄 부분은 중소기업육성 관련 언급.

중소기업 육성을 지향하는 정책의 추진과 미소·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가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행목표 9.3>에서는 이들 미소·중소기업의 가치사슬에의 참여, 즉 시장접근성의 확대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기반을 이루며 실제로 생산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SDGs가 추구하는 포용·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창출, 산업화의 추진, 혁신 및 인프라건설 등을 실현하는 주역으로 중소기업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표는 중소기업의 개발방향과 개발지원 내용을 총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동력(engine)으로서의 중소기업개발을 위해서는 기술·과학혁신의 촉진을 통한 생산성제고가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최대의 과제는 금융서비스 활용의 확대이며 기업가 정신의 확산과 같은 인적자원의 육성도 요구된다. 또 개도국 내 개발정책의 수행에서 당면하고 있는 도로, 항만 및 철도 등과 같은 인프라 시설의 미비는 식량 및 물 부족을 비롯한 빈곤상황의 탈피로부터 농업의 현대화 및 제조업의 육성을 비롯한 산업화의 추진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저해요인으로 등장한다. <목표 9>는 지속가능하고도 복원력 있는 인프라의 개발을 기본적인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개도국 내 산업구조면에서 가장 취약한 측면 중 하나는 특정 1차산품의 생산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과 같은 산유국의 원유 그리고 중남미나 서부아프리카지역의 열대성 산물과 같은 1, 2개의 제한된 1차산품이 수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들 개도국 내에서는 1차산업의 고부가치화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가 절실하게 요청된다(<목표 9, b>).

이와 같이 <목표 8> 및 <목표 9>는 우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3) SDGs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방향

SDGs는 어떻게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인가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1차적으로 개도국 자신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아래 민간 기업이 실제로 이 과제를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원, 인력 및 기술과 같은 개발자원이 부족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공여국의 개발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 목표들의 취지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선-개도국 간 개발협력의 추진방법을 제시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SDGs는 169개의 이행목표를 통해서 각각 연결됨으로써 총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면서 목표들 간 상호 일관되게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개도국 내 중소기업의 육성과정에서 이러한 일관된 목표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SDGs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 8> 및 <목표 9>에 따른 중소기업의 활동방향은 다른 관련 목표들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꾸어 말하면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은 SDGs라는 총체적인 테두리를 준수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예를 들면, 먼저 중소기업은 무엇보다도 <목표 1> 및 <목표 2>에서 제시된 빈곤퇴치 및 기아종식(zero hunger)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는 SDGs가 추구하는 포용성장의 가장 중요한 취지이기도 하다. 이 목

표를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의 다변화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의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목표 8>에도 나와 있듯이 열악한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후생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MDGs의 채택 이후부터 많은 국가들은 제1의 목표인 빈곤퇴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UN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일정을 정해서 단계별로 그리고 목표별로 빈곤감축 달성정도, 교육제도의 보강, 여성의 지위향상, 질병퇴치 등에 관한 단계별성과를 측정해서 공개·발표하고 있다. 즉, 국가차원의 경제개발계획과 병행·연계하여 MDGs 달성정도에 관한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정책의 추진상황을 알리고 있다.³¹⁾

<표 2-3>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도국의 중소기업 육성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환경보존과 같은 원칙(<목표 6, 7, 11~15>)들을 충족시키는 테두리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 8> 역시 환경보존을 반영한 경제성장의 추구를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초기부터 지속가능한 개발전략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다각화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환경보존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한 예로 한국이 2011년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을 채택한 후에 이에 동조하여 OECD에

31) 대표적인 예로 동부아프리카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탄자니아는 '비전 2025'라는 장기 개발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5개년 개발계획(FYDP)과 함께 경제성장과 빈곤감축을 연계한 MKUKUTA(I 및 II)계획을 추진하였다. 김세원 외(2015), p.117 이하.

서도 개도국에 대한 정책제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개도국들은 한국의 경우를 하나의 모범사례로 활용하고 있다.³²⁾

이 밖에도 SDGs 중에서 중소기업의 육성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을 갖는 것은 <목표 10>에 의한 국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의 축소이다. <목표 8>을 위한 이행목표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이 원칙을 강조한다.

불평등 축소의 내용은 기회의 평등이나 차별대우의 철폐를 의미하며, 성별, 나이, 장애자, 종족, 계층, 종교에 따라 의도적으로 대우를 달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도국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취업의 기회 또는 직장에서의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SDGs, 특히 다음에 소개하는 포용성장의 취지에 어긋난다. 여성이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인 생산능력을 활용하고 나아가 국내 전반적인 생산성제고를 실현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4) SDGs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이행방향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재활성화

이제까지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국이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과 함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 및 부문들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32) 그 중의 하나의 예는 메콩유역 3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및 라오스)으로서 2012년 이후부터 매년 3개국이 공동으로 회원국별로 순회하면서 녹색성장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한국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친환경적 산업다각화 및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다. 에너지, 농업 및 관광 산업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내부자료.

MDGs 기간 동안에 이미 국제파트너십이 확대·강화되어 왔다. SDGs는 이를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그리고 UN관련 국제기구들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가용가능한 자원을 동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표 2-4>는 SDGs <목표 17>에 나와 있는 정책수단들을 소개한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SDGs의 이행수단은 크게 두 부분, 즉 금융

<표 2-4> SDGs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및 정책협력

금융지원	국내 조세 및 기타재정수입의 확대, 선진국의 ODA/GNI 0.7%의 이행, 개도국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원의 개발, 최빈국에 대한 ODA/GNI 0.2% 목표 확인, 과다한 채무개도국에 대한 구제, 조정 및 경감, 최빈국에 대한 투자확대 제도 도입
기술지원	북-남, 남-남 및 3각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제고, 개도국에 대한 친환경 기술 협력제공,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가동, 특히 ICT 활용 역량배양
역량강화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국가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효과지향적, 목표 지향지향적 역량강화 지원
무역지원	WTO 체제 내에서 도하라운드와 같은 국제무역협상에의 적극 참여, 최빈국의 국제무역비중 제고, 최빈국에 대한 무역특혜제공
제도의 확립	정책 및 제도적 일관성 : 정책조정과 정책일관성 제고를 통한 거시경제 안정,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일관성(PCD) 제고,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각국의 선도적 역할 존중
	이해당사자 파트너십 : SDGs 달성을 위해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 내 지식, 전문성, 기술 및 금융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층적 이해당사자들 간 파트너십의 증진, 경험 및 파트너십 전략에 기초한 효과적인 공공, 정부-민간 및 시민사회 협력의 증진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임성 : 2020년까지 최빈국 및 도서(島嶼)지역 소규모 개도국에 대한 경제지표별 신빙성 있는 데이터 수집·정리, 2030년까지 개도국 내 SDGs의 추진정도에 대한 기준 측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의 구축

자료 : UN(2015b).

협력과 정책·제도적 협력을 포함하는 역량강화로 나눌 수 있다.

금융협력부문은 2015년 SDGs가 채택되기 직전에 UN이 주최한 아디스아바바 행동어젠다(Action Agenda)가 핵심을 이룬다. 개발을 위한 금융협력과 관련하여 몬테레이합의(2002) 및 도하선언(2008)에 이어 개최된 제3차 국제회의에서 합의를 본 이 어젠다는 SDGs의 내용에 한 부분으로 포함되었다(UN(2015a)).

SDGs는 이미 지적했듯이 개발정책의 수행이 기본적으로 각 해당국의 정책당국에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그 국가의 국내 재원을 최대한 동원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원칙 아래 선진공여국은 이미 몬테레이합의에서 약속한 ODA/GNI 0.7%를 이행할 것과 특히 최빈국에 대해서는 이 비율을 0.2% 이상으로 제안하고 있다.³³⁾

이 어젠다는 특히 이전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에 비해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개도국 내 영세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그리고 다국적기업에 이르기까지 민간기업의 활동에 의한 투자 및 혁신이 포용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주역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창의력과 혁신적인 활동이 SDGs를 추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또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³⁴⁾

이러한 입장은 다음에서도 보듯이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시각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ODA와 같이 선진공여국의 개도국 내 정부·공공을 통한 원조제공에 더하여 민간기업의 활동을 매개로

33) 국제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DAC 회원국의 최근 ODA의 규모는 총체적으로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0.7% 기준을 충족시키는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및 룩셈부르크 등 전통적으로 ODA제공의 모범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유럽국가들에 한정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ODA/GNI 비율이 한때 0.15%까지 근접했으나 2015년에는 0.1%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34) UN(2015a), p.17 이하.

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추가하는 것이 협력의 규모 및 효과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또 현실적으로 국제협력의 방식도 개도국 내 전문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경로를 활용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이 개도국 내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에 실질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개도국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편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협력의 방향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아디스아바바 의제(Addis Ababa Agenda, 2015)는 이 외에도 국제개발지원을 위한 각국 내 및 국제재원의 개발 확대 방안, 국제협력 지원방식의 개선, 국제무역에의 편입을 통한 개도국의 개발촉진, 채무조정, 과학, 기술, 혁신 및 역량강화 등에 대한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협력가능한 분야와 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기술협력과 관련해서는 <표 2-4>에서도 보듯이 다자협력의 방법이나 수단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여기에 더하여 최빈국을 위한 별도의 기술은행이 설립될 예정이다. 주지하다시피 기술협력은 많은 경우에 역량강화와 병행하거나 그 일부로서 포함된다.

SDGs 취지를 반영하여 개도국에 대한 친환경적 기술지원이 강조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협력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제적으로 가장 관심이 큰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개도국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목적으로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 한국 송도)이 설립되었으며 이 기금은 매년 1,000억 달러의 자금 확보

를 목표로 한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UN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 21)에서 개도국들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보호는 이제 개발협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개도국 모두가 경제 개발계획의 추진에서 이 과제를 기본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공공·민간차원의 기후변화대응 개발원조의 규모는 2013년의 522억 달러에서 2014년 618억 달러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³⁵⁾

기술협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예의 하나로 특히 개도국에 대한 ICT(정보통신기술)부문의 협력(17.8)이 강조되고 있다. SDGs의 거의 전 목표의 추구를 위한 개발협력의 제공에 있어서 ICT협력의 제공이 중요한 수단으로 열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개도국 간 디지털격차의 해소는 다분야주제(cross-cutting issues)의 하나이기도 하다.³⁶⁾ 2014년 국제통신연맹(ITU)의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 p.14)는 ‘Connect 2020’ 의제를 채택하였다. Connect 2020은 1차적으로 2020년까지 성장, 포용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혁신 및 파트너십이라는 4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수단으로 개도국 내 인터넷 접근의 확대 및 브로드밴드의 설치·보강 등을 통해서 ICT 이용능력과 활용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결정하였다.³⁷⁾

35) OECD(2016b), p.11.

36) ITU와 WSIS는 SDGs 목표별 달성을 위한 ICT의 역할을 복잡한 매트릭스로 정리하고 있다. WSIS Forum(2015), p.4 이하.

37) Resolution 200 Busan, 2014(<http://www.itu.int/en/connect2020/PublishingImages/Pages/default/Connect-2020.pdf>(2016.7.29 검색),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개도국 내에서도 인구의 95%가 이동전화(mobile-cellular phone)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3세대(3G) 고속 이동브로드밴드 인터넷 접속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에 따라서는 그 이용률이 29%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 활동을 위한 브로드밴드시설의 보강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UN(2015b), p.29).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이 중요한 이행목표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데(17.14),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 제안은 모든 개도국은 물론 선진 공여국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앞에서 소개한 OECD의 정책 권고는 개도국에게도 적용된다.³⁸⁾

끝으로 SDGs의 이행을 위한 ‘후속 및 검토(follow-up and review)’ 항목에서는 모니터링과 평가(evaluation)를 비롯해서 철저한 실증(evidence)에 기초하여 SDGs의 이행상황이 모든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공개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³⁹⁾ UN은 MDGs 기간 중의 경험을 토대로 관련기관들과 SDGs 지표(indicators)의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그 내용은 더욱 과학적으로 정치(精緻)한 내용을 담을 것이다.

UN은 우선적으로 회원국들이 SDGs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별 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별로 그리고 글로벌(UN) 차원에서 후속조치(follow-up) 및 검토 작업이 뒤따를 예정이다.

(5) SDGs 관점에서의 민간부문개발(PSD)의 재해석과 역할⁴⁰⁾

1) PSD에 대한 상반된 두 접근법의 수렴

민간부문이 경제성장, 빈곤탈피, 일자리창출, 재화 및 서비스공급

38) 앞의 1, (2), 1).

39) UN(2015c), pp.27~28.

40) 민간부문개발(PSD)의 구체적인 운영메커니즘은 https://en.wikipedia.org/wiki/Private_sector_development(2016.9.12 검색) 참조.

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증진, 전문성장화 및 혁신의 추진 등을 통한 생산성제고를 이룩하는 동력(driver)의 주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 민간부문의 육성은 정부의 조세수입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재원의 형성에 기여하며, 간접적으로 보건 및 교육과 같은 인간·사회개발의 재정지원을 뒷받침한다.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개도국 내 민간부문개발을 실현하는가 하는 방법론이며, 크게는 두 가지 접근을 들 수 있다. 즉, 다 같이 개도국 내 빈곤의 해소를 위한 PSD에 목적을 두지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접근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⁴¹⁾

하나는 친 성장접근(Pro-Growth approach)으로서, 주로 신자유주의적(neo-liberal) 사고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개도국 내 투자환경(investment climate) 및 거시경제적 안정(macro-economic stability)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방과 자율에 기초한 제도의 확립 및 정책의 운영에 비중이 두어지며, 그 효과, 즉 민간부문의 개발과 빈곤 감소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접근은 특히 지방농업부문이나 비공식부문과 같은 낮은 생산성 및 흡수능력을 가진 비효율 민간부문에 대해 빈곤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오히려 경제 내 비효율을 증가시킨다는 단점을 부각시킨다.

다른 하나는 친 빈곤성장 접근(Pro-Poor Growth approach)으로서, 포용적 성장론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친 성장적 접근이 기대하듯이 설사 경제성장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빈곤층에 대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로 나타나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

41) 이와 관련된 문헌은 많으나 여기서는 이를 간략하게 정리한 같은 자료, p.8 이하를 소개한다.

할 뿐만 아니라 그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과거 IMF나 세계은행(WB)의 권고에 따라 이 접근을 받아들였던 많은 개도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개발의 성과가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 내 소득계층 간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⁴²⁾

따라서 이 접근에 의하면 빈곤층에 대한 시장개입과 함께 이 계층의 대다수가 종사하는 해당부문별 생산능력(productivity capacity)의 증대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빈곤층에 대한 시혜적인 일방적 지원정책의 제공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단기적인 혜택의 제공은 경제·사회 내 비효율을 누적시킨다. 그보다는 사회적 보호정책의 확대와 함께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보건서비스의 증진, 취업기회의 확대 등을 비롯해서 이들로 하여금 노동 잠재력을 활용하여 시장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비즈니스(inclusive business) 중심의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시장수요에 맞는 저가의 상품 및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접근이 용이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각국의 부존자원 상황을 반영하는 비교우위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가개발계획의 수행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민간부문의 개발이 자율적인 시장기능에 바탕을 둬으로써 보조금 지급이나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42) 대표적인 예로 신자유주의적 제안에 따라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추진하였던 일부 아프리카나 중남미국가들이 경제성장이나 산업화 측면에서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같은 자료, p.9.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유인적인 정책이 요구된다.⁴³⁾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포용성장론의 취지는 장기적으로 수원국 내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종식시키는 한편, 불평등을 제거하고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함으로써 외부의 원조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개도국 내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립하는 데 있다.

OECD는 이러한 접근에 따라 1990년대 이후 포용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민간부문의 개발을 추진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꾸준히 정책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 목적을 위해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주관아래 1998년에 공여국 전문가로 구성된 빈곤감소네트워크(POVNET)는 폭넓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작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 발간된 보고서는 개도국 내 기업가정신의 함양, 경쟁 및 혁신을 통한 생산성제고, 국제시장으로의 통합, 시장제도의 도입 및 빈곤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과 같이 민간부문의 육성을 통한 친 빈곤성장을 모색하고 있다(OECD(2006)).

이러한 지속적인 PSD에 대한 논의와 함께 MDGs가 진행되면서 ‘친 성장’ 및 ‘친 빈곤성장’이라는 상이한 두 접근은 현실적으로 포용성장을 위한 민간부문개발(PSD)이라는 목표로 점차 수렴되는 추세이다.

사실, 투자여건을 비롯한 제도 및 거시경제안정에 비중을 두는 전자(친 성장)와 특정 경제부문의 생산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후자(친 빈곤성장)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데 따라 서로 상반되기보다는 보완적인 측면을 갖는다.

43) 김세원 외(2015a)는 친 빈곤성장과 민간부문개발에 관한 최근 논의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p.96 이하.

개도국들이 실제로 PSD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도의 설립 및 경제정책운영방식의 도입이 요구되며, 외부로부터 자본, 기술 및 금융협력을 확보하려면 기업 활동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공공의 역할에 속하는 거시경제안정, 사업 분위기의 조성, 적절한 금융서비스의 제공, 건전한 노동시장, 인프라 건설 및 개방적 무역정책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외국투자유치 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위험 및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공공의 역할만으로는 일부 국가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실패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개도국에게는 빈곤해소를 취지로 하는 농업 및 제조업의 육성 등을 통한 산업다각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민간부문의 개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의 정착 역시 절실하게 요청된다. 따라서 개도국이 추진하는 경제전반의 질적 향상, 부문 내 및 지역 간 가치사슬의 개발 및 기업육성 등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부문별 생산역량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SDGs 달성을 위한 PSD의 역할 증대

SDGs의 추구는 그간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의 일익을 담당해 온 민간부문개발(이하 PSD)의 발전방향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SDGs(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60 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글로벌 이해당사자들

(global multi-stakeholder partnership) 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특히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 전문성, 기술 및 금융자원을 동원 및 공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SDGs는 투자 및 혁신의 주체인 민간기업 활동이 생산성, 포용적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의 핵심동력(major driver)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으로 구성되는 민간부문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혁신을 추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SDGs는 정부 및 국제기구의 공공 개발협력은 물론 시민사회기구 및 자선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구를 위해 개도국 내 민간부문의 육성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은 수원국 내 정부나 공공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수원주체는 중소기업이나 다국적기업에 대한 협력업체를 총망라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러한 PSD를 위한 지원의 취지와 협력의 방향은 해당 수원국과의 합의 아래 SDGs에서도 열거하고 있듯이 빈곤 퇴치는 물론 그 밖에도 환경친화적 산업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안보, 양질의 일자리창출, 여성, 젊은이 및 취약계층의 취업 등의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개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예외 없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민간부문의 개발은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적절한 제도의 설정이나 경제·사회정책의 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단순히 민간기업의 육성이나 시장경제의 활성화 자체에만 목적이 있지는 않으며, 이와 함께 포용경제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현실적으로 민간부문은 GDP에서 최소한 60% 이상을 차지하며 노동인구의 90% 내외를 흡수함으로써 경제개발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 PSD에 대한 공적 개발금융(ODF)의 규모는 2013년 960억 달러에 이르러 이 기간의 수원국 내 전 부문에 대한 ODF의 54%에 해당한다. OECD 추산에 따르면 SDGs 기간 중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PSD 투자부족액은 매년 평균 2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⁴⁴⁾

44) OECD(2016g), 이 금액은 PSD를 기준으로 SDGs 17개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총 투자부족액의 예측치이다. p.7.

제3장

개도국 중소기업의 위상과 중소기업 개발협력의 내용

본 장에서는 개도국에서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에서의 위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개발협력(ODA)의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제1절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위상을 알아보고, 제2절에서는 중소기업 개발협력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군의 특징을 알아본다. 제3절에서는 이러한 대상 중소기업 군별 중소기업 ODA의 역할을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ODA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제5절과 제6절에서는 SDGs 하에서 관심이 높아질 PSD 분야의 ODA 내용과 개도국 중소기업의 GVC 편입과 관련된 ODA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1. 중소기업의 범위와 위상

(1)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

이에 앞서 본 절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떠한 기업이며, 개도국에서의 중소기업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중소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기업이 중소기업인지를 정하는 범위는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이란 특정 규모의 기업에 대해 정책적 개입을 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잘못 내리면 정책의 효과성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국가마다 중소기업의 범위와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어떻게 보면 이는 당연하게 보일지도 모르는데, 다수의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규모에 따라 각국의 기업의 규모도 달라질 수가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논거가 기업의 규모가 작아서 금융접근성 등 경영환경에 있어서 대기업과 경쟁하기 힘든 시장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시장의 크기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의가 달라지기보다는 각국의 시장제도와 이에 따른 시장실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 ODA에 있어서도 부딪히는 문제이다. 산업 기반이 별로 없고 내수시장이 작은 저소득국의 경우에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비공식부문의 생계형 미소기업일 것이며, 이러한 국가에서는

선진국의 기준으로 볼 때는 중소기업이지만 이 국가의 시장환경에서 볼 때는 대기업의 지위를 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 이 국가에 대한 중소기업 ODA는 좁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국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국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나아가 주어진 한정된 정책자원을 가지고 다수의 중소기업을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본질적으로 국가발전 전략과 빈곤퇴치 전략에 부합하는 일군의 중소기업에 정책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ODA도 단순히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ODA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이란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빈곤층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이는 Prahalad의 다수의 빈곤층(Bottom of Pyramid)을 위한 PSD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업군이다.

둘째,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이는 한국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목표로 삼는 중소기업군이며, 특히 중상위 소득 수준의 개도국의 산업화 측면에서 중요한 중소기업군이 될 것이다.

셋째, 산업다각화를 위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중소기업. 이는 저소득이나 중하위 소득수준의 개도국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동력이 되는 중소기업군이다. 저소득국가의 경우 농업이 중심이며, 도시 비공식 분야의 서비스업에 영세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저소득국가에서 중소득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중소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발전단계를 거친 중

하위소득 수준의 개도국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을 위해 새로운 산업에서의 신생기업이 부상해야 한다.

넷째, 수출이나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결될 수 있는 중소기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인 시장의 확대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과 운송비용의 감소로 인하여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여 왔다. 또한 개도국으로 선진국의 대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이전하며 개도국의 산업발전을 촉발시켰다.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으나, 무역과 거래는 앞으로도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역이나 생산을 통하여 국제화를 지향하는 중소기업은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개도국의 상황과 개도국이 지향하는 발전 목표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이나 중소기업 ODA에서 고려해야 할 중소기업군은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군을 일반론적으로 정의하기는 힘들며, 중소기업 ODA 수행과정에서 국가별 시장 및 산업현황 분석과 국가의 전략을 고려하여 핵심 타깃 중소기업군을 선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제기구들은 국제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으로써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 금융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적 필요에 의해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각 기관은 종사자 수, 매출액, 자산 등을 기준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사자 수를 많은 기관이 사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범위에 있어서 세계은행이 타 기관에 비해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은 종사자 수 50인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하여 가장 좁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AfDB가 주 대상

으로 하는 아프리카의 낮은 소득수준과 저개발된 산업과 시장구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특징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중소기업을 각국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며 자체적인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⁴⁵⁾ 평균적으로 세계은행보다 경제규모가 큰 남미국가를 지원하는 IA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는 세계은행보다 더 좁은 범위에서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업 간 규모의 불균등성이 심한 남미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기준의 논거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기는 힘들다.

Gibson and Van der Vaart(2008)은 세계은행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 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좀 더 논리적이고 정책목표에 맞추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들은 이러한 국제개발은행의 일률적인 기준의 부적합성, 대출규모의 부적합성 등을 비판하였다. 특히 <표 3-1>에서 보듯이 세계은행의 중소기업 범위는 너무 넓고 대출규모가 너무 커서 개도국의 중소기업의 발전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구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ADB가 자체적으로 일률적인 중소기업 기준

<표 3-1> 주요 국제기구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단위 : 명, 달러

	종사자 수	매출	자산
World Bank	300	15,000,000	15,000,000
IADB	100	3,000,000	없음
AfDB	50	없음	없음
ADB	없음(각국의 정의에 따름)		
UNDP	200	없음	없음

자료 : Gibson and Van der Vaart(2008) p.5의 Table 1.

45) 동남아시아 개도국의 중소기업 정의에 대해서는 3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을 정의하지 않고 각국의 중소기업 기준을 따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각 국가의 중소기업 기준도 이 기준의 타당성의 논리를 발견하기 힘들다. <표 3-2>는 Gibson and Van der Vaart(2008)이 수집한 개도국 정부의 공식적인 중소기업 기준을 중소기업 범위의 크기 순과 일인당 소득수준 순으로 국가를 나열하여 본 것이다. 베트남은 과거 한국과 마찬가지로 종사자 300인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탄자니아의 20명, 이집트, 말라위, 파키스탄의 50명 기준과 대비된다. 특히 베트남보다 경제규모가 큰 태국, 브라질, 이집트 등과 비교해서 베트남의 중소기업 기준은 큰 편이다. 각국을 일인당 소득수준 순으로 나열해 각국의 발전정도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준을 살펴봐도 특별한 규칙을 찾아보기 힘들다.

<표 3-2>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국제비교

단위: 명

중소기업 범위 크기 순		일인당 소득수준 순	
Vietnam	300	Brazil	100
Moldova	250	Thailand	200
Morocco	200	Peru	200
Peru	200	Moldova	250
Thailand	200	Morocco	200
Bangladesh	100	Egypt	50
Brazil	100	Nicaragua	100
Ghana	100	Pakistan	50
Nicaragua	100	Vietnam	300
Egypt	50	Bangladesh	100
Malawi	50	Ghana	100
Pakistan	50	Tanzania	20
Tanzania	20	Malawi	50

자료: Gibson and Van der Vaart(2008) p.5의 Table 2를 저자가 재작성.

이상을 종합하면 중소기업 ODA에 있어서 국제기구나 개도국에서 정한 중소기업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경우에는 다수의 기업이 중소기업 정책 자원을 배정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공식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ODA사업에 있어서 중소기업 기준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 중소기업 ODA의 비금융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준이 중요하지도 않다. 다만 금융지원 프로젝트의 경우, 예를 들면 미소금융지원이나 중소기업 대출금융 지원 사업이 구상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제개발은행과 같이 일반적인 중소기업금융 프로그램보다는 특수 목적의 사업에 따른 필요에서 수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할 때, 중소기업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ODA 수행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ODA 프로그램에 부합한 기업군이 무엇인가를 도출하고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개도국의 중소기업 현황에 대한 일부 통계자료를 소개하고 중소기업 지원 논거에 맞추어 지원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2) 중소기업의 위상

개도국에서의 중소기업의 실태에 대해서는 국별로 파편적인 자료가 있지만, 각국의 자료를 통합하여 전 세계의 중소기업의 실태를 알

아본 연구는 별로 없다. 이에 대한 연구는 세계은행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Ayyagari et al.(2005)을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중소기업의 위상에 대해 알아보자.⁴⁶⁾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나고, 다수의 개도국에서 상당수의 미소기업은 비공식부문의 등록되지 않은 기업들이다. 또한 개도국의 기업통계도 미비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기는 힘들다. Ayyagari et al.(2005)은 2001년 세계은행이 개도국 경제성장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의 부족함을 느끼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⁴⁷⁾ 이 연구는 각국의 고용에서의 중소기업의 비중, 전체 부가가치 생산에서의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각국별로 다른 중소기업 기준의 통일이 가능한 국가에 한하여 종사자 수 250인 이하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이 기준에서 조사가 가능한 국가를 수집한 결과 54개국이 표본에 선정되었으며, 13개 저소득국, 24개 중소득국, 17개 고소득국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각국의 공식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범위의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할 때는 76개국(17개 저소득, 31개 중소득, 28개 고소득 국가)이 표본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는 각 국가별로 1990년대(1990~1999년) 평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Friedman et al.(2000)이 추정한 비공식부문의 고용비중과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표본 국가의 중

46) 제3장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의 중소기업 현황과 정책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47) 이에 대한 보고서는 The Challenge, World Bank Review of Small Business Activities, 2001이다.

소기업과 비공식부문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소득군별로 나누어 평균을 낸 것이 <표 3-3>이다.

보다시피 중소기업을 종사자 수 250인 이하로 통일한 34개 제조업 표본과 국가별 기준을 사용한 76개국 전체 고용자 수로 본 표본의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차이가 난다. 하지만 국가를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저소득국가에서 가장 낮고 고소득국가에서 가장 높다. 이는 저소득국가가 고소득국가로 발전하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고용이 증가해야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이 소득증가로 이어지는지 소득증가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로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중소기업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다. 하지만 <표 3-3>의 2열과 3열에서 중소기업의 고용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을 비교하여 볼 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중소득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⁴⁸⁾ 비공식부문의 고용은 저소득국가와

<표 3-3> 소득군별 중소기업의 위상

단위 : %

	중소기업의 제조업 고용비중 (종사자 수 250인 기준)	중소기업의 고용비중 (각국 정부의 공식기준)	GDP 대비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율 (각국 정부의 공식기준)	공식부문 종사자 수 대비 비공식부문 종사자 수 비율	GDP 대비 비공식부문 부가가치 비율
고소득국가	69.4	65.3	50.7	18.6	15.0
중소득국가	53.9	50.4	34.7	47.5	31.8
저소득국가	28.3	30.5	24.0	48.1	50.9

자료 : Ayyagari et al. (2005)의 국가별 자료(Table 1)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군별 국가의 평균치임.

48) 이는 3열의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율을 2열의 고용비중으로 나누어 보면 저소득국가와 고소득국가에 비해 중소득국가에서 낮은 편이다. 엄밀하지는 않지만 이 숫자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시사한다.

중소득국가 모두에서 공식부문의 종사자 수 대비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하지만 비공식부문의 부가가치는 저소득국가에서는 GDP 대비 50% 정도이지만 중소득국가에서는 30% 정도로 낮아진다. 이는 저소득국가에서 중소득국가로 발전하며 공식부문에서 대기업이 출현하고 대기업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 자료로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인지는 알기 힘들다. 최근의 경향을 고려한다면, 이는 저소득국가에 해외의 대기업의 투자와 함께 대기업이 출현하고, 해외투자기업의 생산증가와 함께 공식부문의 부가가치와 고용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도국의 중소기업의 고용이 증가하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낮으며, 비공식부문의 고용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제한된 통계를 종합하면, 경제의 발전과 함께 중소기업의 고용이나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고소득국가에 비해 개도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비공식부문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비공식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미소기업과 중소기업을 공식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공식부문은 시장과 제도가 발전한 국가에서는 규모가 클 수 없으며, 비공식부문의 기업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비공식부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공식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공식부문은 세제부담을 회피하기도 하나 다양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금융접근에 제약이 있어서 성장하기 힘들다. 둘째, 중소득국가에서는 저소득국가에 비해 비공식부문의 부가가치 비중

이 줄어들지만 이것이 공식부문의 고용증가에 기인한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와 함께 생산성증가도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중소기업 ODA 대상이 될 만한 기업군

앞의 국가 간 횡단면 자료를 고려하면 저소득국가가 고소득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또한 개도국에서 에너지나 광업을 제외하고는 역내의 대기업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해외투자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도국의 산업다각화와 산업발전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부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합리화하는가? 경제이론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항상 합리화되지는 않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금융지원, 행정지원, 시장보호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활용될 수 있으며, 정책수단별 효과의 차이가 다르며, 이러한 효과는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개도국의 대규모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1970년대에 높아졌다.⁴⁹⁾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에서 동태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실증 결과를 발견하지

49) Birch(1979)는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못하였다.⁵⁰⁾ 이는 Hatiwanger and Schul(1993)에서 치밀한 통계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시피 중소기업은 진입도 왕성하지만 동시에 퇴출도 왕성하기 때문에 고용의 순증을 장기적으로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⁵¹⁾ 특히 제조업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생산활동이 노동집약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⁵²⁾ 이는 개도국의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에 해외투자를 통한 대기업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노동의 질이나 노동규율도 대기업이 더욱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더욱 자본집약적 공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첫째, 개도국에 있어서 중소기업 ODA의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은 가능하면 고용창출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노동집약적 기업이 대상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개도국에서는 중소기업이 성장기회를 엿보는 기업주들이 다수가 있는 혁신분야이기보다는 소상공인에 의해 운영되는 비혁신분야인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 등 고소득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연구개발이나 혁신성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잠재력이나 의지에 있어서도 낮은 편이다. Schmitt-Degenhardt et al.(2002)은 엘살바도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도국에서 비공식부문의 다수의 미소기업과 중간규모 이상의 기업 사이의 중소기업의 성장부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성장에 따

50) 이러한 연구로는 Dunne et al.(1989), Leonard(1986), Brown et al.(1990) 등이 있다.

51) Biggs and Shah(1998)는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제조업에서 대기업이 고용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보였다.

52) Little et al.(1987)과 Snodgrass and Biggs(1996) 등은 동일 산업에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자본집약적임을 보고하고 있다.

르는 위험 부담을 회피하는 경향이 짙으며, 이에 따라 성장의지보다는 현실안주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산업이나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혁신 의지나 역량이 낮은 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진입과 탈퇴가 왕성하지만 개도국의 장기적인 고용증가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둘째, 개발협력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기업은 혁신의욕이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파급효과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이 주된 대상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개도국에 있어서 비교적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하게 되면 SDGs의 기본취지인 포용성장의 철학에 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적인 대상은 혁신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연구개발 역량을 경쟁력으로 가지는 소규모 창업기업은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 등 일부국가의 일부산업에서 활발하며, 이는 개도국에서는 보기 힘들다. 즉 선진국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정책으로 간주되는 연구개발 지원이나 혁신지원은 개도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셋째, 개도국에 있어서 ODA 대상이 될 만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이나 혁신 실적 등의 기준보다는 기존의 기술을 습득하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대신, 개도국에서 성장하는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혁신보다는 해외 투자와 연계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들이며, 이들 기업에서는

자체적인 연구개발보다는 해외의 기술이전이나 기술모방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기업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이들 기업은 해외기업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현지화하는 혁신과정이 활발하다(Pack and Westphal(1986)).⁵³⁾ UNCTAD(2011)은 제조업의 경우 개도국에서의 중소기업의 발전은 해외직접투자자와 어떻게 연결시키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해외투자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성공한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FDI에 우호적 경영환경의 조성, 이와 맞물린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이를 위한 FDI-중소기업 연관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ODA의 대상이 될 만한 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참여하여 가치사슬 상에서 기능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기업들이 될 것이다.

3.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본 중소기업 ODA역할

이상을 논의를 종합하면, 개도국에서의 중소기업 ODA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미소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미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수의 기업이 비공식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업의 공식화를 통하여 근대적인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과 미소기업의 차이점은 공식부문의 중소기업은 세금과 사회보장분담금 등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만, 정부에 등록되어 있으

53) Biggs et al.(1996)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수의 중소기업이 해외기술을 현지화하는 혁신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며 은행계좌가 있다. 즉, 사회적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공식부문에서 제공하는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경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자에게 공식적인 기능훈련과 휴가를 제공한다. 사회 발전이나 경제발전 모두를 고려할 때 비공식부문에 비해 공식부문은 양질의 고용을 제공하며 자본투자를 통해 성장할 기회가 많다. 하지만 공식부문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등록되지 못하는 것은 개도국의 기업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이러한 지원이 바로 PSD에서 주요한 주제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포함시킨다면 중소기업 ODA는 PSD와 겹치는 부문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 ODA는 개도국의 기업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비공식부문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을 공식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관련 법적·제도적 체제 정비와 지원정책의 정비에 대한 지식공유 및 정책자문 사업 등을 통해 가능하다.

둘째, 공식부문의 중소기업, 특히 개도국의 산업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부문에서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공식부문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세제, 행정, 금융, 노동, 복지 등의 기업활동의 비용을 줄여주고, 대신 공식부문이 제공할 수 있는 경영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비공식부문의 공식화에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중요하다. 세계은행도 Doing Business Index를 매년 공표하고 있는데, 이 지표를 구성하는 기업의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10개의 항목에서의 기업운영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금융, 행정 등의 기업경영 환경과 관련된 제도적 정비와 관련되어 있다. 중소기업 ODA는 지식공유 및

정책사문 사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관련 제도와 지원정책이 미흡한 국가의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의 기업경영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은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의 핵심정책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ODA는 중소기업 경영과 관련된 금융, 기술, 노동, 무역 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을 위한 체계 등에 대한 지식공유와 정책자문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시적 사업에서 더 나아가 중소기업 ODA가 개도국에 있어서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효과성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이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비공식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구조도 대부분이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며, 기업주도 혁신의지가 없이 장기적인 기업성장보다는 기존의 시장 활동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개도국에서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의 소유경영인은 기술기회를 포착하는 데 느리고, 경제나 규제 환경 변화에 매우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정책적 개입에 대한 반응이 느리다.

따라서 중소기업 ODA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면,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군을 선정하여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업은 현재 세계경제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해외투자와 연계되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⁵⁴⁾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의 경제발전은 주로 해외투자를

54) 이 외에도 각국의 비교우위 분야, 고유의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규모 있는 중기업도 목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기업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기는 힘들다.

받아들여 국내산업의 발전을 도모한 국가에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며, 최근 들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유사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셋째로, 이러한 해외투자 연계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투자에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관련 기업의 창업도 중요하다.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도의 개방성, 국내 법과 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들 투자와 연계된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이 요구된다. 즉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창업지원, 행정지원, 노동시장의 개혁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ODA는 개도국의 무역지원(Aid for Trade) 사업과 연계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해외 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도국 중소기업의 수출시장은 선진국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진국의 무역정책이 이러한 개도국의 중소기업 육성과 일관적으로 기획되고 수행되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해외투자 연계형 기업의 창업과 성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흡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투자 기업과의 연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역량을 중소기업이 배양하게끔 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 역량 구축을 위한 기업경영 지원 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술개발, 판로개척, 금융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지원 정책의 정비와 효과적인 집행이다. 개도국의 중소기업정책이 미진한

부분을 찾아 중소기업 ODA는 특정 지역이나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해외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산기지 이전을 위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성공은 생산기지가 있는 국가에서 역량 있는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ies)의 존재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 일본의 중소기업 관련 ODA는 일본의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에 대한 현지의 연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역량구축을 위해 다수 수행된 바 있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명확한 목표가 있고,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야가 해외투자기업과 연관된 분야에서의 기업역량 구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중소기업부터 해외직접투자와 연계된 규모 있는 현지의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중소기업 ODA의 잠재적인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소기업 ODA는 기본적으로 ODA를 통한 개도국의 중소기업 지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개도국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ODA는 양자원조의 경우 공여국이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집행하며, 그리고 공여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ODA가 자국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수행하는 모든 지원 정책을 다 수행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다음 절에서는 중소기업 ODA의 역할과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

4. 중소기업 ODA의 내용

OECD/DAC의 CRS 분류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분야(Industry, CRS code 321)에 속해 있으며, OECD/DAC의 CRS code 32120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항목은 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에너지, 금융, 창업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회계, 감사, 자문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각 공여국이 산업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⁵⁵⁾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단순한 기업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경영환경과 산업적인 기술과 인프라 환경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ODA분야를 OECD/DAC의 CRS 분류상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OECD/DAC의 CRS code 32120가 포괄적인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전 질에서 언급한 중소기업 ODA의 역할에 상응하는 중소기업 ODA가 내용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고려해 본다. 이렇게 OECD/DAC의 CRS 분류를 넘어서 다양한 사업을 중소기업 ODA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범분야적이기 때문이다.⁵⁶⁾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업경영, 인력, 노사관

55)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5장 참조.

56) 이는 ICT ODA를 명확하게 분류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ICT의 발전은 이제 단순한 ICT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이 국가전체의 ICT 발전을 규정짓는다. 물론 직접적으로 OECD/DAC의 CRS분류에서 커뮤니케이션 정책 및 행정(22010), 통신(22020), 라디오·TV·인쇄출판(22030), 정보통신기술(22040)(괄호 안 숫자는 CRS 분류번호) 등이 직접적으로 ICT ODA분야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e-application 분야에서의 발전도 ICT ODA 분야이다.

계, 판로, 금융, 기술, 무역 등에서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우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각각의 요소를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경제전반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금융, 인력, 창업, 기술, 판로, 소상공인, 기업컨설팅, 여성, 중견기업, 기업진단, 정보화 등으로 나누고 있다.⁵⁷⁾ 중소기업 ODA도 개도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각 분야별로 사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ODA의 특성상 국내 중소기업 정책수행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분야에서 유사한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즉, 이 중 한국 ODA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 이 분야를 굳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 가장 효과적인 ODA 사업을 찾아보아야 한다.

현재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는 규모가 있는 금융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의 ODA 규모를 고려할 때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⁵⁸⁾ 또한 인력, 창업, 기술, 판로, 기업컨설팅, 기업진단, 정보화 등에 있어서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사업과 같이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러한 개별 사업의 수행보다는 개도국의 중소기업 정책 수행기관의 역량구축이나 지원사업 형성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되고

57)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의 지원정책 정보(<http://m.smba.go.kr/subMain.do>, URL 검색일 : 2016. 7.12) 참조.

58) 타 공여기관의 중소기업 ODA사업에 대해서는 제5장을 참조.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자문이나 중소기업 정책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개도국 공무원 연수 및 교육사업 등의 사업구성은 방향 면에서 적합한 중소기업 ODA 사업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자문이나 관련 공무원 연수사업이 실제 정책사업과 연계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⁵⁹⁾ 또한 이러한 정책자문이나 연수사업을 넘어서 개도국의 중소기업 육성에 실제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중소기업 역량 구축에 구체적인 효과를 주고 올 수 있는 사업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분야 중 효과가 크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야 한다.

(1) ODA CRS 분류상 중소기업 ODA 관련 분야

OECD/DAC의 CRS분류에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직접 지원 분야(CRS code 32120)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각국의 중소기업 ODA 현황을 살펴볼 때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CRS code 32120를 제외한 OECD/DAC의 CRS 분류에서 중소기업 ODA와 관련 있는 분야를 찾아보기로 하자.

우선적으로 산업분야의 대부분 사업이 중소기업 ODA와 관련이 있다. 이는 정보통신(220), 에너지 생산 및 공급(230), 공업(321), 광물 자원 및 광업(322), 건설(323), 무역정책 및 규제(331), 관광(332) 등이다. 이러한 산업분야의 CRS 분류는 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책 수

59) 기획재정부(2013)의 정책자문사업인 KSP사업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정책자문사업의 권고안을 실현하는 후속조치가 미흡하다.

립, 생산활동을 위한 기능적 지원 등과 함께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 분야는 정보통신기술(22040 :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터넷 접근, IT 교육), 공업정책 및 경영(32110 : 공업부문·정책·기획·프로그램, 역량강화 및 자문, 기타 공업관련 활동, 재화의 제조), 중소기업개발(32130 : 회계, 감사, 자문 서비스 등 공업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가내 공업 및 수공업(32140), 기술연구개발(32182 : 공업표준, 품질관리, 계측, 검사, 승인, 인증), 무역정책 및 경영(33110 : 무역정책 및 기획, 무역정책 담당 부처 지원, 무역관련 법령 및 규제, 다자무역협정 분석 및 이행, 국가개발전략에서의 무역주류화, 도소매 무역, 기타 무역증진 활동), 무역교육 및 훈련(33181 : 무역관련 인적자원 개발, 대학의 무역과정) 등이다.

이러한 산업분야 지원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활동과 연관된 역량구축과 관련이 있지만, 이 외에도 금융(240), 경영과 서비스(250)는 중소기업 발전과 매우 관련이 높은 분야이다. 금융 분야에서 특히 공식 및 비공식분야의 금융발전(24030, 24040)은 다수의 중소기업에서 성장의 큰 장애가 되는 미흡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다. 그리고 경영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영지원서비스와 관련 제도(25010: 무역 및 기업 협회, 상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규제적 혁신, 지원 기관 역량 구축, 무역정보, 민관협력, e-commerce 등)가 중소기업 발전에 중요하다. 특히 개도국에서는 선진국과는 달리 기업 경영 지원서비스(Business support services)가 거의 부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상의 중소기업 ODA 분야로 고려될 만한 분야와 함께 교육(110), 행정(150), 사회인프라와 서비스(160) 분야 등도 간접적이지만 중소기업 ODA와 관련이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고등교육(11420: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고등기술 및 경영교육(11430: 전문가수준의 직업훈련) 등이, 행정분야에서는 여성창업과 관련된 지원(15170)이, 사회인프라와 서비스 분야에서는 고용정책과 관련 행정관리(16020)가 중소기업 발전과 관련이 깊은 분야들이다. 나아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과 같이 HIV/AIDS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보건(120)분야도 중소기업의 발전에 관련이 있을 것이다.

(2) OECD(2004, 2006)가 제시한 중소기업 ODA 관련 분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 개도국의 중소기업의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OECD(2004, 2006)에서는 개도국에서의 창업활성화와 민간투자 촉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ODA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ODA가 어떠한 내용을 가져야 할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OECD(2004)는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제1조건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개도국은 선진국과는 달리 비공식부문의 비중이 높으며 다수의 중소기업이 비공식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비공식부문과 공식부문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비공식부문의 중소기업의 공식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OECD(2004)는 개도국 발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중

소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이 중에서도 수출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ODA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개도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로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 중소기업이 가격 및 비용경쟁력을 보유해야 하며, 글로벌 공급사슬을 관리하는 다국적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에 적합한 기술표준, 나아가 환경표준과 노동표준에 걸맞은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ODA 수행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개도국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발전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ODA가 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첫째로, 소유권 투명성, 계약집행 편이성, 세제 투명성, 규제, 공정성, 인허가 문제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에 기여할 수 있는 개혁 및 정책개선과 관련된 ODA 사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이러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 역량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OECD(2004)는 이러한 중소기업 역량강화는 범분야적인(cross-cutting) 전략이 요구되며, 핵심적으로 중소기업 부문과 정부와의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 물적 비즈니스 인프라 투자와 투자집행 역량 강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분야로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집행역량 강화, 비즈니스 개발서비스(BDS : Business Development Service)의 강화, 인적 자원 개발, 인프라 투자 확충 등에서 ODA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각각에 대한 ODA 사업분야를 들어보면, 우선 금융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제도를

둘러싼 거시적·미시적 환경 개선(금융제도의 법적 행정 환경, 담보와 관련된 소유권 확정)과 함께 대출 기관 역량 확충(회계, 감사, 재무관리 관련 자문서비스, 민간대출 확충을 위한 보조)에 있어서 ODA의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⁰⁾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집행역량 강화에 있어서 다양한 ODA 정책자문이 가능하며, 특히 개도국에서 미발달한 정부와 민간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ODA가 도움을 줄 수 있다.⁶¹⁾ 마지막으로 BDS는 개도국에서 매우 빈약하며, BDS에 대한 지원은 지출 대비 효과성이 높은 사업이다. 지금까지 개도국 중소기업에 대한 BDS는 주로 개도국내의 기업단체, 미소금융기관, NGO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ODA를 통하여 훈련, 자문, 마케팅, 정보화, 기술이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BDS 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

이상의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역할과 함께 범분야적으로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등도 중요하다. 이는 직업훈련, 창업교육 등 교육분야의 ODA 사업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BDS 체계와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도 분절적인 사업구조보다는 특정 클러스터를 타깃으로 전략적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ODA 역할과 함께 OECD (2004)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현재 국제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수출 개발 지원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가

60) 모범적인 예로 아프리카의 벤처금융인 Precisoair과 인도네시아의 미소금융인 KUPEDES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금융기구의 형성과 자본확충에 ODA를 통한 자문, 자본금 공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61) 일레로 개도국 산업클러스터 ODA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김세원(2014)에서 제시한 클러스터 개발수행자(CDA : Cluster Development Agent)의 파견 등을 들 수 있다.

치사슬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중소기업의 역량에 대한 선별적인 ODA가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는 품질관리, 측정, 제품표준, 위생 및 노동조건 등 시장규제에 대한 부응 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지식 및 기술 공유가 ODA를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특히 수행과정에서 중소기업과 해외직접투자의 연계가 핵심적이다.⁶²⁾

마지막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정책일관성 문제이다. 선진공여국이 개도국 중소기업의 수출시장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요조건 확충을 위해 공여국의 무역정책이 개도국 중소기업 발전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OECD(2006)에서는 개도국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투자의 활성화이며, ODA가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ODA가 주로 분절적으로 특정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개도국 중소기업의 공급역량 확충이나 제도적·정책적 개혁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비판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ODA 사업의 전략성 강화, 경제인프라 및 금융시장 개발 우선화, 투자 장애요소 제거, 민간부문과의 대화채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중소기업 ODA라고 하여 중소기업에만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시장경제 내의 투자활성화를 통하여 이것이 중소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ODA가 빈곤퇴치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62) 한국의 전자 및 자동차 산업의 생산 국제화 과정을 살펴볼 때, 제조 대기업과 함께 1차 벤더도 생산현지에 생산기지를 이동하지만, 2차 벤더가 함께 이동하는 것은 보기 힘들다. 이러한 2차 벤더의 역할은 현지의 중소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나, 이들 기업의 공급역량이 확충되지 않으면 산업연관이 이어지기가 힘들다.

위해서는 여성이나 취약계층에게 유리하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도국의 노동, 토지, 자본 시장을 친빈곤층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공식 부문에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과 잠재성이 있는 산재된 비공식부문의 자본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들 부문의 공식화를 통한 기업경영과 시장의 발전에 대해서도 ODA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은 단순히 중소기업에 국한된 문제이기보다는 범분야적인 문제이며, 이는 각국의 기업환경에 일치하는 사업형성 없이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 따라서 사업의 시계가 장기적이어야 하며, 강력한 지역사회의 참여, 수요지향적 ODA가 요구된다.

(3) 산업정책적 측면에서의 중소기업 ODA 관련 분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ODA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도국의 중소기업에 국한될 수 없으며, 사업의 내용에는 범분야적인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복잡다단한 사업내용을 김종일·윤미경(2012)이 제시한 산업 ODA 사업내용을 통하여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개도국에서는 대기업은 주로 광업이나 에너지 등 채굴산업과 네트워크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 고려하는 실제 산업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김종일·윤미경(2012)에서 제시한 산업분야 ODA의 내용은 대부분이 개도국의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3>은 중소기업 관련 ODA는 거시-구조적 수준, 중간-산업적

수준, 미시-기업적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점과 각 수준별 중소기업의 발전 장애요인, 이에 대처하는 정책 분야,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ODA 사업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중소기업 관련 ODA는 매우 포괄적이고 범분야적이라는 것이다. 즉 거시, 산업, 기업 분야에서 포괄적인 요인이 중소기업 발전과 관련이 되며, 각각에 대해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ODA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환경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와 관련된 거시적 수준에서 ODA 사업은 주로 정책자문을 통하여 가능하다. 중간-산업 수준에서는 주로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에는 주로 전문가 파견, 정책담당자 초청연수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미시-기업 수준에서의 지원은 특정 기업이나 기업의 특정 생산 활동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자문,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기술자문, 시장정보 제공, 마케팅 지원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현재 이러한 현장에서의 중소기업 ODA는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김종일·윤미경(2012)의 중소기업 관련 ODA의 수준별 분류는 OECD(2016)가 제시한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분석틀과 매우 유사하다. OECD(2016)는 민간부문개발 활동을 상위(공공정책 및 제도), 중위(시장 기능), 하위(창업 및 기업육성) 스트림으로 나누고 있다.⁶³⁾ 이러한 분석틀은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이 개도국의 국내 중소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원조나 지원이 시장왜곡 등으로 나타나고, 단기적·상업적 목적에 편중되어 장기적 발전목표가 소홀히 되는 경향을 비판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석틀은 PSD

63) PSD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를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OECD(2016)의 분석에 따르면 상위-중위-하위 스트림의 지원을 모두 합치면 2013년에 960억 달러의 ODF 자금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분야별로 분류가 가능한 지원 액수(ODF to sector allocable) 전체의 54%에 달한다고 한다.⁶⁴⁾ 전체의 1/2에 달하는 인프라 지원을 제외하면 상위-중위-하위 스트림에 대한 지원은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16: 17).

산업정책적 측면의 중소기업 지원은 개도국에서의 기업규모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반면, PSD의 경우에는 빈곤층, 청년이나 여성 등 개도국의 취약계층의 창업과 생산활동에 대한 참여 제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는 중간-산업적 생산환경, 특히 공급사슬과 산업생산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만, PSD 측면에서는 금융접근성, 인프라 등을 강조한다. 하지만 양 논문의 모두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나 분석틀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중소기업 ODA의 지원형태 분류

수준	발전 장애요인	관련 정책	ODA 내용
거시-구조 (정치경제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질서와 제도의 운용 · 국가의 권력구조와 정책 지배구조 · 거시경제적 환경 · 규제 환경 · 거시적 개발 전략과 비전 · 행정적 체계 및 역량 · 사회간접자본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개혁 · 정치개혁 · 거시경제 안정화 · 규제개혁 · 경제개발전략 수립 · 행정개혁 · SOC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개발전략 구축을 위한 산업전략 수립 지원 · 산업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비전 수립 지원 · SOC 구축 지원

(계속)

64) 이는 PSD 지원을 분석한 액수 전체의 1/2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가 커진 것이다. ODF to sector allocable에는 규제금융, 채무탕감, 인도주의적 지원 등 분야별 분류가 가능하지 않은 지원을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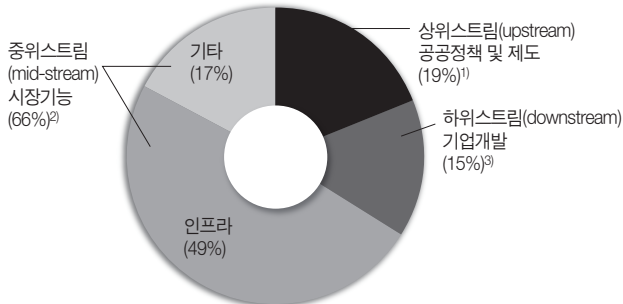
수준	발전 장애요인	관련 정책	ODA 내용
중간-산업 (산업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관된 산업의 존재 유무 - 산업집적지의 존재 유무 - 내수 및 수출 시장의 존재 유무 - 산업에 대한 숙련의 공급 여부 - 산업발전을 위한 특성의 금융지원 여부 - 산업발전과 관련된 특성의 규제적 환경 	<p>[산업발전전략 설정 및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발전 전략 구축 - 산업정책수행 지배구조 개혁 -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정보 및 지식공유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발전전략 구축 - 산업인프라 구축(산업단지, 인력양성 등)
		<p>[산업환경 및 정책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규제 및 지식재산권 - 표준화, 인증제도 구축 - 산업인력양성 체계 구축 - 산업단지 구축 - 생산자 협회 - 시장정보 네트워크 구축 - 산업금융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표준 등 표준화 사업 지원 - WTO 가입을 위한 제도 정비 지원 - 산업단지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지식공유 - 수출지원 기구 설립 지원 -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및 수출보증 제도 설립 지원 - 정책자금 설립 지원
		<p>[정책조직의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정책 담당 조직 구조조정 - 기술센터 설립 및 역량 강화 - 훈련센터 설립 및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정책 관련 담당자 연수 - 기술 및 훈련센터 설립 지원 - 센터 전문가 역량 강화 지원 - 센터 교육 프로그램 구축 지원
미시-기업 (기업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의 국제적 동향에 대한 지식 - 지속적이고 안정적 판로 -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 적합한 숙련과 기술 - 적합한 장비와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의 투자 촉진(연구개발 분석, 기술지원, 소프트웨어, 훈련, 품질 시스템 설립, 인증, 표준화, 정보와 경영시스템 설립) - 유형의 투자 촉진(생산 장비, 창고 처리 장비, 실험실 측정 장비, 컴퓨터, 생산설비(냉장고, 온열기, 통풍, 수도,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관련 경영진 및 기술직 연수 지원 - 수출시장 개척 지원 - 공여국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직접 금융 지원 - 전문가 파견 지원 - 직접 기술 지원 - 장비 공여

자료 : 김종일·윤미경(2012), p.82의 <표 2-6>.

5. 민간부문개발(PSD)의 시각에서 본 중소기업 ODA

OECD의 분석에 따르면 PSD를 취지로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소위 공여주체들은 실제로는 전 절에서 설명한 친성장적 접근과 친빈곤성장 접근이라는 두 가지 접근, 즉 수원국 내 투자여건의 조성이라는 친성장 혹은 친시장적 접근방식과 정부의 개입주의가 강한 생산역량의 강화를 동시에 적절하게 배합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12개의 개발협력주체들의 최근 원조상황을 정리하여 OECD(2016)은 PSD의 틀과 내용을 각각 상위스트림(upstream), 중위스트림(mid-stream) 및 하위스트림(downstream)의 수준으로 나누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3-1>과 같다.⁶⁵⁾

<그림 3-1> 민간부문개발(PSD) 관련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금융원조(ODF, 2013)



자료 : OECD(2016g), p.11 및 p.17에서 필자 재구성.

주 : () 안은 ODF 구성비.

- 1) 투자여건 : 거시경제안정, 기업환경, 통상정책, 노동시장
생산역량(생산성 향상) : 농업 및 산업정책
- 2) 투자여건 : 금융서비스, 인프라
생산역량(생산성 향상) : 상업적 연관(가치사슬 개발)
- 3) 생산역량(생산성 향상) : 기능(전문성), 인간개발,
기업개발 및 중소기업(SMEs)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65) OECD(2016g), p.10 이하.

우선 상위스트림에 대한 공여국의 개발협력분야는 수원국 내 시장 경제체제의 기본골격인 제도의 설정 및 공공정책의 수립·운영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그 취지는 민간부문의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있다. 협력의 제공은 거시경제안정의 유지, 제도개혁, 노동 및 통상정책 등을 통한 기업 친화적 여건의 조성에 초점이 두어진다. 부문별로는 경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농업 및 제조업과 같은 산업의 생산성 증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수준에서는 주로 자문 및 기술 원조를 비롯한 역량강화가 주목표이다.

이와는 달리 시장기능의 제고를 취지로 하는 중위스트림 수준의 협력에서는 시장실패를 비롯한 개도국 내 PSD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역량강화, 기술원조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상위스트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여건의 향상 및 생산 역량강화가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인프라 건설, 다양한 금융지원 및 지방, 지역 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계된 상업적 연관 네트워크의 개발 등과 같이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핵심이다.

다음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공여국 또는 국제기구들의 수원국 내 협력은 그간 주로 정부·공공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비정부기관,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연구기관 및 해당기업 등으로 급속하게 다양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여주체들이 수원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원국 내 필요한 상대기관이나 민간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한다는 점은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중위스트림의 PSD에 대한 금융지원이 총 개발금융협력(2013년 960억 달러)의 2/3에 해당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 인프라 건설부문만을 보더라도 총

액의 거의 50%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이 과제가 개도국 내 경제성장 및 빈곤해소를 위해서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점을 말해 준다.⁶⁶⁾ 인프라 건설에 대한 원조를 제외한 나머지 공적금융개발원조(ODF)는 세 수준의 스트림에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민간부문개발(PSD)과 관련된 하위스트림에 대한 협력은 그 대상이 거의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취지는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통해 독자적으로 생존가능하고도 혁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생산 및 경영역량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개발협력의 수단은 주로 개도국 내 일반적인 추세인 비공식기업의 공식부문으로의 통합과 함께 특히 미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제공을 비롯해서 자문 및 기술협력 등이며,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가능한 한 해당기업들에 직접지원이 돌아가는 형태로 수행된다.

이러한 분석들의 기초가 된 PSD를 위한 중요 공여주체들의 개발협력전략을 중소기업부문만을 별도로 종합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OECD의 관련 자료가 방대하므로 여기서는 하위스트림에 해당하는 기업개발, 즉 중소기업육성 부분만을 발췌·요약하여 이 표를 작성하였다. 이 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PSD의 핵심이 개도국 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하고도 포용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임을 말해 준다. 또 이러한 접근이 개도국 내 자율적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시장경제의 확고한 기초를 이룩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공여주체들은 공통적으로 개도국 내 PSD와 함께 SDGs가 제안하는 포용성장 및 환경친화적 성장을 목

66) 이 금액은 개도국 내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출신용에 대한 원조를 포함하지 않는데, 이 원조는 인프라 건설에 대한 총 금융원조의 1/6 내외에 위치한다. 같은 자료, p.17.

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 투자여건의 개선과 관련하여 소위 상위스트림에 해당하는 경제정책운영 및 제도의 설정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일본은 예외를 보이는데, PSD나 투자여건의 조성(예로 노동시장, 거시경제안정 및 금융서비스 접근 등)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단지 사업 환경개선에만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낸다.

반면에 공여주체들은 생산역량의 강화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치사슬개발 및 미소·중소기업개발은 경제협력의 핵심대상으로 등장한다. ‘가치사슬’이란 다음에서도 보듯이 국내에서는 기업들 간 수평적 또는 수직적 분업관계를 통해서 서로 연계되거나 국제적으로는 생산과정의 분업을 통한 국제시장에의 편입됨을 의미한다. 최근 국제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VC)로의 편입은 개발협력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으며, 다시 간단히 소개한다.

중소기업개발을 위한 협력의 취지는 SDGs를 추구하는 한편, 재정, 기술, 생산 분야의 전문성 및 기업운영 등의 측면에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여주체들은 다양한 협력수단을 택하고 있다. 이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의 접근 기회의 확대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더하여 경영능력의 제고, 전문 기술역량 강화, 혁신적 기업가의 양성 및 직업훈련을 비롯한 역량강화가 중요수단으로 등장한다.

한편, SDGs의 취지와 함께 이와 같이 국제협력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협력의 제공방식도 과거의 정부·공공부문을 중심

(표 3-4) 중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 PSD 관련 중소기업 개발(하위스트림) 관련 지원전략

국별 및 국제기구별 (담당기구)	기본 목표	PSD 관련 목표	중소기업 지원의 대상 및 수단	특징
미국 (USAID)	- 미국의 안전 및 번영 - 빈곤감소 - 재해구조 - 거버넌스 개선	- 민간주도의 성장 및 무역 증대 - 포용성장 - 지속가능한 성장	- 중소기업 금융대부, 중사 부녀자 및 농촌 빈곤 인구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 신용보증 및 보험지원	- 중소기업의 여건개선 및 기업가 정신의 육성에 초점. 특히 기능향상을 비롯한 교육과 경제성장의 시너지에 비중
독일 (BMZ)	- 빈곤감소 - 지속가능 성장	- 투자확대 - 민간부문 경쟁력 제고 - 책임 있는 기업가 행동고양	- 미소·중소기업(MSMEs) 기업가정신 함양 -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국가기업의 공급 확대 - 중소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금융지원, 투자 자문 제공	- 상위 및 중위 스트림과의 연계 아래 특히 중소기업개발에 초점을 둠. - 지원제공 주체는 정부(부처), 기업협회(상공회의소), 기술무역·산업협회, 노조, 사업개발서비스제공자 등
일본 (JAICA)	- 포용성장 - 빈곤감소 - 거버넌스 개선 - 노동안전	- 질적 성장 - 특징 : 다른 선진 공여국들과는 대조적으로 투자 여건의 조성 및 민간부문개발에는 관심을 두지 않음	- 특징 : 지방기업의 기업가양성에 비중을 둠. - 파르너십 증진 - 중소기업의 사업, 생산관리 및 생산노하우 개선을 위한 산업인력 역량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협력	- 일본의 국제협력 및 외교정책의 강화를 목표 - 인프라개발,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통한 무역 및 투자원활화 추진 - 사업중개기관 및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지원정책을 뒷받침 - 거시경제안정, 인프라개발 및 기초교육 강화는 중요한 수단임

(계속)

국별 및 국제기구별 (담당기구)	기본 목표	PSD관련 목표	중소기업 지원의 대상 및 수단	특징
영국 (DF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평등 축소 - 경제성장 촉진 - 빈곤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 창출 - 지속가능·포용 성장 - 민간부문의 기초 서비스 공급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한 민간부문 개발 확대 지원 -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과 투자확대 - 방법: 기업에 대한 기술 및 공식 부문화 협력, 종사자에 대한 건강, 교육 및 직업 훈련 및 투자동원을 위한 직접금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민간부문 주도의 성장전략, 건강 및 교육증진 등을 통한 빈곤해소 및 장기적 성장의 핵심인 - 민간투자 촉진 및 수출증진을 취지로 하는 시장경제제도, 기구 및 경제정책운영의 중요성을 강조, 특히 효율적인 금융시장 (빈곤층 대상 포함) 및 중소기업의 육성 - 중소기업·개인에 대한 미시적 지원정책
스웨덴 (SI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계층의 권능확대 - 포용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및 기업가 개발을 위한 전(前) 단계 조건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 정신 및 사업개발서비스의 제공 - 미소금융 및 기타 금융서비스 접근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 중소기업 및 비공식부문에 대한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비롯한 기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의 초점은 빈곤계층의 생산과정에 대한 참여(포용성장) - 지원방법: 민간부문개발, 무역정책 및 규제, 금융제도개발, 고용 및 노동시장 육성 - 시장개발협력정책의 지원수단: 글로벌 및 지역, 그리고 국가정책 및 제도(시장 및 시장참여자)의 두 가지 수준에서 추진 - 국가정책 및 제도적인 차원: 무역개발, 거시경제안정, 인프라보장, 정치적 안정 및 인력개발 등

(계속)

국별 및 국제기구별 (담당기구)	기본 목표	PSD관련 목표	중소기업 지원의 대상 및 수단	특징
EU (집행위원회, DG DEVCO)	- 포용성장 - 녹색성장	- 빈곤감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지방 미소·중소기업(MSMEs)육성을 위한 지원	- 경영능력, 기술훈련 및 산업네트워크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에 대한 협조금융 제공, 금융서비스접근 개선을 위한 위험 자본 보호 조치 - 고 위험국 내 미소·중소기업에 대한 대부, 채권금융, 보증 등 편의 제공 - 포용적 사업을 위한 자문 등 역량강화 - 환경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파이낸싱 보조 및 보호	- 지방소재 미소·중소기업 지원에 직접 대상: 개도국 정부, 사업중개기구 및 미소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은행 대출보증을 비롯한 새로운 지원수단을 개발 중에 있음 - 지속가능한 에너지, 농업 및 인프라개발 등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 유도 - 성평등, 젊은이 일자리 및 인권 등 다분야 (cross-cutting) 주제에 대한 지원
세은(WBG) 그룹 (IBRD, IDA, IFC)	- 빈곤추방 - 포용성장	민간부문 경쟁력 제고 - 민간부문 주도 성장	- 중소기업 개발 및 혁신을 위한 기업가 육성 지원 - 전문기술역량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혁신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업 역량제고	- 그룹 내에서는 IBRD 및 IDA가 개도국 및 취약국에 대한 개발정책대출 및 프로젝트 금융을 통한 공공부문의 투자환경 및 생산 역량 제고 - IFC: 인프라개발, 농업, 제조업 및 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일반기업 투자 지원

(계속)

국별 및 국제기구별 (담당기구)	기본 목표	PSD관련 목표	중소기업 지원의 대상 및 수단	특징
A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감소 - 고용성장 - 녹색성장 - 지역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주도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인프라, 제도 및 서비스 개발지원 - 직접금융지원, 투자유치를 위한 신용확대, 위험완화를 위한 보증, 혁신적인 금융수단 개발 - 부문별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포용·지속가능성장을 위해 산업기회 및 투자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개발에 치중 - 투자환경 조성에 집중 - 인프라, 지역협력, 금융개발 및 교육 등 다분야주제개발 추진 - 성평등 및 저버너스가 기업발전의 핵심 동력임
AF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성장 - 녹색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의 경쟁력 제고 - 민간부문주도성장 및 빈곤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수준의 전문기술부족, 금융서비스 접근, 규모의 경제 및 가치사슬의 미흡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의 제공 - 직접금융지원 : 장기부채조정, 채권, 보증, 합작대부, 주식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핵심동력으로서 민간부문개발을 포용성장의 전략으로 채택 - 세계의 기동 : 아프리카의 사업 및 투자 환경개선, 사회·경제적 인프라 접근의 확대 및 기업개발의 촉진 - 민간부문개발의 대상 : 인프라개발, 지역 통합, 거버넌스 및 공공금융경영의 책임성, 숙련 및 기술 - 글로벌 가치사슬편입 및 클러스터개발 - 성평등 및 젊은이 일자리 지원

자료 : OECD(2016g), Annex I, p. 20 이하에서 필자 요약 및 재정리.

으로 한 간접적인 방식보다는 점차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지원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최근 확대를 거듭하고 있는 도전기금(Challenge Funds)의 활용이다. 앞으로 한국의 ODA정책수립에도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글 상자 3-1> 참조).

<글상자 3-1> 민간부문개발(PSD)을 위한 도전기금(Challenge Funds)의 역할과 활동

아직 국내에서는 널리 소개되지는 않았으나 SDGs시대에 들어서 도전기금(Challenge Funds)의 역할은 한층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금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수원국 내 빈곤퇴치 및 친환경 사업을 목적으로 한 민간 부문의 육성에 있다. 가장 활발하게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구의 하나인 스웨덴의 SIDA(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는 도전기금을 ‘공여주체가 특정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 기구 및 기관(institution)들 간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선도적 주체들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는 금융지원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한다(SIDA(2016), p.1).

그 기원은 영국의 개발원조 담당부서인 국제개발처(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가 운영한 금융심화도전기금(FDCF, 1999~2007)에서 비롯되었다. 이 기금은 2002년 Propoor Innovation Challenge Fund를 설립하여 아프리카 및 아시아(주로 베트남)를 대상으로 지역 내 지방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법을 개발하는 미소금융기구들을 창설하였다. 이 기간 동안 FDCF는 15개 국 내 28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했는데, 프로젝트당 평균 투자액은 50만 파운드였으며, 이 기금의 운영을 통해서 총 5,6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민간자본을 동원할 수 있었다.

이 기금의 운영에서 성과를 거둔 DfID는 뒤이어 ProPoor Innovation Challenge(2002~), 빈곤층을 위한 전문지식의 전수 및 ICT 등을 활용해서 혁신사

(계속)

업 개발을 취지로 하는 Business Linkage Challenge Fund(2000~2008), 식량 유통사업인 Food Retail Industry Challenge Fund(2007~), 사하라 이남지역 내 금융교육을 전공으로 하는 Financial Education Fund(2009~), 아시아-아프리카 내 기성복 생산업체 종사자를 지원하는 Responsible and Accountable Garment Sector Challenge Fund(2010) 등을 운영했거나 아직 운영 중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례를 뒤따랐다. 그 중 몇 가지 대표적인 도전기금을 소개한다면, 우선 스웨덴의 SIDA가 가장 활발하다. Demo Environment(2007~2010, 2012~2013), Innovation Against Poverty(IAP, 2011~) 및 The Africa Enterprise Challenge Fund(AECF, 2008~)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오스트레일리아(AusAid)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빈곤퇴치와 관련된 민간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Enterprise Challenge Fund(2007~), 미국(USAID)의 개도국 내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s(2012~), 캐나다 정부의 Grand Challenges Canada(2008~) 등으로 최근 그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밖에도 국제기구로는 ADB 및 DfID가 합작 운영하는 Vietnam Market Participation Challenge Fund(2009~), ILO가 운영하는 COOP Africa Challenge Fund(2008~), 아랍지역 내 도전기금인 Sawaed Programme(2009~)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의 Grand Challenges Explorations Initiative(2008~) 등의 활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도전기금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것은 비교적 최근이며 다양한 목표 및 지원대상과 함께 각각 특유의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종합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 1) 기본적인 취지는 수원국 내에서 포용적이고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으로 SDGs와 일치한다.
- 2) 지원대상은 수원국 내 정부·공공 이외의 부문, 즉 비정부 기관,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업협회 또는 개별기업, 노조, 대학연구소 등이며, 미소 및 중소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개발협력국가나 국제기구가

(계속)

직접 이들 지원대상부문과 접촉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지원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거래비용, 위험부담 및 불확실성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다.

- 3) 지원기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나 추진방법에 개입하지는 않으며, 사업 착수초기에 요구한 결과가 총체적으로 실현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즉, 결과지향적인 접근을 택한다.
- 4) 수원대상 선정방식은 응모자들 간 투명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시장왜곡이나 환경피해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 5)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다른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혁신', '창의성'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동시에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6) 빈곤계층 및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취업은 물론 적정소득,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와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
- 7) 비용분담(cost-sharing)의 원칙 : 응모기업이나 기관은 원칙적으로 자체 자금으로 최소한 총비용의 50%를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지원기관에 따라 차이가 난다.
- 8) 지원기관들은 많은 경우에 도전기금 간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원조를 제공한다. 예로 SIDA의 AECF가 주도하는 아프리카녹색혁명연합(AGRA, 2012~2017)의 자금규모는 약 4억 달러이며, 여기에는 SIDA를 포함하여 DfID, 덴마크의 Danida, FAO, IFAD, IFC, 빌게이츠 재단, 록펠로우 재단 등이 참여하여 다국적 도전기금을 형성하고 있다.
- 9) 사업별 도전기금규모는 대상 사업의 성격이나 중요성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인다. 주로 보건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Grand Challenge Canada는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데 약 1억 8천만 달러이며, 소규모로 알

(계속)

려진 DfID/ADB의 베트남 도전기금은 300만 달러이다.

- 10) 그 밖에도 도전기금의 운영방식은 직접 경쟁 입찰방식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KPMG나 GRM 미래그룹과 같은 개발전문 계약기관들에게 일정 조건을 전제로 경쟁 입찰을 비롯하여 기금의 경영까지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자료 : Challenge fund, https://en.wikipedia.org/wiki/Challenge_fund, C. Pompa, Understanding challenge funds, ODI Report, Oct. 2013, SIDA, Challenge Funds, July 2015, AECF(Africa Enterprise Challenge Fund, KPMG, <http://www.aecfafrica.org/about-aecf>(검색일 : 2016. 8.23).

이상 간단히 도전기금을 소개하였는데 그 역사가 아직 짧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기금의 내부적인 운영이나 활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나 국제협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빈곤추방과 같은 목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수원국 내 경제적인 구조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응모 기업이나 기관 간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대부분의 도전기금이 초기 설정한 목표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6. 개도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을 위한 개발협력

개도국 내 자립적 시장경제의 확립과 민간부문개발의 과제는 대외적으로는 국제무역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협소한 국내시장, 의욕적인 전략부문 육성 계획, 자본 및 기술도입에 대한 수요확대 및 외화획득의 수단 등의 당면과제로 인해 개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장개방을 통한 수출주도적 성장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로의 편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주제는 국제적으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오고 있다.⁶⁷⁾ UNCTAD에 따르면 최근 세계무역의 80% 내외가 다국적 기업의 네트워크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각국의 중소기업 개발을 위해서는 소위 ‘글로벌 기업생태계(global business ecosystem)’에 통합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UNSIITC 2013b).

SDGs(9.3)는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접근의 하나로 개도국 내 금융서비스 접근의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편입을 제안한다. 즉, 중소기업이 국제 및 국내 가치사슬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정부·민간협력을 비롯한 파트너십의 강화를 통해서 국제개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GVC가 주도적인 국제무역의 추세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개도국의 참여는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한 예로 1995~2011년간 부가가치기준 국제무역통계(TiVA)에 따르면 개도국이 국제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서 11%로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OECD, World Bank Group(2015), p.7).

이러한 상황은 국가 간 원자재, 중간재 및 완제품의 거래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치사슬에서 개도국이 참여하는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선진-개도국 간 국제 분업의 전개에서도 그 해답을 모색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개도국은 전통적으로 G20 국가들

67)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정의와 최근의 발전양상에 대해서는 많은 문헌이 있으나 소개는 생략한다. 최근 국내 자료로는 김주권(2016), p.38 이하에서 이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과의 무역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 예로 이들과의 무역이 각국 내 각각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의 경우에는 70%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는 거의 80%에 해당한다. 이는 개도국의 GVC 참여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잠재적인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산업구조의 전환과 함께 경쟁력제고를 취지로 하는 국제적인 개발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말해 준다. 즉, 역량강화 및 금융지원을 비롯한 국제적인 공동노력은 개도국을 포괄하는 글로벌 기업생태계의 확대 과정이 원활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최근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GVC는 3D기술 및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ICT서비스부문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혁신 및 전문기술의 등장에 힘입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성증대, 특히 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상품의 차별성을 이룩하기 위한 R&D 투자 및 다양한 형태의 엔지니어링 개발노력에 따라 국가 간 경쟁력은 지경학적으로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도국 내 GVC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주로 농업부문이나 노동집약적 상품과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 영세·중소기업은 대다수의 경우에 비공식적부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열악한 상태에서 주로 하청과 같은 다국적 기업과의 수직적 분업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로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도국의 중소기업이 GVC 통합을 통한 개발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최근 개최된 G20 통상각료회의는 SDGs의 취지에 따라 포용적 GVC라는 차원에서 개발협력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G20

국가들 및 협력대상 개도국들 간 공동으로 무역, 금융, 투자 및 국내 정책의 개혁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표 3-4>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정책수단에 더하여 몇 가지 국제적 차원의 협력분야와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요한 내용은 ① 인적자본의 보강, ② 상품혁신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혁신 및 기술도입, ③ 무역 및 무역관련 정책의 정비, ④ 인프라 및 ICT연결서비스의 구축, ⑤ 표준제도의 보완 및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협약의 확대, ⑥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확대, ⑦ 개도국 통계능력의 제고 등이다(OECD, World Bank Group(2015), p.86 이하).

이 제안은 한마디로 개도국의 중소기업이 GVC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역량 강화에서부터 인프라 및 관련서비스의 보강, 사업환경의 개선 그리고 효율적인 무역 및 투자의 원활한 흐름 등에 이르기까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GVC는 빠른 기술·혁신의 주기, 급속하게 변화하는 수요, 비교우위상품의 지리적 이동 등과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국제협력은 개도국으로 하여금 유연한 적응력을 통해서 상품의 질적 향상을 이룩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이 G20 회의가 제안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은 GVC 편입이 SDGs의 취지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개도국 내에서 경제제도와 구조적 변환을 실현할 것을 기대한다.

한편, OECD는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기본적인 접근의 하나로 개도국들의 효과적인 생산전환(effective production transformation)을 유도한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접근에 따르면 선진-개도국 간 정책대화와 경험공유를 통해서 이들이 동태적으로 변

모하는 GVC에 통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량강화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개도국들이 이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과연 어떤 산업부문이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기대하는 만큼의 국내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다. 한국경제가 과거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며, 선진공여국의 성공 또는 실패의 경험에 대한 정보공유는 이들의 산업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반영하여 OECD는 선진-개도국 간 협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가 관건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미래전망에 대한 예측(예측능력), 여건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적응능력), 적극적인 학습동력(learning dynamics) 및 자기개발과정의 실현능력(학습 및 향상잠재력), 점점 복잡해지는 네트워크의 활용능력(상호연관성의 활용능력), 그리고 탄력적인 연관관계 및 가치창출능력(생산전환과정에서의 독자적인 잠재력 개발능력) 등이다.⁶⁸⁾ 이들 모두가 개도국이 현재 잠재력을 가지며 앞으로 특화할 산업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미래예측의 중요성을 대변한다.

OECD는 개도국 내 중소기업들이 GVC 편입을 위해서 생산전환 및 제품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이 목적을 위해 선진-개도국 간 필요한 개발협력의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중

68) OECD(2016f), p.17~18, OECD는 2013년부터 개도국의 GVC편입을 취지로 하는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토론하는 생산전환정책검토(PTPRs)를 정기적으로 주재하고 있다. 이 모임의 취지는 선진공여국 및 수원국들 간 정기적인 대화와 경험공유를 통해서 글로벌 차원의 적절한 정책제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하나의 예로 대부분의 개도국이 근본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비공식부문에 해당하는 가족경영을 포함하는 영세기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는 GVC 편입 자체를 시도할 수 있는 전 단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근대적인 최빈곤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개도국에서의 중소기업 현황과 육성정책

1. 서론

전 장에서는 중소기업 ODA의 역할과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장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중소기업의 위상과 현황, 그리고 육성정책 등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의 효과적인 중소기업 ODA 정책의 수립에 앞서 주요 수원대상국의 중소기업 현황분석을 통해 국가의 상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수원국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구성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표 4-1〉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통계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아세안 8개국에 대한 해외투자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을 제외할 경우 비중은 1995년과 2010년의 경우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의 지리적 접근성을 넘어선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표 4-1〉 한국의 해외투자현황

단위 : 천 달러, %

	1995	2000	2005	2010	2015
베트남	183,664	71,585	327,147	858,295	1,497,195
인도네시아	210,682	118,622	111,823	927,529	686,359
말레이시아	116,499	33,726	58,214	1,564,119	57,353
태국	22,233	33,748	52,946	83,832	104,057
필리핀	57,623	144,666	43,189	227,514	101,320
라오스	949	5	-	18,219	27,314
미얀마	1,380	9,338	649	197,388	246,650
캄보디아	258	3,576	32,395	120,100	41,719
8개국 합(A)	593,289	415,266	626,362	3,996,996	2,761,967
아시아 합(B)	1,767,118	1,713,921	4,354,672	10,154,315	11,053,984
중국	847,441	766,949	2,866,773	3,657,766	2,854,938
중국제외 아시아 합(C)	919,677	946,973	1,487,898	6,496,549	8,199,046
전 세계 합(D)	3,231,094	5,289,636	7,288,356	24,658,397	27,230,627
아시아에서의 비중(A/B)	33.6	24.2	14.4	39.4	25.0
아시아에서의 비중2(A/C)	64.5	43.9	42.1	61.5	33.7
전 세계에서 비중(A/D)	18.4	7.9	8.6	16.2	10.1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하며, 이들 국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15년 말 시작된 동아시아 경제통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아세안지역에 진출할 기회가 생길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촉진이 목적은 아닐지라도 이들 국가에 대한 산업분야 ODA의 증대가 예상되며, 특히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ODA의 증대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주요 협력국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위상, 제도,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국가 발전수준에 따른 중소기업 ODA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한국의 중소기업 ODA 정책 방향과 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 아시아 국가의 중소기업 현황과 육성정책

본 절에서는 동남아시아 8개국의 중소기업 정의, 현황, 육성정책 등에 대해 알아보고, 각국이 현재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ODA분야에 대해 논의한다.

(1) 베트남

1) 경제현황

베트남은 국내총생산이 1,988억 달러, 1인당 GDP는 2,171달러 (2015년 기준)인 하위 중소득 국가이다. 공산당 체제하의 안정적인 정치기반을 바탕으로 1986년 이후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국영기업의 민영화, 부실금융기관개선, FDI 촉진 등의 정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와서는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인 2012년 이후에도 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GDP 중 서비스부문이 44%, 제조업부문이 38%, 농업부문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수출증대와 외국인투자 확대로 2014~15년에 성장률이 6%대로 회복되었으며, 2016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

〈표 4-2〉 베트남의 경제현황

단위 : 억 달러, %

경제지표	2012	2013	2014	2015
GDP	1,556	1,706	1,859	1,988
1인당GDP	1,753	1,902	2,051	2,171
경제성장률	5.2	5.4	6	6.5
국내총투자/GDP	27.2	26.6	25.6	23.9
실업률	2.7	2.8	2.5	2.5
재정수지/GDP	-6.8	-7.4	-6.1	-6.9
소비자물가상승률	9.1	6.6	4.1	2.2

자료 : 2016 세계국가편람, p.95.

비 진작,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대로 6%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인프라와 보건 부문의 재정투자 확대, 법인세 인하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수출입은행(2015)).

2) 중소기업의 정의 및 위상

가. 중소기업의 정의

베트남은 ‘중소기업 발전지원에 대한 시행령 56호’에 따라 종업원 수 또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9인 이하를 산업에 관계없이 미소기업으로 정의한다. 1차 산업(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의 경우 종사자 수가 11인에서 300인이고 총자본이 1,000억 동 이하, 상업, 서비스 분야의 경우 종사자 수 11인에서 100인이고

〈표 4-3〉 베트남의 중소기업 정의

종류	1차산업, 제조, 건설	상업, 서비스
미소기업	9인 이하	
소기업	11인~200인 총자본 200억 동 이하	11인~50인 총자본 100억 동 이하
중기업	201인~300인 총자본 1,000억 동 이하	51인~100인 총자본 500억 동 이하

자료 : http://www.business-in-asia.com/vietnam/sme_in_vietnam.html

총자본이 500억 동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의 위상

2012년 기준 베트남의 중소기업 수는 333,835개로 전체기업의 97.7%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 증가율은 2010년부터 낮아지는 추세로 2012년 현재 5.3%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의 형태를 살펴보면 국영기업은 점차 비중이 감소하여 2007년 1.3%에서 2012년 0.5%까지 비중이 줄어들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민간기업이 약 97%, 외국인 투자기업이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3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서비스업(기술, 숙박, 음식료 서비스 등) 20.5%, 제조업 15.7% 순이었다. 산업별 구성비 측면에서 도소매업과 제조업은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서비스업은 2007년 16.1%에서 2012년 20.5%로 해당기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2012년 현재 약 510만 명이며, 2011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종사자 수 중 중소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9.2%에서 2012년 46.8%로 증가하였다. 종사자

〈표 4-4〉 베트남의 중소기업 수 현황

단위 : 개,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소기업 수		143,622	186,379	230,365	272,283	316,941	333,835
전체기업 수		149,069	192,179	236,584	279,360	324,691	341,601
중소기업 수 비중		96.3	97.0	97.4	97.5	97.6	97.7
중소기업 수 증가율		19.6	29.8	23.6	18.2	16.4	5.3
중소기업의 형태	국영기업	1.3	1.0	0.8	0.7	0.6	0.5
	사기업	96.1	96.7	97	97.2	97.1	97.2
	외국투자기업	2.6	2.3	2.2	2.1	2.3	2.3
중소기업 산업별 구성비	1차 산업	1.6	1.1	1.0	0.9	1.0	1.1
	도·소매업	41.5	42.3	41.4	40.9	40.3	39.8
	서비스	16.1	16.8	17.9	18.6	20.4	20.5
	건설	14.0	14.6	15	15.5	13.7	13.8
	제조업	18.6	18.2	17.5	15.7	15.7	15.7
	기타	8.2	6.9	7.2	8.4	8.9	9.0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45.

주 : 본 통계는 사업체 조사의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비공식부문 및 사업체 조사에서 누락된 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수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높았는데, 2012년 기준 중소기업 종사자의 31.8%, 23.6%가 제조업과 건설업에 포함되었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 21.8%, 서비스업 13% 순이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베트남에서 중소기업의 기업 수로 볼 때는 도소매업이 최대 산업이지만 종사자 수로 볼 때는 제조업이 중요하다. 이는 베트남이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4-5〉 베트남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종사자 수	2,835,808	3,348,741	3,893,814	4,347,743	5,009,658	5,129,980	
비중	39.2	42.1	44.7	44.2	46.0	46.8	
증가율	16.2	18.1	16.3	11.7	15.2	2.4	
중소기업 종사자 수 산업별 구성비	1차 산업	2.6	2.8	2.0	1.8	1.8	1.8
	도·소매업	19.9	26.7	21.7	21.9	21.7	21.8
	서비스	9.6	13.1	11.2	11.8	12.9	13.0
	건설	21.1	2.4	22.7	23.2	23.7	23.6
	제조업	39.2	45.8	34.8	33.4	32.0	31.8
	기타	7.6	9.1	7.5	7.9	7.9	7.9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45.

주 : 본 통계는 사업체 조사의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비공식부문 및 사업체 조사에서 누락된 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3) 제도 및 육성정책

베트남에서는 여러 국가기관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 무역부는 “Buy Vietnames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국가공인 브랜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국상품에 브랜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중소수출기업을 위해 ‘국가무역추진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재정부의 경우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인센티브 제도 및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에는 2013년 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6개월 납부유예와 2013년과 2014년의 국영토지임대료 50% 감면, 초기 중소기업의 법인세 20% 감면, 온라인세금신고제도 등

이 포함되어 있다.

기획투자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정보시스템구축과 비즈니스 포털을 만들었다. 국가과학기술재단은 기술기반프로젝트를 위하여 10억 동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투자자본의 70%까지 제로금리대출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3억 동을 초과하는 에너지 효율과 연관된 중소기업 프로젝트에 4.5억 동까지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과학 기술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에 투자하고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국가 기술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IT 응용 프로그램,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첨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창업 보육센터 등의 신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표 4-6〉 베트남의 중소기업 제도

규정	내용
Law No.47/2010/QH12 on Credit Institutions (신용기관에 관한 법률 47호, 2010)	- 은행과 비은행에 대한 규정
Law No.18/2003/QD on Cooperatives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18호, 2003)	- 협동조합의 규정
Law No.70/2006/QH11 on Securities (주식시장에 관한 법률 70호, 2006)	-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Law No.21/2008 on High Technology (첨단기술에 관한 법률 21호, 2008)	- 중소기업의 기술과 혁신을 촉진하는 국가정책
Decree No.56/2009/ND-CP on Support for Development of SMEs(중소기업 발전지원에 대한 시행령 56호, 2009)	- 중소기업 발전정책 - 중소기업의 정의 - 중소기업 발전추진협의회 기능 강화 -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립

(계속)

규정	내용
Decree No. 48/2001/ND-CP on People's Credit Fund(국민신용기금에 관한 시행령 48호, 2001)	- 국민 신용기금의 설립과 운영
Decree No. 28/2005/ND-CP on MFIs Decree No. 165/2007/ND-CP on MFIs (미소금융기관에 관한 시행령 28호(2005), 165호(2007))	- 미소금융기관에 관한 규정
Decree No. 03/2011/ND-CP on promulgating the regulation on guaranteeing commercial bank loans to SMEs(중소기업의 상업은행 대출 보장에 관한 시행령 3호, 2011)	- 베트남 개발은행의 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 접근성 강화
Decree No. 58/2013/QD-TTg on on the setting up,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redit guarantee funds for SMEs in provinces and centrally run cities(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 기금에 관한 시행령 58호, 2013)	- 지방정부 산하 신용보증기금의 설립과 운영
Decree No. 43/2010/ND-CP on Business Registration(사업자등록에 관한 시행령 43호, 2010)	- 원스탑 사업자 등록 제도
Decree No. 61/2011/ND-CP on incentive policies for enterprises investing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농촌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에 관한 시행령 61호, 2011)	- 농업 및 농촌지역 투자기업 지원 정책
Prime Minister Decision No. 2195/2011/QD-TTg on Approving the Proposal for Building and Developing the Microfinance System in Vietnam up to 2020(소액금융시스템 개발승인에 관한 총리령 2195호,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금융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적 틀 구축 - 정책입안과 정부기관의 규제역량 강화 - 미소금융기관의 역량강화 - 미소금융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한 지원활동 - 기타지원(미소금융촉진기금, 교육 기관설립, 미소금융데이터베이스 구축, 미소금융협회 설립)
Prime Minister Decision No. 254/2012/QD-TTg on Approving the Project on Restructuring the System on Credit Institutions During 2011~2015(신용기관 시스템 구조조정에 관한 총리령 254호,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금융환경 조성과 신용기관의 기능 향상에 초점 - 신용기관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개선 - 금융활동에서의 시장원리와 규칙을 강화

(계속)

규정	내용
Prime Minister Decision No.601/2013/QD-TTg on Establish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Fund(중소기업 발전 기금 설립에 관한 총리령 601호, 2013)	- 우선순위 분야에서 실현가능한 사업 계획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립
SBV Circular No.16/2013/TT-NHNN on the maximum interest rate of dong short-term loans imposing on credit institutions and foreign bank branches(단기자금에 대한 최대이자율에 관한 제재, 베트남 국영은행 회보 16호, 2013)	- 중소기업에 대한 양허성 대출금리 (9%)
SBV Document No.884/2013/NHNN-TTGSNH on Transforming the Central People's Credit Fund into the Cooperative Bank of Vietnam (중앙 국민 신용기금의 베트남 협동조합은행으로의 전환, 베트남 국영은행 문서 884호, 2013)	- 중앙 국민 신용기금의 베트남 협동조합은행으로의 법적인 지위 변경
SBV Circular No.04/2015/TT-NHNN on People's Credit Funds (국민 신용기금, 베트남 국영은행 회보 4호, 2013)	- 국민 신용기금에 관한 규정 개편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47.

베트남 정부가 최근까지 수행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기초가 되는 '5개년 중소기업 개발 계획 2011-2015'에는 경제 부처와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포괄적인 중소기업 개발정책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35만개의 새로운 중소기업 설립, 중소기업 직접수출 비중 25%(전체수출 대비) 달성, 중소기업 투자 비중 35%(전체투자 대비) 달성, GDP와 국가예산에 대한 중소기업 기여도 30%,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중소기업에 의한 250만~4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생성 등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정책 프로그램도 체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7〉 베트남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략	내용
5 Year SME Development Plan 2006-2010(2005) (중소기업 발전 5개년 계획 2006-2010,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중소기업 발전 전략 패키지(목표) - 32만개의 새로운 중소기업 설립(연 22% 성장) - 2010년까지 소외지역에 새로운 중소기업 설립(연 15% 성장) - 중소기업 직접수출 비중 3%~6% 달성 -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중소기업에 의한 2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생성 - 중소기업에 기술자 16만 5천명 추가
5 Year SME Development Plan 2011-2015(2012) (중소기업 발전 5개년 계획 2011-2015,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중소기업 발전 전략 패키지(목표) -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35만개의 새로운 중소기업 설립 - 중소기업 직접수출 비중 25%(국가전체수출대비) - 중소기업 투자 비중 35%(국가전체투자대비) - GDP와 국가예산에 대한 중소기업 기여도 30% -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중소기업에 의한 250만~4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생성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47.

(2) 인도네시아

1) 경제현황

2012년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6%를 하회하였으며 2014년에도 경기부진이 지속되었으나, 아세안(ASEAN)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에서 2016년 기간 수출호조와 소비진작에 따른 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료보조금 감축으로 물가가 급등하여 6.4% 수준을 기록 중이며, 재정수지는 인프라투자 확대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로 2011년 이

〈표 4-8〉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

경제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억 달러	9,190	9,125	8,886	8,726	8,758
1인당GDP	달러	3,745	3,667	3,524	3,416	3,384
경제성장률	%	6.0	5.6	5.0	4.7	5.1
국내총투자/GDP	%	35.1	34.0	34.7	34.0	34.5
실업률	%	6.1	6.3	6.1	5.8	5.6
재정수지/GDP	%	-1.6	-2.0	-2.1	-2.3	-2.3
소비자물가상승률	%	4.0	6.4	6.4	6.8	5.4
경상수지	백만 달러	-24,418	-29,115	-26,233	-19,564	-18,797

자료 : 2016 세계국가편람, p.45.

후 2% 내외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의 가격 하락,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되면서 2011년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되었다.

2) 중소기업의 정의 및 위상

가. 중소기업의 정의

인도네시아는 종업원 수, 매출액, 순자산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먼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4인 이하를 미소기업, 5인에서 19인을 소기업, 20인에서 99인을 중기업으로 정의한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3억 루피아에서 25억 루피아가 소기업의 기준이 되며, 순자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5,000루피아에서 5억 루피아를 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표 4-9〉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정의

종류	종업원 수	매출액	순자산
미소기업	4인 이하	Rp 3억 이하	Rp 5,000 이하
소기업	5~19	Rp 3억~25억	Rp 5,000~5억
중기업	20~99	Rp 25억~500억	Rp 5억~10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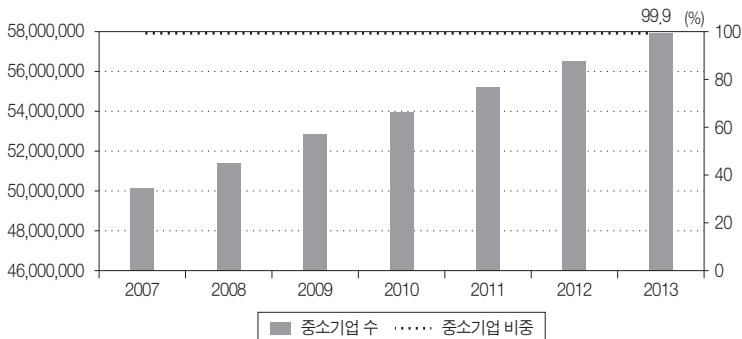
자료 : SMEs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p.5(table 1.1).

나. 중소기업의 위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 이후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으나, 해가 지날수록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존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수는 연평균 2%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3년 말 현재 약 5억 7,900만 개로 전체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차 산업(농업, 임업, 어업)이 4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상업(도소매, 숙박, 음식료 서비스 등) 28.8%, 제조업 6.3%, 교통 6.2%, 서비스 6.2% 순

〈그림 4-1〉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수 추이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177.

〈표 4-10〉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수 현황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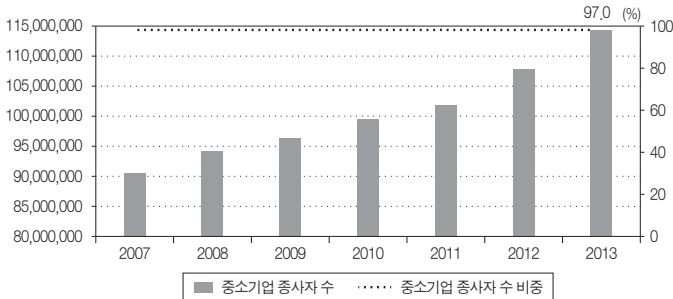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소기업 수		51,409,612	52,764,603	53,823,732	55,206,444	56,534,592	57,895,721
비중		99.9	99.9	99.9	99.9	99.9	99.9
증가율		2.5	2.6	2.0	2.6	2.4	2.4
중소기업 산업별 구성비	1차 산업	51.0	50.0	49.6	48.8
	상업	28.8	29.4	29.6	28.8
	서비스	6.2	6.3	6.4	6.9
	교통	6.2	6.5	6.5	6.9
	제조업	6.3	6.2	6.4	6.4
	기타	1.5	1.6	1.6	2.1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177.

이었으며, 중소기업 산업별 구성비는 오랜 시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2013년 기준 1억 1,400만 명으로 전체종사자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서 2013년 기간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6% 증가하였다.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차 산업이 4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상업 21.7%, 제조업 11.7%, 서비스업

〈그림 4-2〉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추이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177.

〈표 4-11〉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종사자 수		94,024,278	96,211,332	99,401,775	101,722,458	107,657,509	114,144,082
비중		97.2	97.3	97.2	97.2	97.2	97.0
증가율		3.9	2.3	3.3	2.3	5.8	6.0
중소기업 종사자 수 산업별 구성비	1차 산업	44.9	44.2	43.0	42.4
	상업	21.9	22.6	22.9	21.7
	서비스	9.4	9.7	10.5	10.5
	건설	6.3	6.1	6.2	6.9
	제조업	11.5	11.5	11.5	11.7
	기타	6.0	5.9	5.9	6.8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177.

10.5% 순이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은 2011년 이후 부진한 편이지만, 중소기업의 국가총생산의 기여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중소기업

〈표 4-12〉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총생산 현황

단위 : 억 Rp,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소기업 총생산		2,613,226	2,993,152	3,466,393	4,303,572	4,869,568	5,714,574
중소기업 GDP기여비중		55.7	56.5	57.1	57.9	59.1	60.3
중소기업 총생산 증가율		24.0	14.5	15.8	24.2	13.2	17.4
중소기업의 총생산 산업별 구성비	1차 산업	26.1	27.4	27.8	23.5
	무역	25.5	24.2	24.4	26.7
	서비스	17.0	16.5	16.4	16.8
	건설	5.9	5.5	5.5	5.1
	제조업	16.7	16.4	16.4	18.3
	기타	8.8	9.9	9.6	9.6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177.

〈표 4-13〉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수출 현황

단위 : 억 Rp,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소기업 수출액	178,008	162,255	175,895	187,442	166,627	182,113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18.1	17.0	15.8	16.4	14.1	15.7	
중소기업 수출액 증가율	26.8	-8.9	8.4	6.6	-11.1	9.3	
중소기업 수출의 산업별 구성비	제조업	88.7	88.8	88.3	88.7
	1차 산업	10.4	10.3	10.8	10.4
	광업	0.9	0.9	1.0	0.9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177.

업의 총생산은 인도네시아 GDP의 60.3%를 차지하였고, 중소기업 총생산 증가율은 17.4%였다.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은 전통적으로 내수지향형 기업이었으나, 가구 및 목재수공업제품 등의 산업들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수출지향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2013년 중소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7%로 182조 루피아였으며, 수출증가율은 9.3%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수출산업은 외국의 요구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들로 다소 불안정한 형국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은 2009년과 2013년에 각각 -8.9%, -11.1%의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 일본, 유럽 등의 교역상대국들의 수요회복 지연에 의해 발생하였다.

3) 중소기업 육성정책

2014년 출범한 인도네시아 신정부는 금융분야를 포함한 정책우선순위를 발표하였고, 당시 2015년으로 예정되었던 아세안경제통합을

대비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부분의 리스크 중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다.

금융감독원(OJK : Otoritas Jasa Keuangan)의 주도 하에 금융부분의 통합관리 감독을 실시하였고, 2011년 11월 금융감독원법이 시행된 후, 금융감독원은 2012년 12월 자본시장과 비은행금융기관까지 감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3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은행의 감독기능까지 흡수하였으며, 2015년 1월에는 미소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까지 추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통합금융 감독기관이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실시한 금융 총조사를 통해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한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사업자금 조달증대를 통해 침체된 제조업분야의 사업 환경 개선과 생산성 증대,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통한 중산층의 증가, 금융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통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 등 3요소는 사업 분야, 특히 중소기업 사업분

〈표 4-14〉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제도

규정	내용
Law No.20/2008 on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미소, 소, 중 기업에 대한 법률 20호, 2008)	- 중소기업의 정의와 중소기업 섹터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Law No.7/1992 and Law No.10/1998(amendment) on Banking(금융에 관한 법률 7호(1992), 10호(1998))	- 은행에 대한 규제
Bank Indonesia Regulation No.14/22/PBI/2012 on Financing and Technical Assistance by Commercial Banks in Developing MSMEs(중소기업 발전에 있어서 상업은행의 금융 및 기술지원, 인도네시아 은행 규정 14호, 2012)	-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 대출 비율을 2018년까지 20% 수준으로 올림
Presidential Decree No.2/2008 on Guarantee Institutions(보증기관에 대한 대통령령 2호, 2008)	- 신용보증 및 재보증기관에 대한 규제

(계속)

규정	내용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222/2008 and No.99/2011 on Guarantee Institutions and Reguarantee Institutions(보증/재보증 기관에 관한 재정부 규정 222호, 2008)	- 신용보증 및 재보증기관에 대한 규제
OJK Regulation No.5/2014 on the Business Licensing in Guarantee Corporation(보증공사의 사업면허에 관한 금융감독원 규정 5호, 2014)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규제
OJK Regulation No.6/2014 on the Implementation of Guarantee Corporation(보증공사의 설립에 관한 금융감독원 규정 6호, 2014)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규제
OJK Regulation No.7/2014 on the Inspection of Guarantee Corporation(보증공사의 설립에 관한 금융감독원 규정 7호, 2014)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규제
Law No.1/2013 on Microfinance Institutions (미소금융기관에 관한 법률 1호, 2013)	- 미소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Government Regulation No.89/2014 on Loan Interest Rate or Yield of Financing and MFI's Business Coverage(이자율(수익률)과 미소금융기관의 사업영역에 관한 정부 규정 89호, 2014)	- 미소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OJK Regulation No.12/POJK.05/2014 on Business Licensing and Institutional Matters of MFIs(미소금융기관의 사업등록과 제도적 사항에 관한 금융감독원 규정 12호, 2014)	- 미소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OJK Regulation No.13/POJK.05/2014 on Business Management of MFIs(미소금융기관의 사업관리에 관한 금융감독원 규정 13호, 2014)	- 미소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OJK Regulation No.14/POJK.05/2014 on Fostering and Supervision of MFIs(미소금융기관의 감독 및 육성 관한 금융감독원 규정 14호, 2014)	- 미소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Presidential Regulation No.9/2009 on Financing Institutions(금융기관에 관한 대통령 규정 9호, 2009)	-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Law No.17/2012 on Cooperatives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17호, 2012)	-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
Law No.8/1995 on Capital Market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8호, 1995)	-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47.

야에 있어 전통적인 은행대출이 아닌 다양한 금융모델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또한 국가의 중간소득의 함정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서도 창업기업과 초기단계기업의 자금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부합하는 자금조달 모델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정책적 옵션을 체계화하고자 하고 있다.

2012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빈곤감소, 경제성장 및 금융안정의 촉진을 목표로 “금융통합 국가전략”을 발표했으며, 빈민층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주체들의 금융접근성의 향상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이 전략에는 6개의 세부 정책추진 방향으로 금융교육, 공공 금융시설, 금융정보 맵핑, 규제 및 정책관련 지원, 중계 및 유통정책, 고객보호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인구의 증대와 금융에의 접근성 확대가 추구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세 가지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금융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모든 경제주체로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무점포은행추진, 미소보험강화, 자본시장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지역 상업은행 활성화와 농촌은행과 미소금융기관을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어 금융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셋째, 학생, 전문직,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경제교육의 개선이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역할강화, 지역신용보증기관의 확대, 재보험 산업의 역량강화,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의 초기자금공급자인 벤처캐피털 산업의 최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녹색금융과 이슬람 금융 추진에도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트남에 비해 인도네시아는 제조업에서의 중소기업의 위상이 높

〈표 4-15〉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전략	내용
MSME Development Action Plan 2005-2009 (중소기업 발전 실행계획 2005~2009, 2005)	- 중소기업의 생산성, 고용, 수출의 GDP, 기업가 정신에의 기여 증가
Instruction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6/2007 and No.5/2008 (New Economic Policy Package I & II)	- 통합 경제전략 패키지(중소기업분야 강화) - 금융접근성 증대(리볼빙 자금, 신용보증기관, 미소금융기관, 중소기업자금조달계획, 샤리아 제품 개발 등을 강화)
Government(인도네시아 대통령령 6호(2007), 5호(2008)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 1&2))	- 시장접근성 증대 - 인적자원개발역량 강화 - 규제완화
Joint Decree on MFI Promotion Strategy (미소금융기관 추진전략에 관한 공동시행령, 2009)	- 비공식 미소금융기관의 현황 - 비공식 미소금융기관의 양성화 - 인적자원개발 - 감시, 감독 강화 - 공식 미소금융기관의 지원
The Capital Market and Non Bank Financial Industry Master Plan 2010-2014 (자본시장과 비은행 금융산업 마스터 플랜 2010~2014, 2010)	-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자금 · 자본시장에의 접근을 위한 시장사업지역에 대한 제약조건 완화 · 금융 및 보증기관에의 공공접근성 증대 · 전문가, 기관지원, 보험회사지원 개선 - 매력적인 투자환경과 안정적인 리스크관리 - 안정적, 탄력적, 유동적인 산업환경 -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규제프레임워크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Inclusion (금융통합 국가전략, 2012)	- 모든 계층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대 · 목표계층 : 저소득층, 가난한 노동자, 중소기업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181.

지 않은 편이나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의 다각화, 미소금융을 통한 금융접근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

가의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베트남과 같은 체계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 체계를 수립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태국

1) 경제현황

태국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2015년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 ASEAN Economic Community)를 결성하였고 상품 관세 철폐와 투자 규제 완화 등 지역통합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정국불안에 따른 제조업 생산 및 관광객 수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0.9%에 그쳤으나, 2015년에는 관광객 증가, 인프라 투자 및 민간소비 회복으로 2.5%

〈표 4-16〉 태국의 경제현황

경제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억달러	3,975	4,202	4,048	3,735	3,930
1인당 GDP	달러	5,849	6,152	5,896	5,426	5,697
경제성장률	%	7.3	2.8	0.9	2.5	3.2
국내총투자/GDP	%	28.2	27.5	24.1	24.7	25.3
실업률	%	0.7	0.7	0.8	0.8	0.8
재정수지/GDP	%	-0.9	0.4	-0.8	-1.2	-1.4
소비자물가상승률	%	3	2.2	1.9	-0.9	1.5
경상수지	백만 달러	-1,499	-3,881	13,412	23,206	21,378
경상수지/GDP	%	-0.4	-0.9	3.3	6.2	5.4
상품수지	백만 달러	6,688	6,732	24,561	18,445	13,724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181,610	167,289	157,107	148,570	152,821

자료 : 2016 세계국가편람, p.89.

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에는 2013년 발생한 홍수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출과 인프라 개발로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이 0.8%로 적자 전환하였고 2015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지출 증가로 동 비중이 1.2%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에는 반정부 시위에 따른 관광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유가로 인한 원유수입액 급감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3.3%로 흑자 전환되었으며, 2015년에는 상품수입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관광산업은 회복되어 동 비중이 6.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외환보유액은 1,486억 달러로 2012년 1,81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총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중이 5%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수출입은행(2015)).

2) 중소기업의 정의 및 위상

가. 중소기업의 정의

태국은 산업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의에 다소 차이가 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종업원 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순자산(건물 제외)의 규모가 2억 바트 미만인 경우를 중소기업으로 정의한다. 상업의 경우 도매업과 소매업의 중소기업의 정의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도매업의 경우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 또는 순자산규모가 1억 바트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하며, 소매업의 경우 종업원 수 30인 미만 또는 순자산 규모 6천만 바트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4-17〉 태국의 중소기업 정의

종류		종업원 수	순자산	자본금
미소기업	제조업	4인 이하	5,000만 바트 미만	50만 바트 미만
소기업	제조/서비스	50인 미만	5,000만 바트 미만	2,000만 바트 미만
	상업(도매)	25인 미만	5,000만 바트 미만	900만 바트미만
	상업(소매)	15인 미만	3,000만 바트 미만	900만 바트 미만
중기업	제조/서비스	50~200인	5,000만~2억 바트	2,000만~1억 바트
	상업(도매)	25~50인	5,000만~1억 바트	900만 바트 이상
	상업(소매)	15~30인	3,000만~6,000만 바트	900만 바트 이상

자료 : SMEs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p.5 (table 1.1).

나. 중소기업의 위상

태국에서 중소기업은 국가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총 276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이 숫자는 전체기업 수의 97.2%를 차지한다. 태국의 중소기업 분야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그로 인해 2011년에는 중소기업 수가 9.2%나 감소하였으나, 이후 회복되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43.5%가 상업부문(도매, 소매, 자동차 수리업)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부문(숙박, 요식업) 39.1%, 제조업부문 17.4% 순이었다.

2013년 기준으로 태국 전체 노동력의 81%인 1억 1,400만 명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종사자 수는 3.3% 증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입어 중소기업의 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부문은 태국의 고용부문 유지에 큰 역할을 하였다. 산업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종사자의 44.7%가 서비스부문(숙박, 요식업), 31.7%가 상업부문(도매, 소매, 자동차 수리업),

〈표 4-18〉 태국의 중소기업 수 현황

단위 : 개,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소기업 수		2,366,227	2,827,633	2,896,106	2,913,167	2,646,549	2,730,591	2,763,997
비중		99.6	99.7	99.8	99.6	99.8	97.2	97.2
증가율		3.3	19.5	2.4	0.6	-9.2	3.2	1.2
중소기업 산업별 구성비	상업	41.1	46.7	47.4	47.5	44.5	43.6	43.5
	서비스	30	33.8	33.7	33.8	37.7	38.7	39.1
	제조업	28.2	19.3	18.9	18.7	17.8	17.7	17.4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34.

주 : 본 통계는 사업체 조사의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비공식부문 및 사업체 조사에서 누락된 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23.7%가 제조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태국의 중소기업이 기업 수와 고용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3년 기준 중소기업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는 37.4%로 과거 기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서 2013년 기간 동안 달라진 점은 서비스부문의 기여도는 증

〈표 4-19〉 태국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종사자 수		8,900,567	...	9,701,354	10,507,507	10,995,977	11,047,854	11,414,702
비중		76	...	78.2	77.9	83.9	81	81
증가율		3.1	8.3	4.6	0.5	3.3
중소기업 종사자 수 산업별 구성비	무역	27.3	...	30	30.9	34.8	32	31.7
	서비스	33.8	...	35.8	35.8	35.6	44.1	44.7
	제조업	38.9	...	34.2	33.3	29.6	23.9	23.7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34.

주 : 본 통계는 사업체 조사의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비공식부문 및 사업체 조사에서 누락된 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표 4-20〉 태국의 중소기업 총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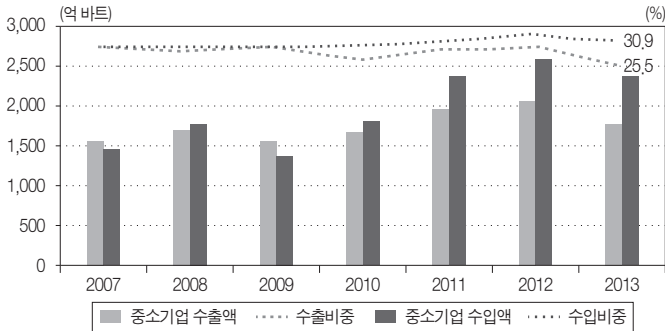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소기업 총생산		3,457.70	3,417.90	3,747.70	3,859.60	4,211.30	4,454.90
비중		38.1	37.8	37.1	36.6	37.0	37.4
중소기업 총생산 산업별 구성비	광업	1.7	1.6	1.7	1.8	1.9	1.9
	제조업	32.0	30.4	32.3	31.2	30.9	29.6
	건설	6.2	5.9	5.9	5.8	6.0	5.8
	상업	28.5	29.9	28.3	28	27.7	27.7
	서비스	31.4	32	31.6	33	33.3	34.8
	전기, 가스, 수도	0.2	0.2	0.2	0.2	0.3	0.3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34.

주 : 본 통계는 사업체 조사의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비공식부문 및 사업체 조사에서 누락된 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그림 4-3〉 태국의 중소기업 수출/수입 추이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34.

가한 반면, 제조업 부분의 기여도는 감소했다는 것이다.

태국의 중소기업은 수출과 수입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의한 수출액은 1조 7천억 바트로 전체 수출액의 25.5%를 차지하고, 수출액은 2조 3천억 바트로 전체 수입액의 30.9%를 차지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입은

〈표 4-21〉 태국의 중소기업 수출/수입 추이

단위 : 억 바트,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소기업 수출액	1,691	1,564	1,669	1,971	2,065	1,762
비중	28.9	30.1	27.3	29.4	29.9	25.5
증가율	7.3	-7.5	3.6	27.7	4.8	-14.7
중소기업 수입액	1,772	1,384	1,810	2,383	2,588	2,369
비중	29.8	30.1	30	31	33.1	30.9
증가율	21.9	-21.9	28.3	21.6	8.6	-8.5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34.

2011년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 및 수입의 성장세는 둔화되었고, 2013년에는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주요 무역 파트너국가인 중국, 일본, 유럽 등의 수요의 회복 지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중소기업 육성정책

태국의 금융부분 규제구조는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된다. 태국중앙은행은 상업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재정부 산하 재정위원회는 국영은행과 같은 전문금융기관과 중소기업개발은행을 관리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정부가 지정한 전문금융기관은 태국중앙은행에 의해 관리된다.

2012년 국가경제사회발전위원회가 만든 태국국가발전전략은 4대 전략의 일부로 성장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총생산에의 중소기업 기여분을 4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태국중앙은행의 5개년 전략계획 2012~2016에도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소기업 대출과 금융서비스 지원의 확대가 포

함되어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중소기업진흥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진흥정책 및 계획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부는 태국정부기관들의 중소기업정책을 조율하고 계획하는 기관으로, 2001년에 국가중소기업진흥위원회의 관리, 감독 하에 중소기업진흥 마스터플랜수립의 책임을 부여받았으며 현재까지 3개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다. 2012년부터 2016년 기간 실시된 세 번째 중소기업진흥 마스터플랜은 사업환경개선, 경쟁력강화, 국가의 균형발전, 국제적 경제통합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사업역량 강화 등의 4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중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는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에 있어 핵심 시행전략이었다.

2015년 말 시행된 동남아시아 경제공동체로 인한 새로운 경제환경에서의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기반의 강

〈표 4-22〉 태국의 중소기업 관련제도

규정	내용
SMEs Promotion Act, B.E. 2543(2000) (중소기업 촉진법 2543호, 2000)	중소기업진흥정책-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무소 설립
Ministerial Regulation B.E.2545(2002) (각료회의 규정 2545호, 2002)	중소기업의 정의
Financial Institutions Business Act B.E. 2551 (금융기관 사업법 2551호, 2008)	상업은행 사업, 금융 사업, 신용토지사업에 대한 규제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Bank of Thailand Act B.E. 2545(중소기업개발은 행법 2545호, 2002)	태국중소기업개발은행 설립
Small Industry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Act B.E.2534 (소산업 신용보증공사법 2534, 1991)	중소기업 대출을 다루는 은행의 신용보증운영에 대한 규제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38.

화와 국제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부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아세안 국가들의 소비자 행동분석, 태국중소기업의 고성장부문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분석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진흥에 적합한 정책방향수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2013년 중소기업 진흥부는 3개의 산업부문을 지정하여, 부문별 중소기업 진흥전략계획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3개 부문은 스파 및

〈표 4-23〉 태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전략	내용
The First SMEs Promotion Plan 2002~2006 (중소기업진흥계획 1 (2002~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 구조의 핵심인 중소기업 소생 · 인프라 구축 및 향상과 사업운영 장애물 감소 ·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강화 · 중소기업의 수출분야 역량강화 · 새로운 기업의 탄생과 발굴 · 지역사회 기업으로의 역할을 촉진
The Second SMEs Promotion Plan 2007~2011 (중소기업진흥계획 2 (2007~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기업의 탄생과 기존기업의 역량강화 ·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과 혁신역량을 향상 · 무역분야의 효율성 강화 · 서비스 부문의 가치창조와 부가가치 촉진 · 지방지역에서의 중소기업 촉진 · 사업운영에 유리한 요인 개발 촉진
The Third SMEs Promotion Plan 2012~2016 (중소기업진흥계획 3 (2012~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환경 개발조성 · 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구축과 강화 · 지역중소기업의 균형성장을 촉진 · 국제경제통합을 위한 태국 중소기업의 사업역량 강화
SME Promotion Strategic Plan and Action Plan by Sector 2013 (중소기업 진흥전략계획과 분야별 추진계획,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분야 - 스파, 건강, 도소매 무역, 디지털 콘텐츠 역량강화 · 장기적 사업안정성 확보 · 운영의 유연성과 신속성 강조 · 국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인기, 명성, 스토리 구축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38.

건강, 도소매 무역, 디지털 콘텐츠 등이며, 이 산업부문의 역량강화, 사업의 장기안정성 구축, 사업네트워크 구축과 국내외 제휴, 지명도와 스토리 창조 등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다.

태국은 자동차 등 해외투자와 연계한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이 있어왔으나, 이보다는 서비스업에서의 중소기업의 성장이 활발하다. 이에 따라 태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 및 정책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현재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아세안 지역 등 역내 기업간 연계 강화 등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4) 말레이시아

1) 경제현황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민간소비증대와 인프라 투자의 증대로 6.0%였으나, 2015년에는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4.7%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대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이며, 경기부양과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지출, 비효율적인 조세징수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2013~2014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상품수지 흑자에 따라 각각 3.5% 및 4.3%였으나, 2015년에는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 규모 확대와 원유 등 주요 수출품 가격 하락으로 흑자폭이 축소되어 2.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수출입은행(2015)).

〈표 4-24〉 말레이시아의 경제현황

경제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억달러	3,144	3,233	3,381	3,135	3,510
1인당 GDP	달러	10,653	10,797	11,049	10,073	11,090
경제성장률	%	5.5	4.7	6	4.7	4.5
국내총투자/GDP	%	25.7	25.9	25	26.5	27.1
실업률	%	3.0	3.1	2.9	3.0	3.0
재정수지/GDP	%	-3.8	-4.3	-3.6	-3.5	-3.2
경상수지	백만 달러	16,245	11,262	14,457	6,935	7,362
경상수지/GDP	%	5.2	3.5	4.3	2.2	2.1
상품수지	백만 달러	36,643	30,577	34,626	26,123	25,570
서비스수지	백만 달러	-2,767	-3,037	-3,404	-4,445	-4,480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137,784	133,444	114,571	103,702	..

자료 : 2016 세계국가편람, p.57.

2) 중소기업의 정의 및 위상

가. 중소기업의 정의

2014년부터 적용된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 정의는 연간 매출액 규모와 연간 풀타임 종사자 수에 의한다.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매출액이 5,000만 링깃 이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서비스업 및 기타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75인 미만이거나 매출액이 2,000만 링깃 이하면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나. 중소기업의 위상

말레이시아의 2010년 중소기업의 수는 645,136개로 전체기업의

〈표 4-25〉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 정의

종류		종업원 수	매출액
제조업과 관련서비스	미소기업	5인 이하	30만 링깃 이하
	소기업	5~75인	30만~1,500만
	중기업	75~200인	1,500만~5,000만
서비스, ICT, 1차산업	미소기업	5인 이하	30만 링깃 이하
	소기업	5~30인	30만~300만
	중기업	30~75인	300만~2,000만

자료 : <http://www.smeinfo.com.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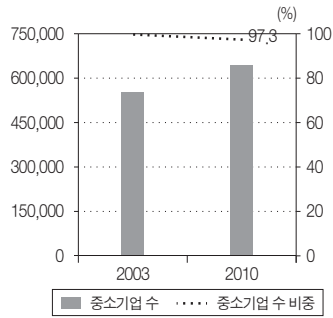
97.3%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문별로 서비스업이 93.1%를 차지하며, 제조업 5.9%, 건설업 3%, 농업과 광업은 각각 1%, 0.1%를 차지하였다.

2013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전체 노동력의 57.5%인 513만 명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종사자 수는 6.3%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종사자의 대부분인 66%가 서비스부문, 18.9%가 제조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건설업부문과 농업부문에는 각각 7.5%가 종사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말레이시아 중소기업의 국내총생산은 2,600억 링깃으로 전체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는 33.1%이다. 부문별로 기여도를 보면 중소기업 총생산의 62.1%가 서비스부문으로부터 창출되었다. 그 다음으로 제조업부문이 23.7%, 농업부문이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서 2013년 기간 동안 각 부문의 기여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 총생산이 국가의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주 조금 증가하였다.

〈표 4-26〉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 수 현황

		2003	2010
중소기업 수		548,267	645,136
비중(%)		99.2	97.3
증가율(%)		...	17.7
중소기업 수 산업별 구성비(%)	농업	6.2	1
	광업		0.05
	제조업	7.2	5.9
	건설		3
	서비스	86.6	93.1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199.

주 : 본 통계는 사업체 조사의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비공식부문 및 사업체 조사에서 누락된 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표 4-27〉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종사자 수		3,684,210	4,100,952	4,389,823	4,561,854	4,829,328	5,135,605
비중		58.9	59.4	57.1	57.3	57.2	57.5
증가율		4.4	11.3	7	3.9	5.9	6.3
중소기업 종사자 수 산업별 구성비	농업	8.0	8.6	9.3	7.7	7.4	7.5
	광업	0.11	0.12	0.13	0.13	0.13	0.12
	제조업	18.7	19.8	19.9	19.5	19.5	18.9
	건설	5.7	6.0	6.3	6.8	7.1	7.5
	서비스	67.5	65.5	64.4	66	65.9	66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199.

주 : 본 통계는 사업체 조사의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비공식부문 및 사업체 조사에서 누락된 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다. 중소기업 육성정책

말레이시아 중소기업 개발위원회는 모든 정부부서의 중소기업 개

〈표 4-28〉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 총생산 현황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소기업 총생산	199,285	199,690	216,267	231,669	245,596	260,964	
비중	31.2	31.7	32	32.5	32.7	33.1	
중소기업 총생산 산업별 구성비	농업	10.6	10.7	10.5	10.4	10.0	9.7
	광업	0.2	0.2	0.2	0.2	0.2	0.2
	제조업	25.2	23.4	24	24.1	24.1	23.7
	건설	2.3	2.5	2.6	2.6	2.8	3.0
	서비스	61.2	62.7	61.9	61.8	61.8	62.1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199.

주 : 본 통계는 사업체 조사의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비공식부문 및 사업체 조사에서 누락된 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발프로그래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개발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마스터플랜 2012~2020’으로, 2013년 7월 중소기업 개발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정의와 관련된 기준을 모든 부문에 있어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승인을 단행하였다. 또한, 5가지 핵심프로그램을 포함한 ‘미소기업을 위한 성장전략’을 실시하였다. 5가지 프로그램은 미소기업의 설립, 성장, 시장, 발전, 금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개발위원회 설립 이후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 부문은 2006년에서 2013년 기간 동안 연평균 6.3% 성장하였다는 성과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중소기업 마스터플랜 2012~2020’은 6개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4개의 주요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6개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32개의 실행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접근성은 6개의 주요영역에 포함되며, 중소기업투자프로그램은 6개의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판매세를 상품세로 전환하는 정책개혁은 중소기업에 큰

〈표 4-29〉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제도

규정	내용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rporation Malaysia Act 1995(말레이시아 중소기업공사법, 1995)	중소기업공사 제도정립
National SME Development Council Directive 2005 (국립 중소기업 개발위원회 지침, 2005)	중소기업 정의
Financial Services Act 2013 (금융서비스법, 2013)	금융기관을 위한 프레임 워크
Capital Markets and Services Act 2007 (자본 시장 및 서비스법, 2007)	자본시장 규제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02.

〈표 4-30〉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전략	내용
SME Annual Reports 2005, 2006, 2007, 2008,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2005, 2006, 2007, 2008,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특히 기업가 정신, 인적 자원개발, 자문서비스, 인식 및 홍보, 기술향상, 제품개발 등의 역량을 강화 · 물리적 인프라 개발 및 향상, 정보관리능력 및 운영능력 등의 강화 · 중소기업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발 및 강화를 통한 금융접근성 향상 · 혁신과 기술도입, 인적자원개발, 자금조달, 시장 접근성, 법률 및 규제환경, 인프라 · 상품세 및 서비스세의 도입 · 최저임금제 시행 · 중소기업자들 간의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SME Master Plan 2012-2020 SME Corp. (중소기업 마스터플랜 2012-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형성의 증대 · 고성장 혁신기업의 수 확대 ·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대 · 성장과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식화를 강화
Micro Enterprise Breakout Strategy SME Corp. (미소기업 부흥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킷 활용 · 생산성 툴킷 · 온라인 마켓에의 접근 · 금융가용성 및 접근성의 인식 · 생산성 마우처 발행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02.

영향을 주며, 최저임금제의 시행은 중소기업의 고용개혁으로부터의 영향에 완충재 역할을 한다.

말레이시아 중소기업공사는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기반시설, 금융지원, 자문, 시장접근성 강화 등을 통한 지원을 한다. 중소기업공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중소기업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모든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 및 자문 서비스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5) 필리핀

1) 경제현황

필리핀은 2013년 11월 하이엔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2014년 경제성장률이 6.1%로 낮아졌으나, 2015년에서 2016년에는 소비심리 개선, 민관협력(PPP)사업 본격화, 관광업 활성화로 6%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의 소비자 물가는 식료품 가격 상승,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4.2%까지 상승하였으나, 2015년에 들어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하락에 따라 수입물가 안정화로 1.9%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적으로 원유, 식료품,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상품수지는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BPO 산업과 관광업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수지 및 해외 근로자 송금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세가 지속되고 있다(수출입은행(2015)).

〈표 4-31〉 필리핀의 경제현황

경제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억 달러	2,501	2,719	2,846	2,993	3,302
1인당 GDP	달러	2,611	2,789	2,862	2,951	3,192
경제성장률	%	6.7	7.1	6.1	6.0	6.3
국내총투자/GDP	%	18.2	20.0	20.9	20.7	21.3
실업률	%	7.0	7.1	6.8	6.3	6.0
재정수지/GDP	%	-0.3	0.2	0.9	-0.1	-0.6
소비자물가상승률	%	3.2	2.9	4.2	1.9	3.4
경상수지	백만 달러	6,948	11,384	12,645	14,901	14,874
상품수지	백만 달러	-18,927	-17,661	-16,299	-13,704	-13,590

자료 : 2016 세계국가편람, p.77.

2) 중소기업의 정의 및 위상

가. 중소기업의 정의

필리핀의 중소기업의 기준은 마그나 카르타(공화국 법령 9501)에서 정의되었다. 종사자 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순자산 규모가 1억 페소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주에 넣고 있다. 세부적으로 9인 이하, 300만 페소 미만을 미소 기업, 99인 이하 또는 1,500만 페소 미만을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의 위상

필리핀의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제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 국가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중소기업 수는 전체기

〈표 4-32〉 필리핀의 중소기업 정의

종류		종업원 수	순자산
제조업	미소기업	9인 이하	300만 페소 이하
	소기업	10~99인	300만~1,500만 페소
	중기업	100~199인	1,500만~1억 페소

자료 : SMEs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p.5 (table 1.1).

업 수의 99.6%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5.2% 증가한 94만개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상업 및 수리업(도매, 소매,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업)이 46.4%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이 39.4%, 제조업이 12.5%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에서 2012년 기간 서비스업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상업 및 수리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였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고용의 64.9%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7.3% 증가한 493만 명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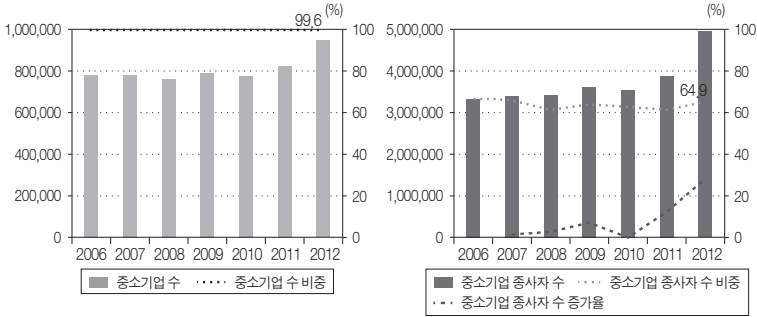
〈표 4-33〉 필리핀의 중소기업 수 현황

단위 : 개,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소기업 수	781,201	758,436	777,357	774,664	816,759	940,886	
비중	99.7	99.6	99.6	99.6	99.6	99.6	
증가율	0.1	-2.9	2.5	-0.4	5.4	15.2	
중소기업 산업별 구성비	상업 및 수리업	50.1	49.9	49.6	49.7	47	46.4
	서비스	33.8	34.2	34.8	34.8	38.1	39.4
	제조업	14.9	14.7	14.4	14.4	13.7	12.5
	농림어업	0.7	0.7	0.7	0.6	0.6	0.9
	기타	0.5	0.5	0.5	0.5	0.6	0.8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22.

〈그림 4-4〉 필리핀의 중소기업 추이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22.

〈표 4-34〉 필리핀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종사자 수	3,355,742	3,395,505	3,595,641	3,532,935	3,872,406	4,930,851	
비중	64.7	61.2	63.2	62.3	61.0	64.9	
증가율	0.8	1.2	5.9	-1.7	9.6	27.3	
중소기업 종사자 수 산업별 구성비	서비스	40.3	41.4	42.7	42.7	44.7	42.5
	상업 및 수리업	35.3	35.1	34.8	35	33.9	35.7
	제조업	19.5	18.7	17.7	17.5	16.7	16.6
	농림어업	2.3	2.2	2.0	2.0	1.8	2.2
	기타	2.5	2.5	2.8	2.8	2.9	3.0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22.

주 : 본 통계는 사업체 조사의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비공식부문 및 사업체 조사에서 누락된 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비즈니스 종사자 비중이 42.5%, 그 다음으로 상업 및 수리업(도매, 소매,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업)이 35.7%, 제조업이 16.6%를 차지하고 있다.

3) 중소기업 육성정책

1991년에 제정되어 1997년과 2008년에 개정된 중소기업 촉진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환경 조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이 국가정책화되었다. 이 법안에는 3가지 주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중소기업 개발위원회 설립, 두 번째가 중소기업진흥공사 설립, 세 번째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할당제이다.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중소기업의 개발을 위한 주요 정부기관으로서, 산하부서인 중소기업개발국은 중소기업분야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표 4-35〉 필리핀의 중소기업 제도

규정	내용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A. No. 6977 of 1991, as amended by R.A. 8289 of 1997, and by R.A. 9501 of 2008 further amended by R.A. 10644 of 2014) (미소, 소, 중기업에 관한 대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정의 · 중소기업 촉진시스템의 제도적 틀 정립 · 중소기업 촉진정책 · 중소기업 맞춤형 정부금융기관 설립
Barangay Micro Business Enterprises (BMBE) Act of 2002(R.A. No. 9178 as amended by RA 10644) (지역 미소, 소, 중기업에 관한 2002년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BE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최저임금법의 범위에서 면제 · 특별 신용 창구를 통한 자금조달 우선권 부여 · 기술이전 프로그램, 생산 및 관리 교육,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Go Negosyo Act (R.A. No. 10644) (사업 법령 1064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지역,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 중소기업 개발위원회와 자문단 확대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26.

램을 개발하고 정부정책을 시행하며, 중소기업개발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한편, 중소기업개발위원회는 중소기업분야 개발을 위한 정부정책과 계획을 조정하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프로그램의 시행과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업 법령 10644호 (Go Negosyo Act (R.A. No.10644))’는 중소기업의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포괄적 성장을 촉진하고자 2014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령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소기업에 지원을 위해 모든 지역에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며, 구축될 예정인 필리핀 사업자등록 데이터뱅크는 무역산업부 산하에 필리핀의 모든 사업자 정보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개발계획에서 우선순위 분야로 명시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창업펀드 또한 설립될 예정이다.

〈표 4-36〉 필리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전략	내용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Plan 2004~2010 (중소기업 개발계획 2004~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의 주요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 · 생산성 증대 · 산출량 및 매출액 증대 · 수출성장에의 기여 · 새로운 창조적인 기업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Plan 2011~2016 (미소, 소, 중기업 개발계획 2011~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의 주요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 · 사업환경 활성화 · 금융접근성 · 시장접근성 ·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1~2016 (필리핀 개발계획 2011~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의 반부패, 투명성, 책임 및 참여가능성 · 빈곤감소와 취약계층의 역량강화 · 빠르고,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 정의와 평화유지 그리고 법의 지배 ·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성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26.

국가신용위원회에 의해 구축된 미소금융규제 프레임워크는 미소 금융기관의 유형 및 규제의 방식의 명시화를 위하여 2002년에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미소금융기관의 경우 기존의 법령에 따라 필리핀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으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규정에 따라 협동조합발전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금융기관인 보증은행협회는 30억 페소 이상을 대출하는 중소기업금융기관 중 하나로 도 소매업에 대한 대출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중단기 자금에 대한 신용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필리핀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프로그램의 시행, 기술 및 금융에의 접근성 증대, 시장 및 인적자원 개발 등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발위원회를 설립했다. 재정부 산하기관인 국가경쟁위원회는 필리핀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국가의 신용정책결정기관으로 빈민가구와 미소기업을 위한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소금융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미소, 소, 중기업 개발계획 2011-2016’은 2016년까지 필리핀 전체 부가가치의 중소기업 기여분을 40%까지 올리며, 중소기업 부문에서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6) 미얀마

1) 경제현황

미얀마는 자원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 관광객 증대로 2014년에

8.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홍수에 따른 쌀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조 개혁과 사업 환경 개선에 따른 투자 확대로 2015년에는 8.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취약한 세수기반과 더불어 정부의 인프라 투자증대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이며, 2015년에는 인프라 투자 증가, 공무원 임금 인상, 총선 실시 등으로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8%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수출입은행(2015)).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해 자본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천연가스 수출 증가, 섬유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천연가스, 제조업, 교통, 건설 분야 등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외환보유액은 9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수출입은행(2015)).

〈표 4-37〉 미얀마의 경제현황

경제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억달러	556	567	631	658	713
1인당 GDP	달러	1,100	1,112	1,228	1,269	1,364
경제성장률	%	7.3	8.4	8.5	8.5	8.4
국내총투자/GDP	%	18	22.9	25.5	25.2	26.1
실업률	%	4	4	4	4	4
재정수지/GDP	%	-1.7	-1.8	-2.9	-4.8	-4.7
소비자물가상승률	%	2.8	5.7	5.9	12.2	11.8
경상수지	백만 달러	-2,322	-2,960	-3,851	-5,867	-5,895
경상수지/GDP	%	-4.2	-5.2	-6.1	-8.9	-8.3
상품수지	백만 달러	592	-114	-3,005	-2,703	-3,051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6,977	8,278	8,727	9,417	10,002

자료 : 2016 세계국가편람, p.67.

2) 중소기업의 정의 및 위상

가. 중소기업의 정의

미얀마는 2015년 4월 새로운 중소기업의 정의에 관한 법령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종사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먼저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50명 이하이거나 자본금이 5억 차트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종사자 수가 51명 이상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5억 차트 이상 10억 차트 이하인 기업을 중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경우는 종사자 수 600명 미만까지 중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른 산업들의 경우 <표 4-38>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표 4-38> 미얀마의 중소기업 정의

	종류	종업원 수	매출액	자본금
소기업	제조업	50인 이하		5억 차트 이하
	노동집약 제조업	300인 이하		5억 차트 이하
	도매업	30인 이하	1억 차트 이하	
	소매업	30인 이하	5,000만 차트 이하	
	서비스업	30인 이하	1억 차트 이하	
	기타	30인 이하	5,000만 차트 이하	
중기업	제조업	51인 이상 300인 이하		5억~10억 차트
	노동집약 제조업	301인 이상 600인 이하		5억~10억 차트
	도매업	31인 이상 60인 이하	1억~3억 차트	
	소매업	31인 이상 60인 이하	5,000만~1억 차트	
	서비스업	51인 이상 100인 이하	1억~2억 차트	
	기타	31인 이상 60인 이하	5,000만~1억 차트	

자료 : <http://www.smedevelopmentcenter.gov.mm/>

나. 중소기업의 위상

미얀마의 경제는 건설, 제조, 서비스 분야의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자본유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이러한 국가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얀마에는 중소기업에 관한 종합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법령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 위주의 통계는 이용이 가능하다. 회계연도 2014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수는 3만 9,062개로, 전체 등록기업의 87.4%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미얀마의 중소기업들이 활동하는 주요 사업영역으로서, 영세기업 중 제조업이 78%, 서비스업이 20.8%였으며, 영세기업에 속

〈표 4-39〉 미얀마의 중소기업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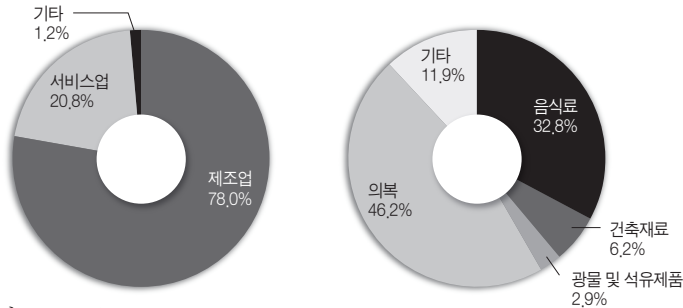
단위 : 개,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소기업 수		40,396	39,272	38,978	38,590	38,654	39,062
비중		91.6	90.3	89.1	88.4	87.9	87.4
증가율		-0.3	-2.8	-0.7	-1	0.2	1.1
영세기업 구성비	제조업	75.6	66.9	78	77.3	79.1	78
	서비스업	22.8	28.2	20.3	19.3	16	20.8
	기타	1.5	4.9	1.7	3.3	4.9	1.2
비영세기업 산업별 구성비	음식료	65.5	64.7	63.9	62.7
	건축자재	7.2	7.8	7.8	7.6
	광물 및 석유제품	4.1	4.3	4.7	5.1
	의류	3.6	3.8	4.1	4.5
	기타	19.6	19.4	19.6	20.1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10.

주 : 본 통계는 사업체 조사의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비공식부문 및 사업체 조사에서 누락된 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그림 4-5〉 미얀마의 중소기업의 가내수공업 및 산업별 구성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10.

하는 않는 중소기업의 산업별 구성비를 보면, 음식료 62.7%, 건축자재 7.6%, 광물 및 석유제품 5.1%, 의류 4.5% 등으로 나타났다.

3) 중소기업 육성정책

미얀마는 2011년 새정부의 출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부문의 민주화가 시작되었으며, 중소기업발전은 미얀마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 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협동조합부, 상무부, 재정부, 국가계획 경제개발부, 과학기술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기관들이 협력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중소기업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2013년에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결합한 중소기업 개발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대통령을 수장으로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는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반명, 실무위원회는 2명의 부통령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의 9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개발전략과 법적프레임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

〈표 4-40〉 미얀마의 중소기업 제도

규정	내용
Private Industrial Enterprise Law No.22/1990 (민간기업법 22호, 1990)	· 사업자 등록 및 규정 · 중소기업의 정의
Law Amending the Promotion of Cottage Industries Law No.14/2011 (영세기업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 14호, 2011)	· 영세기업을 소규모 기업으로 정의
Microfinance Law No.13/2011 (미소금융에 관한 법률 13호, 2011)	· 미소금융 운영에 대한 규정
SME Development Law No.23/2015 (중소기업 발전법 23호, 2015)	· 중소기업 개발기구의 설립 · 중소기업 발전기금의 설립 · 새로운 중소기업의 정의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12.

무위원회가 다루는 9가지 주제는 창업, 금융접근성, 시장공략, 정보접근성 및 조사, 인적자원개발, 중소기업 관련 법령 및 규제, 산업클러스터 구축, 모니터링과 평가, 표준화와 시행 등이다.

산업부가 상무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중소기업 정의를 포함한 중소기업 개발법안은 상무위원회에 의해 고안되었다. 산업부는 또한 타부처 간의 협력과 협조를 통한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하부위원회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가중소기업 정책의 중심기관으로서 아세안 경제통합에서의 미얀마의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2012년에 중소기업개발 중앙국을 만들었다. 중소기업개발 중앙국은 14개 지역에 15개의 지부와 35개의 지소를 가지고 있으며, 부처 간 조정과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수집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발전법은 중소기업 개발기구와 발전기금의 설립과 새로운 중소기업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령하에 중소기

〈표 4-41〉 미얀마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전략	내용
Polic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draft), Ministry of Industry (중소기업 개발정책(안), 산업부)	1) 정책지원분야 · 인적자원 · 기술개발과 혁신 · 금융자원 · 인프라 개발 · 시장 접근성 · 적절한 절차와 세제 · 좋은 사업 환경 2) 중소기업 개발기구의 역할 · 중소기업 등록 · 금융지원 · 시장분석 · 인적자원개발 · 중소기업 개발활동 모니터링(연간보고서) · 중소기업 분석(중소기업 약점 줄이기) · 비금융서비스 촉진(사업개발 서비스) · 중소기업 데이터 수집 · 국제금융기관 및 개발기구, 단체, 비정부 기구와의 연계 · 금융기관과의 협력 3) 장·단기 우선순위산업 전망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212.

업 통계가 집계되는 과정에 있다. 중소기업 개발기구의 설립 이후 산업부는 포괄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되었다. 2015년 4월의 중소기업정책 초안에 따르면, 이 정책은 인적자원, 기술개발 및 혁신, 금융자원, 인프라구축, 시장접근성, 적절한 세제와 절차, 온화한 사업환경 등 7개의 영역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정책 초안에서 중소기업개발기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개발기구의 역할은 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 금융지원, 시장분석, 인적자원개발, 중소기업 개발활동 모니터링, 중소기업의 분

석, 사업개발지원, 중소기업 자료수집, 국제기관과 중소기업의 연계,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7) 라오스

1) 경제현황

라오스는 2014년에 FDI 축소, 통화증가에 대한 규제 등으로 내수시장이 경직되어 7.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5년에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지속 등으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7.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에는 인프라개발을 위한 재정지출 축소, 공무원 복리후생비 축소 등으로 긴축재정을 실시하여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3.8%를 기록했으나, 2015

〈표 4-42〉 라오스의 경제현황

경제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억달러	94	108	117	125	134
1인당 GDP	달러	1,414	1,594	1,693	1,785	1,877
경제성장률	%	7.9	8	7.4	7.5	8
재정수지/GDP	%	-0.5	-5.6	-3.8	-5.3	-6
소비자물가상승률	%	4.3	6.4	5.5	5.3	1.5
재정수지/GDP	%	-0.5	-5.6	-3.8	-5.3	-6
소비자물가상승률	%	4.3	6.4	5.5	5.3	1.5
경상수지	백만 달러	-2,838	-3,003	-3,242	-3,550	-3,057
경상수지/GDP	%	-30.2	-27.8	-27.8	-28.3	-22.7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799	722	875

자료 : 2016 세계국가편람 p.51.

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동 비율이 4.6%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거래측면에서 2014년에는 관광수입 증가, 해외원조 유입 등으로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중이 27.8%를 기록했으며, 2015년에도 관광업 호조의 지속 등으로 동 비율이 28.3%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4년 기준 외환보유액은 8.7억 달러로 1.1개월분의 수입액을 충당할 수 있는 등 대외지급능력이 취약한 상태이다(수출입은행(2015)).

2) 중소기업의 정의 및 위상

가. 중소기업의 정의

라오스는 2011년 새로운 중소기업 진흥 및 개발에 관한 시행령을 통해 새로운 중소기업 정의를 만들었으나, 여전히 2004년에 만들어진 시행령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 매출액, 순자산을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를 구분하고 있다. 먼저 종업원 수 기준으로 4인까지 미소 기업, 5인에서 19인은 소기업, 20인에서 99인을 중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10억 킵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며, 순자산을 기준으로 12억 킵

〈표 4-43〉 라오스의 중소기업 정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순자산
미소 기업	1~4인	1억 킵 이하	7,000만 킵 이하
소기업	5~19인	4억 킵 이하	2억 5,000만 킵 이하
중기업	20~99인	10억 킵 이하	12억 킵 이하

자료 : SMEs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p.5 (tabl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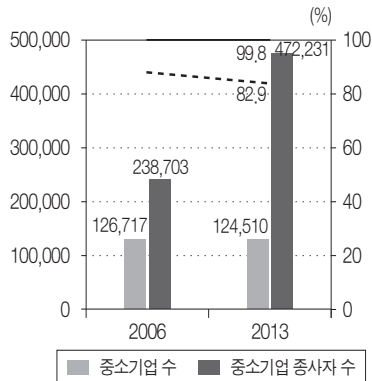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의 범주에 해당된다.

나. 중소기업의 위상

라오스의 중소기업은 라오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은 2013년 472,231명으로 2006년의 238,703명에 비해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고, 동 기간 중소기업의 수는 2006년 126,717개에서 2013년 124,510개로 1.7%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2006년 87.4%에서 2013년 82.9%로 조금 감소했다.⁶⁹⁾

〈표 4-44〉 라오스의 중소기업 현황

		2006	2013
중소기업 수		126,717	124,510
전체기업 수		126,913	124,808
비중(%)		99.8	99.8
산업별 구성비 (%)	1차 산업	3.4	1.7
	제조업	19.1	12.4
	건설	0.5	0.5
	교통	3	2.8
	통신	0.7	0.3
	상업	64.5	62.9
	부동산	0.5	0.6
	서비스	7.8	18.3
	기타	0.5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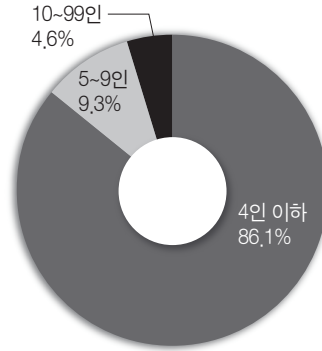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188.

주 : 본 통계는 사업체 조사의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비공식부문 및 사업체 조사에서 누락된 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69) 데이터가 국가 경제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통계는 2006년과 2013년만 이용 가능하다.

〈표 4-45〉 라오스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현황

		2006	2013
중소기업 종사자 수		238,703	472,231
전체 종사자 수		273,126	569,912
비중(%)		87.4	82.9
산업별 구성비 (%)	1차 산업	4.8	2.7
	제조업	22.8	17.4
	건설	1.9	2.0
	교통	3.5	2.7
	통신	1.0	0.8
	상업	51.1	50.4
	부동산	0.6	0.6
	서비스	12.6	21.8
	기타	1.7	1.4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188.

주 : 본 통계는 사업체 조사의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비공식부문 및 사업체 조사에서 누락된 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규모별로는 미소 기업이 86.1%를 차지하고, 소기업과 중기업이 각각 9.3%, 4.6%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수리업)이 2006년 64.5%, 2013년 6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동기간 제조업은 19.1%에서 12.4%로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은 12.6%에서 21.8%로 증가하였다.

3) 중소기업 육성정책

중소기업 부문개발은 라오스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산업화와 현대화의 기반을 위한 핵심정책영역이다. 2004년의 중소기업 촉진 법령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6개의 정책우선순위를 제시하였

〈표 4-46〉 라오스의 중소기업 제도

규정	내용
Decree No. 42/PM/2004 on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중소기업 발전 및 촉진에 관한 시행령 42호, 2004)	· 중소기업 정의(숫자기준), 중소기업 촉진 실행계획의 방향성, 중소기업 진흥 및 개발 펀드설립, 조직화된 제도 등 규정
Law No.011/NA/2011 o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Promotion(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1호, 2011)	· 새로운 중소기업 정의(숫자 기준이 아님)와 중소기업 진흥활동규정
Decree No. 460/G/2012 on Microfinance Institutions(미소금융기관에 관한 시행령 460호, 2012)	· 정부의 미소금융기관과 미소금융 사업에 대한 규제
Regulation No. 02/BOL/2008 for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s(예금 미취급 미소금융기관에 관한 규제 2호, 2008)	· 중앙은행의 예금 미취급 미소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
Regulation No. 04/BOL/2008 for 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s(예금 취급 미소금융기관에 관한 규제 4호, 2008)	· 중앙은행의 예금 취급 미소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191.

다. 규제 및 관리 환경구축, 경쟁력강화, 국내의 시장 확대, 금융접근성 증대, 협회설립을 통한 사업 환경 개선, 사회적인 창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6개 정책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는 ‘중소기업 발전 전략 2006~2010’이라는 중기시행전략을 만들었다.

중소기업 발전전략의 중점분야인 금융접근성 증대를 위해 국영라오스개발은행의 기능을 중소기업은행으로 전환시켰다. 국가차원에서 중소기업 정책수립 기관으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진흥전략과 프로그램 수립에 조언을 하는 국가중소기업 진흥 및 개발위원회, 국가중소기업 진흥 및 개발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 중소기업 진흥·개발국, 국가중소기업 진흥 및 개발위원회의 감독자인 상임위원

〈표 4-47〉 라오스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전략	내용
SME Development Strategy 2006~2010 (중소기업 발전 전략 2006~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성 있는 규제와 관리환경 구축 · 경쟁력 강화 · 국내의 시장의 확대 · 금융접근성 개선 · 사업별 협회설립 유리한 조건 구축 및 독려 · 사회내의 창업정신 강화
SME Development Plan 2011~2015 (중소기업 발전 계획 2011~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에 대한 공공행정과 규제환경 개선 · 금융접근성 개선 · 신규 기업 형성 · 지원 및 사업개발서비스의 증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 강화 ·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성 증대 촉진 · 시장 접근성 강화와 중소기업 시장 확대
SME Promotion Activities by Law(Article 13, Law No.011/ NA/2011 on SME Promotion) (중소기업 진흥활동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환경 활성화 · 금융접근성 · 관세 및 세금에 관한 정책 · 신규기업 발굴 및 개발 · 사업개발 상담 · 중소기업, 대기업, 외국투자회사간의 협력 · 생산성 증대 · 시장 접근성과 규모 확대 · 비즈니스 클러스터링 · 사업지역 분할 · 첨단기술활용 촉진 · 지적재산 보호와 활용 · 정보제공과 접근성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191.

회 등이 있다.

2006년 중반에 정부의 행정개혁 이후, 중소기업 정책 결정의 구조가 변경되었으며, 2011년 중소기업 진흥 법안에 중소기업 진흥기관의 구조가 제시되었다. 국가중소기업 정책 및 전략의 핵심부서로 산업상

무부, 지역수준의 전략 수립 및 시행 기관으로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상공회의소, 협회, 산업클러스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국가중소기업 진흥 및 개발위원회가 국가생산성 위원회와 합쳐져 국가 생산성 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2011년의 중소기업 진흥법안에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정의와 13개의 중소기업 진흥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13개 중소기업 진흥전략에는 사업환경개선, 금융접근성, 관세 및 세금정책, 창업 및 성장, 사업개발자문, 기업 간 협력, 시장에서의 접근성과 시장확대, 생산성 향상, 사업클러스터, 사업지역 조정, 첨단기술촉진, 지적재산권 보호, 정보제공 및 접근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소기업 홍보활동 자금조달을 위한 중소기업 진흥기금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아세안 경제공동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시작된 ‘중소기업 개발계획 2011~2015’에는 다음과 같은 7개의 중소기업 발전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환경과 행정절차 개선, 금융접근성 향상, 새로운 기업형태 발굴, 사업개발 서비스 제공, 기업 간 협력 강화,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성 및 시장확대 등이 그 내용이다.

(8) 캄보디아

1) 경제현황

캄보디아는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격차 해소라는 공동 입장을 견지하며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에는 수출 성장세 둔화에 따라 경

〈표 4-48〉 캄보디아의 경제현황

경제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억달러	141	154	166	177	192
1인당 GDP	달러	946	1,018	1,081	1,140	1,217
경제성장률	%	7.3	7.4	7	7	7.2
국내총투자/GDP	%	23.5	23.5	23.2	22.5	22.7
재정수지/GDP	%	-3.8	-2.1	-1.3	-2	-2.6
소비자물가상승률	%	2.9	3	3.9	1.1	1.8
경상수지	백만 달러	-1,547	-1,880	-2,027	-1,971	-2,031
경상수지/GDP	%	-11	-12.2	-12.2	-11.1	-10.6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4,938	4,995	6,106	7,044	7,639

자료 : 2016 세계국가편람, p.31.

제성장률이 7.0%로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정치적 불안해소, 건설업 호황 등에도 건기 지속에 따른 농업 생산성 감소로 인해 2014년 수준인 7.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취약한 세수 기반 및 국방비 지출증가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증여성 원조자금의 유입 감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무원 급여지출 증가로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이 2.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소비재 및 자본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행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만성 적자 상태이다. 2015년에는 의류 및 신발 등의 상품 수출 및 관광수입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중이 11.1%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70.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수출입은행(2015)).

2) 중소기업의 정의 및 위상

가. 중소기업의 정의

캄보디아는 종업원 수, 순자산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먼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10인 이하를 미소기업, 11인에서 50인을 소기업, 51인에서 100인을 중기업으로 정의한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를 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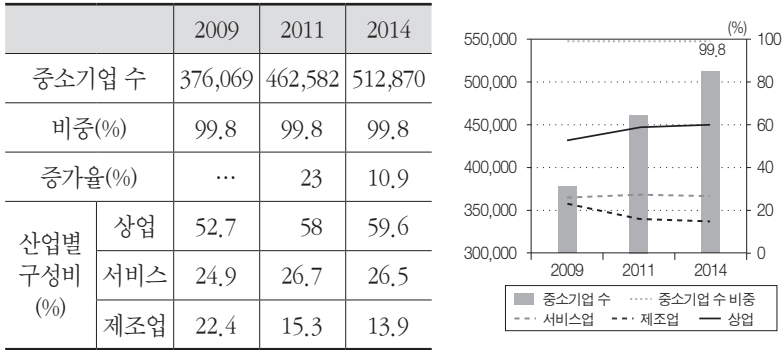
캄보디아의 2014년 중소기업 수는 512,870개로 전체기업의 99.8%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상업부문이 59.6%, 서비스업이 26.5%, 제조업이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년도와 비교해 볼 때 상업부문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제조업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고용측면에서는 전체고용의 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4-49〉 캄보디아의 중소기업 정의

종류	종업원 수	순자산
미소 기업	10인 이하	5만 US\$ 이하
소기업	11~50인	5만~25만 US\$
중기업	51~100인	25만~50만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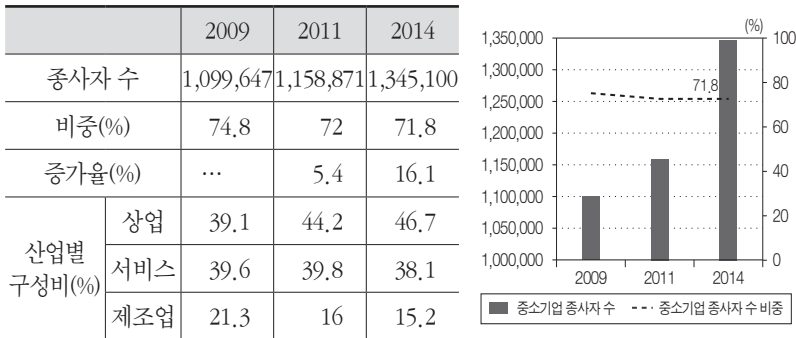
자료 : SMEs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p.5 (table 1.1).

〈표 4-50〉 캄보디아의 중소기업 수 현황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166.

〈표 4-51〉 캄보디아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현황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166.

3) 중소기업 육성정책

캄보디아의 산업 및 수공업부는 중소기업부문의 유일한 규제기관이며 중소기업 사업자등록기관이다. 산업 및 수공업부 산하에는 중소기업국, 수공업국, 중소기업 발전계획국 등 3개의 국이 있다. 산업 및

〈표 4-52〉 캄보디아의 중소기업 제도

규정	내용
The Law on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은행과 금융기관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의 정의 · 은행 및 금융기관에 관한 규정
Prakas on Licensing of Microfinance Institutions(미소금융기관의 허가에 관한 발표)	· 미소금융기관 등록 및 허가
Prakas on Licensing of Microfinance Deposit-taking Institutions(예금취급 미소금융기관의 허가에 관한 발표)	· 예금취급 미소금융기관의 등록과 허가
Prakas on Introduction of Financial Reporting Template for SMEs(중소기업을 위한 재무보고 서식에 관한 발표)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용자에 필요한 중소기업형 서식 제공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168.

수공예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사업자 등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자본금 3,000달러 이상을 보유한 중소창업기업이 사업자 등록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으며, 2~3일 안에 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 및 수공예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포괄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의 기술훈련문제와 중소기업부문의 안전과 품질개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전략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2004년 캄보디아 정부는 성장, 고용, 분배, 효율성 등의 4가지에 대한 ‘4각형 전략’을 발표하였다. 4각형 전략에는 13개의 중소기업 진흥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개발 프레임워크 2005’는 13개의 중소기업진흥정책 시행의 시발점이다. 2008년 정부는 ‘4각형 전략’을 1단계와 2단계로 확장하였다. 1단계의 결과,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의 기준요건이 최소화되었고,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시스템을 간소화시켰으며, 금융기관에 의한 중소기업대출이 증가되었다. 이후 2단계

〈표 4-53〉 캄보디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전략	내용
SME Development Framework 2005 (중소기업 개발 프레임워크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지원과 인센티브 정책 수립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준비 · 중소기업 지원과 촉진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후속조치와 이행과정을 검토 · 중소기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 준비 · 중소기업의 지원 및 촉진과 관련된 요소
SME Development Strategic Framework 2010~2015(중소기업 개발전략 프레임워크 2010~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적합한 조건과 정책기반의 마련 - 설립비용과 사업비용 절감을 통한 사업다각화와 진입촉진 · 기술이전에 관한 정책과 전략 프레임워크를 구축 및 이행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의 기회 창조와 촉진 ·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분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과 법적장치 개발 ·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사업개발서비스 촉진 · 산업 및 중소기업 클러스터 촉진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2014~2024 (산업개발정책 2014~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프레임워크 메커니즘 검토 ·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 · R&D 개발을 위한 기금 설립 · 기술교육훈련 제공 · 중소기업의 거버넌스 강화 · 금융과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 제공 ·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국가생산성본부의 역량개선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4~2018(국가전략개발계획 2014~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환경개선 · 투명한 법 집행을 통한 중소기업의 거버넌스 개선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서비스시스템 정립 · 국가, 지역, 국제적 표준에 부합되는 생산성 수준 ·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 클러스터 구성 · 산업발전정책의 공식화 · 중소기업 발전전략 최신화

(계속)

전략	내용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4~2018(국가전략개발계획 2014~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투자정책 및 산업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민간부문 개발 · 경제특구에 관한 법령 적용 · 주요국도라인에 부합하는 산업 라인 개발추진 · 자원산업, 재정수입관리, 규제, 역량강화, 제도 조율에 관한 개발 프로세스를 강화 · 기술교육이 필요한 산업분야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자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p.168.

로 ‘중소기업 개발 프레임워크 2005’가 시행되었다. 이 프레임 워크는 산업표준개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증대를 위한 회계표준의 적용, 세제혜택, 제도적 역량강화 등을 통한 사업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에 시작된 ‘4각형 전략 3단계’에서는 산업다각화, 중소기업과 수공업업 발전, 지역산업발전, 발굴산업의 개발 및 관리 등을 계속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개발전략 프레임워크 2010~2015’는 중소기업 발전과 산업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5가지 중점 영역을 가지고 있다. 사업환경개선, 기술개발 및 전수, 인센티브 메커니즘, 사업개발 서비스,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이 5가지 중점영역이다.

‘산업개발정책 2014~2024’에는 지역중소기업 진흥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책에는 국내투자와 중소기업개발을 관할하는 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제조업 부문의 투자촉진 메커니즘의 강화와 민관협력, 중소기업발전기금,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채발행, 신용보증메커니즘을 포함한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 정립 등이 포함된다.

3. 소결

지금까지 아세안 8개국의 중소기업의 위상 및 제도,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전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국의 중소기업 정의는 국가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미소기업, 소기업, 중기업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고 있으나 분류상의 차이에 대한 일정한 규칙은 찾아보기 힘들다. 베트남은 한국의 과거 중소기업분류와 유사하게 종사자 수 299인 이하를 중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는 99인 이하로 분류하고 있다. 필리핀과 미얀마는 199인 이하를 중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소기업을 종사자 수나 자산규모 등 특정 기준을 중심으로 나누어 중소기업 ODA 사업의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기업 수나 종사자 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태국의 자동차산업과 같이 특정 부문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토종기업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ODA 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대상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받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은행 등 다국적 개발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정의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⁷⁰⁾ 만약 한국이 중소기업 ODA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

70) Gibson and Van der Vaart(2008)은 국가별, 국제기구별 중소기업 정의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특히 세계은행의 중소기업 정의는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 느슨하다고 비판하였다.

가의 경제상황과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분야의 상황을 고려하고 지원 목적에 적합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금융지원 외에 정책자문이나 산업 및 기업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 정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한국 ODA의 비교우위 분야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의의 면에 있어서 이들 개발도상국의 산업역량 강화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보다는 소기업이나 중기업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모든 취약분야를 ODA를 통하여 지원하기 힘들며, 이들 국가들이 앞으로도 한국의 해외생산기지로서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 ODA의 중점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8개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발전전략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별로 깊이 있는 현장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본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의 자료를 탐색하여 추출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나 제도 및 장기전략에 대한 정책적 이해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지원제도나 전략이 실제 정책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실효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한계로 인하여 평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인터넷 조사 결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하부조직을 찾기 힘들며, 금융지원 외에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가 지향하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현황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가 중소기업에 의한 고용비중이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통하여 추가적인 고용창출을 핵심적인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나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양적인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중요 목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공통적으로 금융접근성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진흥을 기대한다는 점은 같으나, 국가 발전수준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 구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경우 금융부문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5개국의 경우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미얀마 등의 국가는 타 국가에 비해 경제발전이나 그에 따른 정책역량의 발전이 미성숙한 국가로서 이들 국가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관련 정책 수립과 관련 제도 정비가 중요한 이슈임을 시사한다. 반면 태국 등 상대적으로 발전한 국가에서는 이미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나 관련 지원체계가 정착되어 있어 현재 금융접근성 강화 및 아세안 경제통합 이후의 대처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8개국 모두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중소기업의 진흥을 꼽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개발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창업환경조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개발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사업환경조성을 중시하는 편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생성과 성장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저소득국가의 경우 빈곤탈출을 위한 창업육성이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 이슈이지만, 중저소득국가의 경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중소기업 ODA 수요에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ODA 정책 수립에 있어서 수원국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분야가 무엇이고, 수원국의 발전단계 비추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다시 파악하는 것이 ODA의 효과성 제고에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준다. 다음 장에서는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선진국들의 중소기업 ODA의 사업내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중소기업 ODA 정책 방향과 유망 사업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하자.

제5장

주요 선진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중소기업 개발협력

1. 중소기업분야 ODA 현황

(1) 중소기업 ODA 규모

중소기업분야 ODA는 OECD 분류상 산업분야에 해당된다. 2002년에서 2014년 사이 산업분야 총 지출액은 18,198백만 달러이고, 중소기업발전분야(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 development)는 7,556백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41.5%)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발전분야는 일반적으로 범분야 이슈로 인식됨을 미루어 볼 때 중소기업발전관련 ODA 지출액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분야 ODA에서 중소기업 ODA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5-1>과 같다. 2002년 이후 전체공여국의 중소기업 ODA 지출 수준은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2년 7,800만 달러이던 중소기업 ODA는 2011년에는 13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하였으며, 동

〈표 5-1〉 2002~2014년 산업분야 ODA 지출액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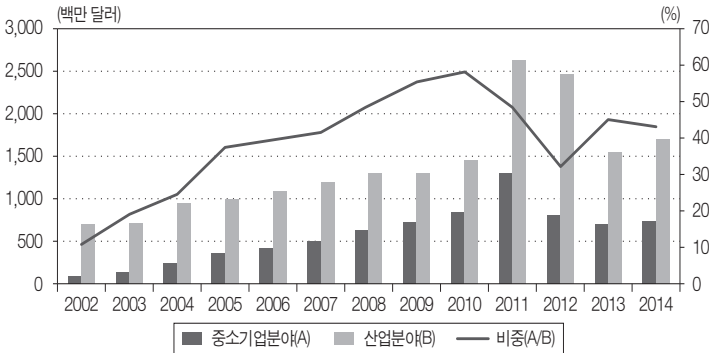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목적	총액	비중
III,2,a. Industry	18,198.2	100.0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 development	7,556.1	41.5
Industrial development	2,511.6	13.8
Industrial policy & admin, mgmt	1,975.3	10.9
Transport equipment industry	1,110.5	6.1
Agro-industries	1,030.0	5.7
Energy manufacturing	843.0	4.6
Technological research & development	838.3	4.6
Chemicals	729.9	4.0
Engineering	671.4	3.7
Cottage industries & handicraft	204.9	1.1
Forest industries	202.0	1.1
Textiles - leather & substitutes	166.3	0.9
Fertilizer plants	151.9	0.8
Basic metal industries	130.8	0.7
Pharmaceutical production	53.6	0.3
Cement/lime/plaster	12.4	0.1
Non-ferrous metal industries	10.1	0.1

자료 : OECD CRS Database.

기간 산업분야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2년 11%에서 2011년 57%까지 증대되었다. 이후 2012년부터는 평균 750백만 달러(약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5-1〉 2002~2014년 중소기업 ODA의 변화



자료 : OECD CRS Database.

(2) 중소기업 ODA 공여현황

국가별 중소기업 ODA 규모를 살펴보면, OECD DAC 국가 중 최대 공여국은 일본으로 2002~2014년 기간 동안 총 1,334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OECD DAC 국가 전체 공여액의 25%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803백만 달러 규모로 15%를 차지하고 있고, 독일,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이 주요 공여국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지원규모 수준은 일본의 지원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OECD DAC 국가 중 19위에 해당하는 11백만 달러의 지원을 하였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국제기구의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개발분야 최대공여기관은 EU로서 2002년에서 2014년 사이 1,553백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국제기구의 전체 지원액의 67.6%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세계은행그룹(WBG) 429백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sDB) 154백만

〈표 5-2〉 2002~2014년 주요 공여국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공여국	지원규모		비중
		총액	평균	
1	일본	1,334	102.58	25.36
2	미국	803	61.74	15.26
3	독일	463	35.58	8.80
4	영국	447	34.40	8.50
5	이탈리아	346	26.61	6.58
6	덴마크	303	23.29	5.76
7	스페인	280	21.53	5.32
8	캐나다	245	18.81	4.65
9	스위스	228	17.58	4.34
10	프랑스	218	16.75	4.14
11	벨기에	129	9.96	2.46
12	스웨덴	102	7.84	1.94
13	네덜란드	100	7.68	1.90
14	노르웨이	93	7.16	1.77
15	오스트리아	57	4.41	1.09
16	호주	39	3.03	0.75
17	핀란드	38	2.96	0.73
18	뉴질랜드	13	0.97	0.24
19	한국	11	0.86	0.21
20	룩셈부르크	5	0.37	0.09

자료 : OECD CRS Database.

달러, 미주개발은행(IDB) 114백만 달러 순이었다. 아프리카 개발기금(AfDF)과 유엔개발계획(UNDP)도 지원을 하고 있으나 각각 30백만 달러, 9백만 달러로 상위 3개 기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표 5-3〉 2002~2014년 주요 공여기관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공여국	지원규모		비중
		총액	평균	
1	EU	1,554	119.52	67.64
2	WBG	429	32.97	18.66
3	AsDB	154	11.81	6.69
4	IDB	114	8.81	4.98
5	AfDF	30	2.32	1.31
6	UNDP	9	0.67	0.38

자료 : OECD CRS Database.

(3) 중소기업 ODA 수원현황

지역별 중소기업 ODA 수원규모를 살펴보면, 2002년에서 2014년 사이 총 지출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지역은 3,237백만 달러(약 43%)의 지출이 이루어진 아시아대륙이다. 그 다음으로 아프리카대륙이 2,149백만 달러로 약 28%, 아메리카대륙이 1,022백만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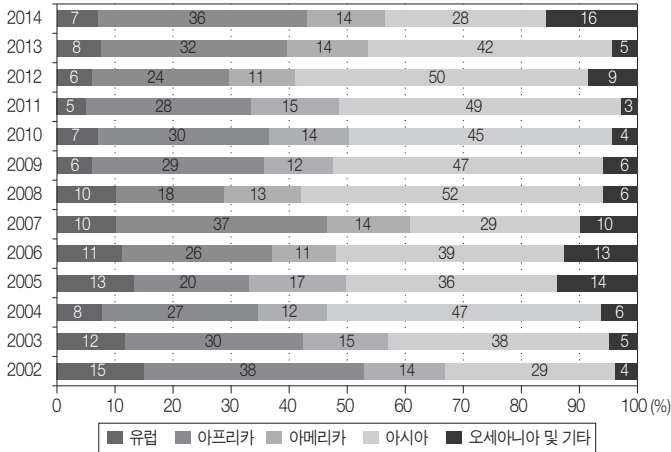
〈표 5-4〉 2002~2014년 대륙별 중소기업 ODA 수원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대륙	수원규모		비중
		총액	평균	
1	아시아	3,237.1	249.00	42.84
2	아프리카	2,149.3	165.33	28.45
3	아메리카	1,022.4	78.64	13.53
4	유럽	584.3	44.94	7.73
5	오세아니아 및 기타	563.0	43.31	7.45

자료 : OECD CRS Database.

〈그림 5-2〉 2002~2014년 대륙별 중소기업 ODA 수원액 비중의 변화



자료 : OECD CRS Database.

러로 13%의 지출비중을 나타냈다.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의 핵심추진요소는 중소기업의 발전이며, 이에 따라 저개발국가에 많은 대륙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빈곤한 지역인 아프리카에 비해 아시아지역에 중소기업발전분야 ODA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발전단계가 너무 낮아서 나온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5-2〉는 대륙별 중소기업 ODA 수원액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이후 아프리카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시아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주요공여국과 국제기구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프리카의 사회인프라와 경제인프라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사료된다.

수원국의 수원규모를 살펴보면 중소기업개발 ODA분야 최대수원

〈표 5-5〉 2002~2014년 중소기업 ODA 주요 수원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원국	수원규모		비중
		총액	평균	
1	인도	789.38	60.72	10.45
2	베트남	634.14	48.78	8.39
3	방글라데시	236.65	18.20	3.13
4	튀니지	213.32	16.41	2.82
5	아프가니스탄	157.90	12.15	2.09
6	스리랑카	156.39	12.03	2.07
7	세르비아	150.18	11.55	1.99
8	몽골	124.27	9.56	1.64
9	가자지구	113.36	8.72	1.50
10	이집트	109.43	8.42	1.45
11	케냐	101.12	7.78	1.34
12	가나	92.80	7.14	1.23
13	레바논	91.84	7.06	1.22
14	알제리	89.51	6.89	1.18
15	파키스탄	89.36	6.87	1.18
16	이라크	88.58	6.81	1.17
17	아이티	88.15	6.78	1.17
18	니카라과	84.44	6.50	1.12
19	모잠비크	79.59	6.12	1.05
20	나이지리아	79.38	6.11	1.05

자료 : OECD CRS Database.

국은 인도로서 2002년에서 2014년 사이 약 789백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이는 전 세계 중소기업개발 ODA분야 전체 수원액의 약 10.5%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 634백만 달러(약 8.4%), 방글라데시 236백만 달러(약 3.1%) 순이었다. 수원규모 상위 3개국은 물론 상위 20개국 중 9개국이 아시아 국가로, 지금까지 중소기업개발 ODA

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라, 중소기업개발 ODA는 개발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저개발국가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진공여국들과 국제기구들은 개발협력의 핵심으로 빈곤감소를 내세우고 있고,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통한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국가의 생산과 고용의 주축이 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개발 ODA의 추진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민간부문개발(PSD)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공여국들과 국제기구들은 중소기업개발 ODA를 추진하는 데 있어, 민간부문개발(PSD)라는 공통분모 하에 자국의 비교우위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ODA 지원전략과 공여사례들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중소기업 ODA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주요 공여국의 중소기업 ODA 현황과 지원전략

(1) 일본

1) JICA(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은 공적개발원조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세계 5대 공여국으로서 높은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UN이 15년간 유지해오던 새천년 개발 목표(MDGs)에 이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

〈표 5-6〉 일본의 개발협력헌장(2015)

아젠다	내용
질적성장 및 불평등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다운 삶의 보장 관점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로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탄력적이고 빈곤 해소에 기여하는 성장으로 정의 · 수혜국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활동으로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의 제공, 기후변화 완화, 인적 자원 개발, 사회경제적 인프라 개발, 재해위험 감소 등이 있음
평화구축지원과 보편적 가치의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 남수단, 시리아 등 분쟁 지역에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음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실제적 개입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의 MDGs나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의미 ·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및 전염병에 대한 대응 노력, 재해 위험 감소를 위한 노력 등을 포함
전략적 파트너십의 확산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개발 자원을 찾아내고 개발 효과를 극대화 · 민간기업, 지방정부,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강화
개발도상국 여성의 사회 및 경제적 지위 향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지원하는 원조사업에 여성 참여와 리더십을 장려

자료 : JICA (2015), JICA 2015 Annual Report, pp.19~20.

표(SDGs)를 새롭게 공표한 2015년에 일본은 개발협력헌장(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을 제정하고 ODA 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개발협력헌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에게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며, 질적 성장, 평화구축, 글로벌 이슈에의 개입, 전략적 파트너십의 확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의 다섯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JICA는 일본의 ODA 사업의 핵심기관으로서 지역별로 핵심지원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표 5-7〉은 JICA의 핵심지원전략을 지역별로 정리한 것으로, JICA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지역은 아시아지역

이다. 세부적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개발협력현장의 다섯 가지 내용을 모두 핵심지원전략으로 채택하였으며, 태평양 지역은 환경 및 재해와 관련된 지식 및 경험 공유, 동아시아는 지역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중앙아시아는 역내 협력, 남아시아는 질적인 성장실현, 빈곤 감소, 평화구축,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재난방지 등을 핵심 지원전략으로 하고 있다. 한편, JICA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경제적 기반시설의 질 제고, 지속가능하고 탄력성 있는 사회 구현, 포괄적 개발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 등을,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성장 지원과 포괄적 개발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중동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삶의 보장과 평화구축, 질적 성장 제고, 친환경적 기여 및 신흥 공여국과의 협력을, 유럽에 대해서는 평화 공화, 산업 발전 및 환경보존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표 5-7〉 JICA의 지역별 핵심지원전략(2015)

지역	배경 및 핵심지원전략
동남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에 따른 인프라 개발 및 투자 수요 증가, 고령화, 도시화, 국가간 개발격차 축소, 고등교육의 질 보장 등 다양한 이슈가 부상 중임 · 전략적 중요성, 현안의 다양성, 지리적 접근성 등이 존재함 · 일본의 ODA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개발협력현장의 다섯 가지 내용을 모두 핵심지원전략으로 채택
태평양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규모의 토지와 인구, 지역적 고립성, 세계 시장과의 제한적 접근성이 특징적임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취약하며, 경제위기나 식량, 자원위기에도 민감함 · 주로 환경이나 재해 관련 영역에 대한 일본의 지식 및 경험 공유를 주요 전략으로 하여 지원 사업을 실시 중임 · 친환경 경영, 재해 위기관리, 기후변화 대응, 해상교통수단 건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보건의료 기술 지원 등이 있음

(계속)

지역	배경 및 핵심지원전략
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안정적 발전은 안보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지역적 안정성 유지와 건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이 핵심지원전략임
중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가교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중임 ·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 내 협력 증진을 핵심지원전략으로 설정함 · 발전소, 교통 인프라, 민간영역 활성화를 통한 시장경제 증진 사업 등을 추진 중
남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종교, 인종, 문화, 언어 등이 공존하며, 소득불평등, 종교분쟁, 자연재해 등에 따른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임 · 핵심지원전략으로는 질적 성장과 빈곤 감소, 평화구축과 재건, 환경 문제 및 기후변화예의 대응, 재난위험 감소 등이 있음
라틴아메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빈곤과 자연재해에 노출된 일부지역이 있으며, 1차 상품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세계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음 · “중위소득의 덩” 극복을 위한 경제기반시설의 질적 향상,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인간다운 삶을 위한 포괄적 개발 증진 등이 핵심지원전략임
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발전이 더디고 전염병, 내전, 테러 등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임 · 건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포괄적이고 회복력 있는 사회, 평화와 안정을 지원사업의 세 가지 축으로 설정함 ·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역동적인 성장 지원, 포괄적 지원을 통한 인간적인 삶의 보장이 핵심지원전략임
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임 · 인간적인 삶의 보장과 평화구축 증진, 질적 성장 제고, 친환경적 기여 및 신흥 공여국과의 협력이 핵심지원전략임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유럽 및 동유럽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평화 공고화, 산업 발전 및 환경 보존을 핵심지원전략으로 삼고 있음

자료 : JICA (2015), JICA 2015 Annual Report, pp.22-63.

2) 일본의 중소기업 ODA 현황

개발협력현장의 세부목표전략 중 질적성장, 전략적 파트너십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인 중소기업 ODA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크다. 중소기업 ODA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에서 2007년 사이 약 10% 수준에서 2008년 이후 비중이 급증하여 2008년 38%, 2012년 39%로 증대되었다.

2002년에서 2014년 기간 일본이 실시한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은 총 1,245건으로 총 지출액은 1,333백만 달러이다. 공여형태로는 유상원조가 54건, 무상원조가 1,199건이었고, 지출액은 각각 1,194백만 달러, 139백만 달러였다. 주요 수원국은 인도,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표 5-8〉 2002~2014년 일본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DAC 전체	75	132	221	281	325	336	489	477	511	871	547	482	512
일본	10	5	30	21	26	33	186	143	160	315	213	101	90
비중	13.6	3.7	13.4	7.4	8.1	9.9	38.0	30.1	31.2	36.2	39.0	21.0	17.5

자료 : OECD CRS Database.

〈표 5-9〉 일본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상위 5개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건수

순위	국가	지원액	프로젝트 건수
1	인도	675	30
2	베트남	274	71
3	스리랑카	100	16
4	몽골	90	34
5	방글라데시	42	19

자료 : OECD CRS Database.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튀니지, 에티오피아, 가나,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다.

다음의 <표 5-10>은 2002년에서 2014년 기간 일본이 실시한 중소기업 발전관련 프로젝트 중 지출액이 천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들을 보여주고 있다. 천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지원이 이루어진 인도의 “미소&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시리즈는 인도중소산업은행(Small Industries Development Bank of India)의 금융지원, 주요대출기관과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인도중소산업은행의 채용자 방식, 금융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추진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환경개선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충격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몽골은 일본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가 4번째로 큰 국가로 9천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상위 5개국 중 가장 많은 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JICA는 자연 관리, 기업 경영, 공항 건설 사업, 중소기업 지원,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JICA는 2012년 4월 발표된 몽골지원 국가전략에 포함된 3개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2단계 프로젝트”가 있다. 2011년부터 진행된 2차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금리 장기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의 다양화를 지원하고, 도시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기업들의 환경개선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였다. 또한, 2014년까지 480개 이상의 회사에

〈표 5-10〉 2002~2014년 일본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단위: 백만 달러

수원국	프로젝트 명	금액	연도	기관
인도	미소&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2	188.2	2011	JICA
인도	미소&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1	127.7	2009	JICA
인도	미소&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1	125.6	2008	JICA
인도	미소&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2	103.5	2012	JICA
베트남	중소기업 금융프로젝트 3	95.5	2010	JICA
베트남	중소기업 금융프로젝트 3	64.4	2011	JICA
인도	미소&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1	57.8	2010	JICA
몽골	중소기업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2단계 프로젝트 2	35.1	2012	JICA
베트남	중소기업 금융프로젝트 1	34.7	2008	JICA
인도	미소&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2	33.9	2014	JICA
인도	미소&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2	32.2	2013	JICA
스리랑카	미소기업&소기업 산업리더 및 창업추진 프로젝트	28.4	2004	JBIC
베트남	중소기업 금융프로젝트 3	25.6	2012	JICA
스리랑카	미소기업&소기업 산업리더 및 창업추진 프로젝트	24.7	2006	JBIC
스리랑카	미소기업&소기업 산업리더 및 창업추진 프로젝트	19.5	2007	JBIC
베트남	중소기업 금융프로젝트 1	18.2	2005	JBIC
몽골	중소기업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2단계 프로젝트 1	17.3	2008	JICA
방글라데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금융 프로젝트	14.4	2014	JICA
방글라데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금융 프로젝트	14.0	2013	JICA
방글라데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금융 프로젝트	12.5	2012	JICA
튀니지	민간투자 보증 프로젝트	12.0	2011	JICA
몽골	중소기업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2단계 프로젝트 2	10.7	2011	JICA
베트남	중소기업 금융프로젝트 3	10.5	2013	JICA
스리랑카	미소기업&소기업 산업리더 및 창업추진 프로젝트 2	10.1	2002	JBIC

자료: OECD CRS Database.

대한 금융지원과 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⁷¹⁾

71) JICA(2015), 2015 Annual Report, pp.33~34.

3) 일본의 GVC(Global Value Chain)

선진공업국인 일본은 전자, 자동차 산업의 강국으로 해외생산기지 건설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GVC에의 편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공공개발원조에 있어서도 이런 기조가 담겨 있다. 일본의 개발원조의 기본 기조는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자국의 기업에 이익이 되는 원조 사업의 추진에 있다. 개발협력과정에서의 자국의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세계 2위의 공여국으로서 수원국의 경제개발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JICA는 필리핀 무역산업부와 협력하여 필리핀의 자동차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⁷²⁾ 2016년 ‘필리핀 자동차 산업 발전 의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JICA와 무역산업부는 “가치사슬분석을 활용한 산업진흥 구체화”라는 2개년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JICA는 제조업 촉진과 현지 인력을 대상으로 한 고용창출 지원을 통해 포괄적인 필리핀 발전의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필리핀 자동차 관련기업들이 GVC로의 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자동차 산업은 국내경제의 연계 성장화와 지식이전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와 더불어 기술협력 프로젝트인 “포괄적인 자동차산업

72) 일본은 이미 오래 전에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관련된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것이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자동차 산업발전에 기여하였다.

재기 전략(CARS)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부품의 제조에 대한 투자지원과 대량생산과 물류효율의 촉진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12억 달러의 신규투자를 통해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액을 92억 달러까지 높여서 내수를 촉진하고, 산업규제의 효과적인 조정을 통해 필리핀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⁷³⁾

(2) 미국

1)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은 세계최대의 ODA 공여국으로 2010년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강력한 민간부문 재건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개발에 대한 대통령 정책 지침”의 시행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을 국방, 외교 등과 함께 국가의 외교정책의 3대 축으로 천명하고, 개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들을 찾고 있다. “글로벌 개발에 대한 대통령 정책 지침”은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의 3대 핵심전략문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개발, 국방, 외교의 포괄적인 접근과 상호강화 및 보완, 지속가능한 개발성과에 초점, 수원국의 주인의식의 중요성과 지리적, 부문별 초점에 맞는 효율적 분업모형 개발, 새로운 역량강화를 위한 체재 모색 등이다(이효정 (2015)).

USAID는 1961년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장기 원조 기관

73) <https://www.jica.go.jp/philippine/english/office/topics/news/160530.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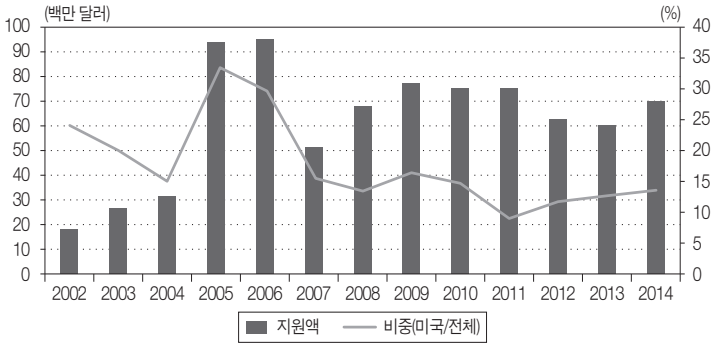
설립규정(Foreign Assistance Act)의 제정과 외국원조법안의 승인으로 설립된 미국의 개발원조 총괄기구이다. 식량안보,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및 오염배출의 감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민주주의, 인도지원, 분쟁감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술 및 차관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지역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 아시아, 중남미와 카리브해, 유라시아, 중동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세계적인 지원을 위해 프로젝트 사업(인프라, 물자), 기술지원(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장학금), 식량지원, 긴급재난복구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이효정(2015)).

민간부문개발 지원측면에 있어서 전문성과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GVC로의 편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사업환경개선, 개발기금, 인프라 등에 중점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치사슬을 강조하고 민관협력(PPP) 메카니즘을 활용하고 있다(박영호(2015)).

2) 미국의 중소기업 ODA 현황

미국은 중소기업 ODA 규모에 있어 일본에 이어 2002년에서 2014년 기간 803백만 달러를 지원한 2위의 공여국이다. 다음의 <그림 5-3>은 연도별 미국의 중소기업개발 ODA 지원액과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면 지원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에서 2014년 기간의 비중은 평균 12.5% 정도로 2002년에서 2004년의 평균

〈그림 5-3〉 2002~2014년 미국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변화



자료 : OECD CRS Database.

인 약 19.3%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미국의 중소기업 개발 ODA가 줄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중소기업 분야의 범분야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와 국가에 지원을 하는 미국의 원조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 녹아들어 있는 미국의 실제 중소기업개발관련 지원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의 〈표 5-11〉은 미국의 중소기업개발 ODA 지원액 상위 10개 국가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동, 중앙아시아의 국가가 다수 포함되며, 유럽, 아프리카의 국가에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70백만 달러를 지원한 이라크와 47백만 달러를 지원한 팔레스타인(가자지구)의 경우, 전쟁 후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지역경제 및 농촌지역의 발전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 혹은 중저소득국가의 경우 국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

〈표 5-11〉 미국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상위 10개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건수

순위	국가	지원액	프로젝트 건수	지역
1	이라크	70	15	중동
2	아프가니스탄	57	7	중앙아시아
3	파키스탄	56	24	중앙아시아
4	우크라이나	52	48	유럽
5	아제르바이젠	49	38	중앙아시아
6	가자지구	47	25	중동
7	키르기스스탄	32	37	중앙아시아
8	이집트	26	34	아프리카
9	타지키스탄	22	30	중앙아시아
10	탄자니아	21	48	아프리카

자료 : OECD CRS Database.

고, 또한 지역 내 생산활동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의 대부분이 이런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 및 지역의 성장은 경제발전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농민, 중소기업, 저소득 가게 및 여성에 대해 금융서비스, 기술전수, 환경개선, 직업훈련 등의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표 5-12〉는 그동안 미국이 중소기업 ODA분야에 실시한 주요 프로젝트의 사례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표 5-12〉 2002~2014년 미국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미국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사례
<p>■ 농촌 금융 협동 조합 개발 -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아프가니스탄)</p> <p>본 프로젝트는 아프가니스탄 동·남부 지역의 농민, 중소사업자, 저소득가계, 여성 등의 금융서비스(저축과 대출)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목표는 자생가능하며 아프가니스탄이 소유하고 조정하는 협동조합 금융시스템의 설립을 위한 WOCCU의 노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는 이슬람 투자 혹은 금융협동조합과 같은 풀뿌리 금융네트워크의 소유와 운영을 조합원들에게 맡기고 선출된 지역원로회가 관리하는 것이고, 2단계는 국가기관이 외부감사와 감독, 기술지원, 외부자본에 대한 접근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p>
<p>■ 아프가니스탄 중소기업개발(ASMED) -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아프가니스탄)</p> <p>아프가니스탄 중소기업개발 프로젝트(ASMED)는 국가 경제발전의 주요인인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 기술 및 사업개발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확대와 고용증대가 이루어졌으며, 민간부문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졌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농업관련 산업, 카페트, 대리석, 보석,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핵심부문에서의 아프가니스탄 민간부문과 국제파트너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민관협력(PPP), 보조금, 실용적인 기술교육 등이 촉진되었다. 마지막으로 25개 중점지역의 중소기업 간의 전문적이고 상업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이루었다.</p>
<p>■ 캄보디아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II/사업 가능한 환경조성 -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캄보디아)</p> <p>이 프로그램은 캄보디아 인구의 80%가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환경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협회의 발전을 요구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6,000개 이상의 기업의 역량을 강화, 1만 가구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 7만 5천 헥타아르의 산림지역에 대해 천연자원을 관리하고, 또한 민간부문의 사업 가능한 환경개선을 위해 30개의 법률과 규정을 수정하였다.</p>
<p>■ 연방직할부족지역(FATA) 생활 발전 프로그램 - 중소기업의 생산성 강화(파키스탄)</p> <p>파키스탄의 연방직할부족지역(FATA) 생활 발전 프로그램은 농업, 인력개발, 중소기업 등 세 가지 핵심 부문에서 지역민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사회 상황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직업 및 도제훈련, 기초학력개발, 대학 및 기술학교 장학제도,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잠재적인 고용대상층인 청소년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지역 인프라 건설과 재활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향상을 목표로 하였으며, 지역민에게 특화된 훈련과정, 장비지원, 개선된 생산 및 마케팅 기회 등의 제공을 통해 농업기업과 비농업기업의 역량을 개선하였다.</p>

(계속)

 미국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사례

■ 기업가정신 개발 프로젝트 - 중소기업의 생산성 강화(파키스탄)

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가, 특히 여성 기업가에게 시장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진행되었다. 지역 민간단체, 정부기관, 비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나염직물, 유제품, 꿀, 약용 아로마 부분의 7만 5,000명의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 금융서비스에의 접근성 확대와 유지(ESAF) 프로젝트 - 중소기업의 생산성 강화(가자지구)

금융서비스 지속 및 확대 프로젝트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계,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에의 접근성 증대를 위해 가자지구에 포괄적인 금융서비스 부문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기반 프로그램은 경제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구축에 다양한 역할을 하였다. 첫째, 국가 및 규제환경 측면에서 국가 미소금융 프레임워크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 둘째, 소매업 측면에서 은행, 미소금융기관, 비정부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였다. 셋째, 소비자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은 금융교육과 소비자 보호활동을 통해 금융부문의 개인의 참여와 인식을 높였으며, 재기하려는 중소기업가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고정자본 금융지원 메카니즘이 포함되어, 중소기업의 장비 업그레이드 자금을 지원하고, 합작투자와 기술이전을 돕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자금유입 촉진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등을 하였다.

■ 새로운 경제 기회 - 중소기업의 생산성 강화 (가자지구)

이 프로젝트는 농촌지역의 소득향상, 빈곤수준하향, 식량안보개선, 실항민 지역사회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사회의 소규모 경제 인프라의 제약 해결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첫째 지역 경제 개발 계획, 둘째 농촌경제개발, 셋째 취약가구 및 개인의 역량강화 지원, 넷째 미국정부의 지원을 통해 재할하고 있는 실항민 가구의 지속을 위한 프로모션으로 구성된다.

 자료 : OECD CRS Database.

3) 미국의 중소기업 ODA 사례 : 창업지원

개발협력분야 최대 공여국인 미국은 그 위상에 걸맞게 전 분야 및 지역에 걸쳐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개발 ODA에서도 비교우위

분야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타 공여국이 덜 지원하고 있는 부문을 비교우위 분야로 간주한다면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사례로는 마케도니아에서 2011년에 1월에 시작하여 2013년 12월까지 진행했던 “창업센터구축사업-Bitola”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마케도니아 남부지역의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신규창업의 촉진과 더불어 기존의 미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강화를 촉진, 취약한 실업상태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기회의 제공, 기업인큐베이터와 공공, 민간, 시민사회 및 교육분야 등의 지역파트너 등을 통해 미소기업 및 중소기업 발전의 지역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⁷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크게 3분야로 구성되는데, 창업과 지원, 기업인큐베이터의 개발과 지속, 지역의 경제개발 협력 등이다. 첫째, 신규창업과 등록을 촉진하고 기존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미소기업 및 중소기업과 인적자원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였는데,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경쟁, 교육포트폴리오, 인적자원개발서비스, 신용대출, 컨설팅, 기술이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공여자에 대한 의존도를 차츰 줄이기 위해 창업지원센터의 재무 및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수익원 개발, 공간과 기능의 확대, 비용공유, 비용절감, 주주 및 파트너의 투자 증대 등을 추가하였다. 셋째, 지역 경제협력력을 통해 공공, 민간, 시민사회, 학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켰다.

프로젝트 실행 결과, 77개의 신생기업이 창업하였으며, 68개의 기존

74) <https://www.usaid.gov/macedonia/fact-sheets/business-without-borders-project>

기업의 성과가 개선되었다. 또한 276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으며, 그중 절반 정도의 일자리를 여성이 차지하였다.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의 지원을 위해 창업센터는 66개의 훈련사업을 수행하였으며, 1,139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추후 USAID의 “청년 고용 가능 기술 네트워크”, “소기업 확장 프로젝트”와 개발신용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전반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시너지를 낼 것으로 사료된다.

(3) 독일

1) BMZ(Federal Ministr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는 개발협력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개발협력정책의 수립·시행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독립기관이다. 독립기관으로 분리하여 설립한 이유는 외교적 측면에 기인한다. 외교문제를 관할하는 외무부가 대외원조를 관할할 경우 동독과의 외교문제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외교와 구분하여 개발원조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BMZ의 주요기능으로는 개발원조 정책의 입안 및 시행, 타 부처와의 원조정책 조정, 개발협력 사업 운영 및 평가 등이 있다. BMZ는 독일 개발협력의 중추기관으로서 시대에 따라 정책수행의 이유는 꾸준히 변화하였으나, 핵심목표인 빈곤퇴치의 추구를 통해 독일이 개발협력분야에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공여국의 위상을 가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1년에 시작된 독일의 개발협력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

〈표 5-13〉 통일독일 이후의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개발협력정책의 단계	내용
전독일의 과제가 된 단계 (1991~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 갈등 종식 이후 개발협력정책은 새로운 국면 · 전 세계적인 변화(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지침을 개발 · 인권 존중, 정치 참여, 법적 안정성 및 법치국가 보장, 시장경제적이며 사회복지를 보장, 굿거버넌스 등 5대 영역의 기본 조건을 전제로 수행 · 빈곤 퇴치가 개발협력 정책의 핵심 과제로 대두
국제적인 구조정책단계 (1998~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구조 정책을 목표로 개도국들의 정치·경제·사회·환경 부문의 개선과 국제 질서 정책 수립에 기여 · 외교안보 정책과 개발정책이 안정적 국제관계를 위한 동급의 도구로 평가되면서 제도적 측면에서 더 높게 평가 · 국제화되고 다자적으로 변화
자유주의 시대의 단계 (2009~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강력한 기업이 정신을 바탕으로 한 개발정책 · 양자 간 개발협력 관계에 초점 · 민간 경제부문 주체들의 개발협력참여의 중요성 · 유럽의 개발협력 정책에의 편입

자료 : 미하일보네트(2013) 정리.

화가 이루어졌다. 개발협력 초기에는 주로 외교정책, 경제정책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개발협력 정책의 실현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대외무역에서의 이해관계를 중시하였다. 1968년 이후 도구로 사용된 개발협력정책의 기능은 약화되고 과거의 인프라구조 개발 위주의 사업에 맞추어져 있던 초점이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며 지속성과 친환경성이 중요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윤리성, 인도주의, 연대성 등이 개발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었으며, 보건, 식량, 환경, 여성 등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1990년 통일 이후 동독의 개발협력 사업은 서독의 개발협력 정책 시스템에 통합되었으며, 동독의 프로젝트 중 60%만이 통일 이후에

도 계속 유지되었다. 기존의 지정학적 전략의 차원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상황이 개발협력 강도와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1998년 이후 개발협력 정책은 국제적인 구조 정책으로 발전되었으며, 개발도상국가의 정치·경제·사회·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의 국제 질서 정책 수립에의 기여 형태로 다자화되었다. 2009년 이후 개발협력의 형태가 양자 간 협력으로 전환되었고, 민간부문의 참여가 활성화되었다.

2) 독일의 중소기업 ODA 현황

독일은 중소기업 ODA 규모에 있어 일본, 미국에 이어 2002년에서 2014년 기간 462백만 달러를 지원한 3위의 공여국이다. 다음의 <표 5-14>는 연도별 독일의 중소기업개발 ODA 지원액과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전체 중소기업개발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 이상으로 2002년에서 2014년 기간의 평균인 8.8%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9년에서 2011년 기간은 평균 3.8%로 대단히 낮은 수준이었다. 전반적인 비중의 추세는 2010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2011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14> 2002~2014년 독일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DAC 전체	75	132	221	281	325	336	489	477	511	871	547	482	512
독일	4	26	43	31	33	34	40	21	17	30	41	87	55
비중	5.3	19.4	19.5	11.2	10.3	10.2	8.1	4.4	3.3	3.5	7.6	17.9	10.8

자료 : OECD CRS Database.

〈표 5-15〉 독일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상위 7개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건수

순위	국가	지원액	프로젝트 건수	지역
1	인도	75	50	아시아
2	멕시코	28	7	아메리카
3	인도네시아	19	29	아시아
4	아프가니스탄	17	5	아시아
5	세르비아	16	14	유럽
6	베트남	15	27	아시아
7	세네갈	15	13	아프리카

자료 : OECD CRS Database.

2002년에서 2014년 기간 독일이 실시한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은 총 911건으로 총 지출액은 462백만 달러이다. 공여형태로는 유상원조가 7건, 무상원조가 894건, 지분투자가 10건이었고, 지출액은 각각 64백만 달러, 297백만 달러, 101백만 달러였다. 주요 수원국은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세르비아, 베트남 등이었으며, 특히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인도의 경우 총 50건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75백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다음의 〈표 5-16〉은 독일의 중소기업 관련 프로젝트를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나열한 것이다. 독일재건은행(KfW)와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가 많은 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독일투자공사(DEG), 독일국제교류협력단(GIZ) 등도 프로젝트 일부를 진행하였다.

독일재건은행(KfW)은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관련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해 일반 상업은행과 연계하여 대출하는 기관으로 녹색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일반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일반은행은 녹색분야에 대해 대출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기관이다. 배

출권 구매 목적의 KfW 탄소펀드(Carbon Fund)를 운용하여 감축의무는 있으나 중소기업과 같이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저비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해외지사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품력

〈표 5-16〉 2002~2014년 독일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단위: 백만 달러

수원국	프로젝트 명	금액	연도	기관
인도	환경 보존 프로젝트 VII	35.6	2013	KFW
멕시코	중소기업 발전 프로젝트	27.7	2013	DEG
아프가니스탄	북부지역과 카불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7.6	2012	BMZ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의 지속가능한 성장 프로젝트(SEGIN)	7.4	2011	BMZ
아프가니스탄	북부지역과 카불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7.4	2013	BMZ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중소기업 촉진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7.4	2008	BMZ
마케도니아	중소기업 촉진 프로젝트	6.4	2003	KFW
세르비아	중소기업 촉진 프로젝트	6.2	2004	KFW
아르메니아	미소기업과 중소기업 촉진 프로젝트	5.6	2004	KFW
인도	미소기업과 중소기업 보호 프로그램	4.3	2012	BMZ
세르비아	유럽 재금융 기금 II	4.0	2003	KFW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신용 보증 기금	3.5	2007	KFW
인도네시아	지역경제 발전 프로젝트	3.1	2014	BMZ
인도	미소기업과 중소기업 보호 프로그램	3.0	2013	BMZ
네팔	포괄적 경제발전 프로젝트	2.9	2014	BMZ
인도	중소기업 금융과 발전	2.9	2008	BMZ
몽골	지역 경제 발전 프로그램	2.9	2009	BMZ
인도네시아	지역 경제 발전 프로그램	2.7	2008	BMZ
스리랑카	미소기업과 중소기업 촉진 프로젝트	2.7	2006	GIZ
베트남	미소기업과 중소기업 촉진 프로그램	2.7	2007	BMZ

자료: OECD CRS Database.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주로 하고 있다.⁷⁵⁾

이런 본질적인 역할은 개발협력분야에서도 드러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인도의 “환경보전 프로젝트 VII”를 들 수 있다. 2012년과 2013년에 총액 4,900만 달러가 지출된 이 사업은 개도국의 지속적인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화에 따라 수반되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는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를 기회의 대륙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아프리카 계획을 제시하였고, 여기에는 기후보호, 자원, 에너지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개발협력 주무기관들은 개도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발전에 수반되는 문제점들까지 고려하여 균형적인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3) 독일의 중소기업 ODA 사례 : 직업훈련

기계 산업의 강국인 독일은 도제관계와 같은 교육훈련을 강조하는 국가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직업훈련, 기술이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12년에 시작되어 2016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기초 기술 개선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흑인인구의 높은 실업률이며, 이는 불충분한 직업훈련에 기인한다. 따라서 많은 구직자들이 비공식부문에서 일을 찾고 있으나, 기존에 진행되던 직업교육으로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75) 한국금융연구원(2013), p.59.

이 프로젝트는 비공식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훈련부서와 중소기업진흥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기존에 직업훈련을 관할하던 노동부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비공식부문의 니즈에 맞는 직업훈련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2011년에 여섯 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본적인 사업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것으로, 교육기관에 의해 구성된 2시간짜리 개인훈련과정을 매주 실시하여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자질보증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과 전문지식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은 훈련기관에 조언을 제공하는 형태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 과정을 수행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결국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관은 참여자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수행결과, 100명 이상의 훈련교관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800명의 교육생이 과정수료를 완료했다. 과정수료 이후 참가기업의 약 60~80%가 수익이 증대되었으며, 50~60%가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했다. 40~75%의 기업에서 신규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평균적으로 기업당 하나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⁷⁶⁾

(4) 영국

1) 국제개발부(DFID :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영국은 과거 많은 식민지를 보유한 경험으로 인해 긴 공적개발원

76) <https://www.giz.de/en/worldwide/17815.html>

조의 역사를 갖고 있고, 긴 역사만큼이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풍부
한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따라 공적개발원조의 범위와 규
모가 폭넓고 방대하며 체계적인 운영시스템과 제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영국은 공적개발원조정책 시행기관인 국제개발부(DFID)가 명
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조직적인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
고 있다.

국제개발부(DFID)는 영국의 ODA를 선도하고 관리하는 독립부처
로서 1997년에 설립되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빈곤감축에 두고,
다음의 3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여성의 잠재력 창출, 긴급상황에서의 인도주의적 생명
구조지원 등 3가지 목표의 달성을 통해 도움이 필요 없도록 성장시키
는 것이다(DFID, 2012). 빈곤국가에서의 부의 창출은 주요 우선순위
에 속하며, 민간부문은 빈곤국가에서 사업부문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
는 적절한 도구로 평가되며,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

DFID는 공공 및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과 더불어 포괄적 성장과 빈
곤 감소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기업 부문과 협력하는 방법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0년 당시 정부는 DFID 내에 민간부문을 담당
하는 부서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민간부문과의 협
력방법에 대한 정책보고서가 출판되었고, 민간부문국이 설립되었다.
최근에 정부는 기업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메시지
를 표출하였으며, 이는 현재 다른 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의 활동이 차
기 프로그램주기에서는 두 배 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부문국은 국제개발부내의 유일한 민간부문 중심 기구가 아니며, 자율적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28개의 현장 사무소도 존재한다. 또한 다른 중앙부서들인 기후, 보건 부서들도 자금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부 산하 개발금융기관(CDC)은 지분투자를 통해 수원국의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모든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 영국의 중소기업 ODA 규모와 현황

영국은 미국, 독일 등과 같이 민간개발부문 개발에 집중하는 국가로서 중소기업 ODA 규모에 있어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2002년에서 2014년 기간 447백만 달러를 지원한 4위의 공여국이다. 다음의 <표 5-17>은 연도별 영국의 중소기업개발 ODA 지원액과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동기간 평균비중은 8.5%였으며, 2011년과 2012년은 4.4%, 4.9%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2013년부터 지원규모와 비중이 급증하여 2014년 현재 91백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비중은 17.7%이다.

2002년에서 2014년 기간 영국이 실시한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

<표 5-17> 2002~2014년 영국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DAC 전체	75	132	221	281	325	336	489	477	511	871	547	482	512
영국	6	7	27	25	24	44	46	28	44	38	27	40	91
비중	8.0	5.5	12.2	8.7	7.5	13.1	9.5	5.9	8.5	4.4	4.9	8.3	17.7

자료 : OECD CRS Database.

〈표 5-18〉 영국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상위 7개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건수

순위	국가	지원액	프로젝트 건수	지역
1	나이지리아	61	36	아프리카
2	아프가니스탄	52	34	중앙아시아
3	케냐	35	44	아프리카
4	타지키스탄	25	11	중앙아시아
5	파키스탄	21	17	중앙아시아
6	가나	18	36	아프리카
7	이라크	17	4	중동
8	우간다	17	14	아프리카
9	탄자니아	15	18	아프리카
10	시에라리온	13	34	아프리카

자료 : OECD CRS Database.

은 총 572건으로 전부 무상원조로 지원되었다. 주요 수원국은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케냐,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등으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각각 36건, 34건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61백만 달러, 53백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영국의 프로젝트는 국제개발부(DFID)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의 〈표 5-19〉는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나열한 것이다.

지출금액 상위 프로젝트 중 건수가 두드러지게 많은 국가는 나이지리아로, 빈곤퇴치를 위한 서비스시장과 상품시장의 형성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빈곤퇴치를 위한 서비스시장 촉진”, “빈곤퇴치를 위한 서비스시장 촉진을 위한 서비스의 조달”, “고용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 도매업과 소매업 지원”, “고용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 축산

업과 가족산업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시장시스템의 형성을 통한 빈곤감축을 추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케냐의 “시장발전을 위한 신탁지원 사업”에서도 빈곤감축을 위한 도구로 시장기능을 강조하고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빈곤가구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시장기능에 초점을 둔 이유는 아프리카 지역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며, 부정부패와 빈부격차가 만연하고, 표면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부중심의 지배구조로 인해 사

〈표 5-19〉 2002~2014년 영국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단위 : 백만 달러

수원국	프로젝트 명	금액	연도	기관
이라크	소기업 금융촉진 프로젝트	15.3	2004	DFID
아프가니스탄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	14.1	2010	DFID
타지키스탄	지역경제와 농업 성장 프로젝트	11.5	2014	DFID
콩고	시장개발 - 빈민들을 위한 시장형성	9.8	2014	DFID
나이지리아	빈곤퇴치를 위한 서비스 및 상품시장 촉진	8.2	2014	DFID
케냐	시장발전을 위한 신탁지원 사업	8.2	2014	DFID
우간다	민간 부문 재단 설립 - 북부우간다 소기업 보조금 지원정책	7.2	2011	DFID
아프가니스탄	정부기관 기술지원	6.3	2012	DFID
타지키스탄	지역경제와 농업 성장 프로젝트	6.3	2013	DFID
아프가니스탄	정부기관 기술지원	5.4	2011	DFID
나이지리아	빈곤퇴치를 위한 서비스시장 촉진	5.2	2007	DFID
나이지리아	빈곤퇴치를 위한 서비스 및 상품시장 촉진	4.6	2013	DFID
나이지리아	고용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 도매업과 소매업 지원	4.3	2014	DFID
나이지리아	빈곤퇴치를 위한 서비스시장 촉진을 위한 서비스의 조달	4.3	2008	DFID
나이지리아	고용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 축산업과 가족산업 지원	3.9	2014	DFID

자료 : OECD CRS Database.

주 : 프로젝트 건수는 동일사업이라도 수행연도가 다르면 독립적인 사업으로 건수를 계산하였음.

본주의 경제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3) 영국의 중소기업 ODA 사례 : PSD

영국은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중시하며, 미국, 독일 등과 같이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지원전략을 보유한 국가로서 국가차원의 통합지원원칙, 목표,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발달된 영국은 금융접근성 개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에티오피아에서 2012년에 시작되어 계속 진행 중인 “에티오피아 민간기업 프로그램(Private Enterprise Programme Ethiopia, PEPE)”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7년짜리 프로그램으로서 기업의 금융접근성 개선과 우선순위 분야에서의 시장과 정부 실패의 해결을 통해 민간부문개발을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금융접근성 측면은 에티오피아 경제의 투자수준의 증대, 특히 성장의 근원이 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증대를 기대하고, 우선순위 분야 측면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익 체중(증대)과 점유, 가족, 원예 생산 부문의 투자수준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두 측면 모두 최종목표는 고용 증대와 가계의 소득증대이다. 특히 우선순위 분야의 경우 녹색성장과 여성의 경제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별도의 여성 기업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5) 복구 공여국 :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앞서 논의한 4개국 이외에도 많은 유럽국가들이 민간부문개발 측면에서의 ODA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생을 기조로 하는 북유럽 국가 중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전략과 민간부문개발사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이들 복구 국가들은 최근 들어 민간부문개발 전략에 있어서 개도국에 투자한 자국 기업들의 성공에 개발협력이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 즉, 단순한 공여가 아니라 기업활동을 통하여 자국기업과 개도국 중소기업의 상생적 발전을 개발협력을 통하여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1)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GNI대비 ODA비율 세계 6위의 공여국이며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이행에 적극 참여하는 국가로 외교부(MFA)가 ODA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2011년 10월 경쟁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안보, 식량안보, 수자원, 성·보건·출산 등 4개 분야를 ODA 중점 분야로 재설정하고, 자국기업의 참여기회를 고려하는 ODA 정책추진을 발표하였다. 또한 ODA 지원과 무역·투자를 연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2013년 새로운 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하고 3대 목표를 선정하였다. 3대 목표는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성장, 자국기업의 해외사업 지원 등이다. 네덜란드는 ODA와 무역의 연계가 자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 개발관련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

한 맞춤형 자금 지원을 위해 총 7.5억 유로 규모의 펀드(Dutch Good Growth Fund)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민간부문개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로는 ORIO 프로그램과 PSI 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ORIO 프로그램은 무역투자진흥기관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저개발국 인프라 개발 원조 프로젝트로서, 프로젝트의 제안서 및 신청서 작성을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네덜란드 기업의 관여에 의해 프로젝트가 선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2009년에는 네덜란드 기업이 관여한 프로젝트에 77%의 예산이 배정되었다.⁷⁷⁾

PSI 프로그램은 30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지원되며, 지원 대상 내역은 자본재(생산시설 등) 및 기술지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교육, 인증획득 등(프로젝트 비용 산출시 토지나 건물, 운영비 제외)이다. 자금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저개발국에 대한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지속적인 수익창출과 후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고, 개도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이어야 한다. 주로 컨설팅 기업이나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PSI 프로그램을 추천하지만 프로젝트 신청서를 접수할 때 처음 접촉하는 기업도 있다. 아직까지 대사관에서 PSI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이 별도로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다. 네덜란드 기업의 현지 협력사가 없는 경우 무역진흥기관은 현지의 상공회의소나 대사관 접촉을 권유하고 있다. 현지 기업이 네덜란드 협력사를 물색한다면 무역진흥기관에서 Matchmaking Facility를 통해서 협력사 물색을 지원한다.

77)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종일 외(2012) 참조.

2) 스웨덴

스웨덴은 GNI대비 ODA의 비중이 0.7% 이상인 G0.7국가로 성과 중심의 효과적 원조사업을 실시한다. 개발협력 업무는 재외공관이 외교부 전략에 따라 개도국 현장에서 관리하고 담당하는 구조이다. 개발원조 정책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전 세계의 발전에 대한 기여로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빈곤층 친화적인 발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부처 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8개의 주요목표를 설정하였다. 인권존중, 민주주의·거버넌스, 양성평등, 환경보존, 경제성장, 사회개발 및 보장, 분쟁방지 및 해결, 국제공공재 연관 활동의 강화 등이 8개의 주요목표이다.

2004년 SIDA는 ‘민간부문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기관 민간부문 협력전략을 제시하였다. 핵심전략으로는 빈곤층의 경제활동에의 직접적인 참여와 고용, 소득, 생산성 향상, 사회적 자원생성을 위한 경제성장과 생산성, 고용, 소득 강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자원의 재분배 등이 있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시장기능을 위한 정책과 구조개선, 농업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지원, 사회발전, 젠더, 위생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 무역, 금융, 공공부문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지원 등의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민간부문개발 사례로는 “Tetra Pak Value Chain Model”이 있다. 낙농기업인 Tetra Pak이 제안한 사업모델로 SIDA가 스웨덴 낙농기업의 개도국 진출 및 개도국 낙농업 발전 지원을 위해 추진하였다.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이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낙농업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되었다. 이 사

업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의 형태로 우유생산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민간과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형태이다. 1단계인 개도국의 낙농종사자 훈련은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2단계와 3단계인 공장운영과 유통경로 확보는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마지막 4단계인 소비자 정보제공과 개도국 학교급식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와 기업이 나누어 수행하는 형태이다. 이 사업의 결과 개도국의 농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아동보건개선, 개도국 민간분야 발전 지원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⁷⁸⁾

3) 덴마크

덴마크는 1978년부터 GNI대비 ODA의 비중이 0.7% 이상인 G0.7 국가로 개발원조기본법(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에 기반하여 개발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외교부가 개발원조의 전략 수립, 정책문서작성, 가이드라인, 사업계획의 수립·집행 등으로 개발원조기본법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2010년에 기존의 추진 전략을 대체하는 새로운 ODA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는 외교안보와 개발정책의 연계성 증대, 수원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자유보장, 지속가능한 성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5대 중점분야에는 자유·민주·인권, 발전과 고용, 양성평등, 취약국 지원, 환경과 기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덴마크의 국제개발지원청인 DANIDA(Danish International Devel-

78) Bernd Heesen(2016) 참조.

opment Assistance)는 2006년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실행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사업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는 효율적인 공공규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의 개발, 금융접근성의 개선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정책과 법률시스템의 개선, 관련 공공기관의 역량강화, 창업 및 훈련기관의 역량강화 등의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덴마크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사례로는 ‘B2B(Business to Business)’가 있는데, 개도국의 경제성장 촉진과 빈곤퇴치를 목표로 덴마크 기업이 개도국의 지역기업개발을 위해 개도국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이러한 지원은 주로 자문, 경제지원, 기술과 지식 이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원대상은 DANIDA의 개발 지원 프로그램 대상국가 및 남아프리카 국가로 1인당 GDP가 일정수준 이하인 국가가 선정된다. 이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되며, 예비 접촉 및 협력 논의 단계에 협력기업발굴 및 조사단 파견을 지원하고,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컨셉구성 단계에 조사·연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실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JICA, 2013).

3. 주요 국제기구의 중소기업 ODA 현황과 지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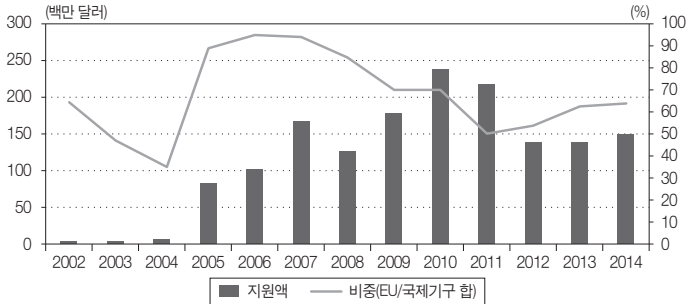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국제기구인 EU, WB, ADB, IDB, UNDP, AfDB 등의 중소기업 ODA 현황을 알아보고, 민간부문개발의 측면에서의 각 국제기구들의 전략과 활동 등에 대해 살펴본다.

(1) EU(유럽연합)

EU는 28개의 유럽국가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28개국 중 OECD/DAC 회원국이 15개국으로 세계 최대의 원조연합으로 공공개발원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이며, EU산하 기구들만 고려하여도 주요 선진 공여국과 함께 중요공여자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EU의 공공개발원조는 EC(European Commission : 유럽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원조정책을 조율하고 협력을 도모하여 공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또한 EC는 다른 공여국들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공적개발원조를 실시하는 이원적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장의 1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EU는 중소기업 개발분야 최대 공여기관으로서 2002년에서 2014년 사이 1,553백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 수치는 전체(OECD DAC, 국제기구) 지원액의 20%, 국제기구 지원액의 67.6%를 차지한다. 2002년 이후 EU의 지원규모의 변화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에서 2004년 기간 지원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36%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 기간은 평균 지원액이 370만 달러 수준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준이었다. 2005년부터 지원액과 비중이 급증하였으며, 2006년과 2007년의 비중은 약 95% 수준으로 거의 모든 지원이 EU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OECD DAC 국가들을 포함한 비중도 약 23% 수준으로 중소기업 개발 ODA는 EU를 주축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2011년까지는 지원액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지원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는 타 국제기구들이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ODA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키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

〈그림 5-4〉 2002~2014년 EU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변화



자료 : OECD CRS Database.

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그림 5-3〉의 미국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의 변화에서도 2007년 이후 지원액은 증가하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02년에서 2014년 기간 EU가 실시한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은 총 1,461건으로 총 지출액은 1,554백만 달러이다. 공여형태로는 지분투자가 18건으로 237백만 달러, 유상원조가 1건으로 27백만 달러, 무상원조가 1,442건으로 1,290백만 달러였다. 총 지출액 중 수원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149백만 달러를 제외한 1,405백만 달러의 대륙별 지원규모는 다음의 〈표 5-20〉과 같다. 최대 지원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총 지원액의 53.2%를 차지하는 692백만 달러였으며, 483개의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지역으로 총지원액의 26.3%를 차지하였으며, 프로젝트 건수는 164건이었다. 아메리카 지역과 유럽 지역은 각각 191백만 달러, 174백만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음의 〈표 5-21〉은 2002년에서 2014년 기간 EU가 실시한 중소기업 발전관련 프로젝트이다. 지분투자와 무상원조의 형태로 큰 금액이 지원되었으며, 기본적으로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

〈표 5-20〉 2002~2014년 EU의 대륙별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대륙	지원규모		비중
		총액	평균	
1	아프리카	692.2	53.2	49.3
2	아시아	342.0	26.3	24.3
3	아메리카	191.4	14.7	13.6
4	유럽	179.0	13.8	12.7

자료 : OECD CRS Database.

할 수 있다. 중동지역과 사하라 북부지역에서 진행된 “벤처캐피탈 프로젝트”는 벤처기업을 위한 펀드와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럽국가들 간 금융부문의 협력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는 유럽투자은행 산하 유럽투자펀드에 의해 관리되며, 이 펀드를 통해 첨단

〈표 5-21〉 2002~2014년 EU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수원국/지역	프로젝트 명	금액	연도	공여형태
사하라북부	유럽-지중해간 투자와 파트너십을 위한 지원	44.6	2009	지분투자
사하라북부	유럽-지중해간 투자와 파트너십을 위한 지원	44.5	2011	무상원조
사하라북부	유럽-지중해간 투자와 파트너십을 위한 지원 2009	42.4	2010	지분투자
레바논	민간부문개발 촉진 프로젝트	27.3	2011	유상원조
사하라북부	유럽-지중해간 투자와 파트너십을 위한 지원 2010	25.2	2010	지분투자
사하라북부	유럽-지중해간 투자와 파트너십을 위한 기금	20.9	2009	지분투자
사하라남부	기업개발센터 설립 프로젝트	20.8	2008	무상원조
사하라북부	유럽-지중해간 투자와 파트너십을 위한 기금	19.9	2010	무상원조
사하라북부	벤처캐피탈 지원	18.8	2006	무상원조
중동지역	벤처캐피탈 지원	18.8	2006	무상원조
몰도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정책지원 프로그램	17.3	2013	무상원조

자료 : OECD CRS DB.

기술을 사용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초기단계의 기업을 지원한다. 한편, 지역경제개발 프로젝트로는 몰도바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정책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표로 실시되었으며, 다음의 5가지 세부목표를 가지고 있다. 몰도바 전 지역의 경제부문과 농업부문의 역량강화, 금융 접근성 증대,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인프라 개발, 직업훈련원의 창업교육 강화, 지역개발기관의 인프라와 다른 프로젝트 지원 등이다. 민간부문개발 측면에서는 레바논의 “민간부문설비” 프로젝트가 있는데, 레바논 생산부문의 중소기업금융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은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WB(세계은행)

세계은행은 ‘민간부문개발전략’에서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민간부문개발은 성장촉진, 빈곤감축,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경쟁시장에서의 민간기업은 공공부문과 함께 성장과 빈곤감축의 핵심이며, 민간시장에 의해 조성된 세금을 공공지출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민간부문을 위한 공공정책과 직접적인 민간부문의 지원에 있어 개별국가와 부문의 조건을 반영하여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즉 개별국가별 민간부문개발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근이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민간부문개발전략은 시장기능의 강화(투자환경 조성, 직접지원)와 직접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대(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강화)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위해 금융접근성 증대, 가치사

〈표 5-22〉 2004~2014년 세계은행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제기구 전체	14	93	109	176	153	254	342	430	257	223	235
WB	1	4	4	10	23	66	57	102	60	52	51
비중	8.6	3.8	3.3	5.5	15.1	26.2	16.5	23.7	23.2	23.2	21.7

자료 : OECD CRS Database.

슬형성, 중소기업운영교육, 사회환경개선 등이 필요하다(WB, 2002).

세계은행의 중소기업개발 ODA 지원액은 2004년에서 2014년 기간에 429백만 달러로 국제기구 중 2위에 해당하며, 18.6%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세계은행의 지원규모의 변화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에서 2007년 기간 지원비중은 평균 4%로 대단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 기간에 평균지원액은 약 5백만 달러 수준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2008년부터 지원액과 비중이 급증하였으며, 2011년 이후에는 평균 약 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4년에서 2014년 기간 세계은행이 실시한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은 총 182건으로 총 지출액은 429백만 달러이다. 공여형태로는 유상원조가 123건으로 351백만 달러, 무상원조가 56건으로 78백만 달러였다. 규모 면에서 상위 중소기업 ODA 수원국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등인데, 베트남의 경우 프로젝트 건수에 비해 지원규모가 앞도적으로 큰 것은 〈표 5-24〉의 6년간 진행된 프로젝트인 ‘제3차 베트남 농촌지역금융 프로젝트’의 예산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표 5-23〉 세계은행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상위 6개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건수

순위	국가	지원액	프로젝트 건수
1	베트남	183	7
2	방글라데시	52	8
3	부르키나파소	34	30
4	마다가스카르	26	16
5	우간다	20	2
6	에텐	16	11

자료 : OECD CRS Database.

〈표 5-24〉 2004~2014년 세계은행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세계은행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사례

■ 제3차 베트남 농촌지역금융 프로젝트(베트남)

2009년부터 2014년 기간 182백만 달러가 투입된 본 프로젝트는 금융접근성 증대를 통한 농촌지역민간기업과 가계의 경제적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실시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는 크게 3개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요소는 농촌개발기금으로 장기투자가 필요한 농촌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효율성과 사업확장을 위한 장비, 신기술 등에 대한 투자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요소는 농촌경제미소금융기금으로 미소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요소는 기관의 설립과 신상품의 개발이며, 기관의 설립은 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요소이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강화하고 베트남 농촌지역의 금융접근성의 증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농촌지역기업의 금융접근성 증대, 농촌지역 기업에 의한 고용증가와 투자증대, 시장중심의 금융기관의 참여에 기인한 농촌민간기업의 투자를 위한 장기대출증가 등이 있다.

■ 제7차 빈곤감축지금지원 프로젝트(우간다)

본 프로젝트는 우간다의 제7차 빈곤감축지원사업의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경제운영, 생산(소득) 및 경쟁력 향상, 거버넌스, 인적자원개발 등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경제운영 측면에서는 거시경제의 안정과 민간부문의 빠른 성장 추진, 자원사용의 효율성, 예산합리화 등을 전략으로 한다. 생산(소득) 및 경쟁력 향상의 시행전략은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토지개혁과 마케팅 등의 농업생산 효율

(계속)

세계은행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사례

성 증대 등이다.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 및 사법시스템의 강화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재정관리 및 공공조달 등이 거버넌스의 측면에 포함되며, 인적자원개발에는 1차, 2차, 3차 교육의 질과 접근성 증대, 보건의료서비스, 전염성 질환관리, 모자보건 개선 등이 있다.

■ 투자유치와 금융시설 프로젝트(방글라데시)

본 프로젝트는 민간부문의 개발프로젝트로, 정부의 인가를 받은 민간금융 중개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개발목표는 민간부문의 성장가속화, 포괄적인 농촌지역 개발, 정부와 설립제도의 강화를 가장 우선시한다. 본 프로젝트는 크게 대출과 기술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출의 경우 민간부문에 의해 개발된 정부의 인프라 사업과 관련하여 자격을 취득한 금융중개인에게 장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기술지원은 방글라데시은행의 현지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역량 강화, 민간금융인프라 촉진, 환경영향평가 등이 포함된다.

■ 민간부문 개발시설(인도네시아)

본 프로젝트는 미역, 땅콩, 폐선후르츠의 생산, 처리,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 정보수집 역량강화, 처리기술 향상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IFC는 지역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상과정을 지원하는데, 대기업이 구입하고자 하는 생산물의 양과 질, 계약 성사 등에 대해 지원을 한다. 또한 IFC는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금융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자료 : OECD CRS Database.

(3) ADB(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 및 협력을 촉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의 민간부문개발은 정책과 제도적 환경구축, 공공부문 상품 및 서비스 촉진, 직접적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전략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정책과 법령시스템 구축과 경쟁정책과 규제완화, 기술협력, 상업은행과 미소금융지원에 대한 기술지원, 민간부문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등이 있다.

〈표 5-25〉 아시아개발은행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상위 5개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건수

순위	국가	지원액	프로젝트 건수
1	방글라데시	53	4
2	베트남	42	1
3	스리랑카	24	4
4	라오스	16	3
5	부탄	11	6

자료 : OECD CRS Database.

아시아개발은행의 중소기업개발분야 지원은 2010년부터 이루어졌으며(OECD CRS DB기준), ODA 지원액은 2010년에서 2014년 기간 154백만 달러로 국제기구 중 3위에 해당하고, 국제기구들의 총 지원액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에서 2014년 기간 아시아개발은행이 실시한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은 총 39건으로 유상원조가 13건, 무상원조가 26건이었고, 지출액은 각각 136백만 달러, 18백만 달러였다. 주요 수원국은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라오스, 부탄 등이다.

다음의 〈표 5-26〉은 2010년에서 2014년 기간 아시아개발은행이 실시한 중소기업 발전관련 프로젝트들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지원이 이루어진 베트남의 “2차 중소기업 발전 프로그램”은 베트남의 중소기업 발전지원 프로젝트로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계획의 프레임워크 개선, 중소기업의 발전과 운영을 지원하는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경쟁정책을 위한 규제강화,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행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의 “투자환경 개선 프로그램”은 규제준수 비용절감, 금융접근성 개선, 근로자능력향상, 민관협력촉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증대, 민간투자 규제완화를 목표로 하

〈표 5-26〉 2009~2014년 ADB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단위 : 백만 달러

수원국	프로젝트 명	금액	연도	공여형태
베트남	2차 중소기업 발전 프로그램	42.2	2011	유상원조
방글라데시	중소기업 발전 프로젝트	37.5	2012	유상원조
라오스	2차 민간부문과 중소기업 발전 프로그램	15.1	2013	유상원조
방글라데시	중소기업 발전 프로젝트	14.2	2011	유상원조
스리랑카	지역 중소기업 발전 프로젝트	12.2	2011	유상원조
키르기스스탄	투자환경 개선 프로그램	3.5	2014	무상원조
부탄	미소기업 및 중소기업 부문 개발 프로젝트	2.6	2012	무상원조
방글라데시	중소기업 분야 발전 프로젝트	1.6	2010	유상원조
몰디브	포괄적인 미소기업 및 중소기업 개발 프로젝트	1.2	2014	유상원조
아프가니스탄	민간부문과 금융시장 개혁 지원 프로젝트	0.8	2010	무상원조
캄보디아	경제다각화 추진 프로그램	0.8	2013	무상원조

자료 : OECD CRS Database.

고 있다.

(4) IDB(미주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UNDP(유엔개발계획)

IDB, AfDB, UNDP의 중소기업개발분야 ODA 지원액은 2002년에서 2014년 기간 114백만 달러, 30백만 달러, 9백만 달러로 EU, WB, ADB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동기간 수행한 사업의 프로젝트의 수는 IDB가 655건, UNDP가 105건, AfDB가 21건이었다. 〈표 5-27〉은 세 국제기구의 주요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들은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2010년 193만 달러가 지출된 칠레의 “농업발전기금 지분투자 프로젝트”는 벤처캐피털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에 미

치는 영향을 소개하여, 칠레에 벤처캐피털 산업의 설립과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문의 지역기금관리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식, 채권 등의 발행을 통해 농업부문을 수익성이 있는 사업부문으로 전환시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한다. 다른 프로젝트로는 브라질의 “재활용업자의 사회경제적 통합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브라질의 다섯 지역의 인구 문제로 인한 경제적문제의 해결에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통합, 전문화, 조직력 강화, 가치사슬에의 편입을 통한 재활용업자와 그 가족의 소득창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

민간부문개발측면에서 세 기구는 각각의 민간부문개발 전략을 제

〈표 5-27〉 2002~2014년 IDB, UNDP, AfDB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단위: 백만 달러

공여기관	수원국	프로젝트 명	금액	연도	공여형태
UNDP	잠비아	소규모 생산자의 접근성과 활용증대 프로젝트	0.57	2013	무상원조
UNDP	베넌	사업진흥센터 프로젝트	0.48	2013	무상원조
UNDP	나이지리아	미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서비스 확대 프로젝트	0.33	2013	무상원조
UNDP	시에라리온	기업발전 지원 프로젝트	0.23	2012	무상원조
IDB	볼리비아	기업개선지원기금 프로젝트	9.89	2011	유상원조
IDB	칠레	농업발전기금 지분투자 프로젝트	1.93	2010	지분투자
IDB	니카라과	농업생산사슬의 금융접근성 증대 프로젝트	1.20	2014	유상원조
IDB	우루과이	소기업을 위한 리스크 자본기금	1.13	2009	유상원조
IDB	브라질	재활용업자의 사회경제적 통합 프로젝트	0.84	2011	무상원조
IDB	아르헨티나	산타페지역 중심지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0.81	2010	무상원조
AfDB	탄자니아	소기업을 위한 대부시설 프로젝트	8.92	2014	유상원조
AfDB	모잠비크	모잠비크의 중소기업 발전 지원 프로젝트	3.24	2004	유상원조
AfDB	이집트	프랜차이즈 분야 지원 프로그램	0.10	2012	무상원조
AfDB	르완다	르완다 민간부문 연맹 프로젝트	0.08	2013	무상원조

자료: OECD CRS Database.

시하였다. 미주개발협력은행(IDB)은 ‘민간부문개발전략 2004’에서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민간부문개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과 불리함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구의 역량강화와 자본시장의 개선, 신용보증시스템 구축, 사업개발서비스 공급자의 역량강화(수출촉진, 정보습득, 생산기술개선, 운영능력 개선, 청정에너지 소개)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부문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JICA, 2013).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은 민간기업지원과 금융시스템강화를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투자환경의 개선, 금융접근성 강화, 민간지원기구와 사업지원서비스에 의한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민간부문전략-포괄적인 시장발전추진”을 통해 민간부문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과 제도의 틀 구축, 빈곤탈출 가치사슬협력 촉진, 빈곤탈출 상품과 서비스 투자촉진, 포괄적인 창업지원, 포괄적인 시장 발전지원과 MDGs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독려 등을 민간부문개발의 핵심이슈로 선정하였다. 유엔개발계획은 핵심이슈에 대한 정책제안과 지역인적자원과 조직의 역량강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민간기업의 사업추진을 통한 빈곤탈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다음의 글로벌 민간부문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포괄적인 시장성장(GIM)’으로 시장중심의 접근에 관한 사례연구와 개발에 의한 사업추진을 통해 극심한 빈곤의 퇴치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사업의 성장(GSB)’으로 공여자와 민간기업의 협력에 의한 개별 사

업의 솔루션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말라위의 사례가 있다. USAID와 카말의 협력상황에서 UNDP는 국내의 커피농가를 지원하였다. 우선 커피콩 샘플을 전 세계 75개의 수입업자에게 보냈고, 그 수입업자 중 11개 업자가 관심을 표명했다. 이후 UNDP는 이들 업자들로부터 받은 제품에 관한 질문에 대해 상세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커피콩 생산자들은 미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을 하게 되었다. 또한 말라위의 주요 호텔들은 커피의 질이 선진국에 수출할 정도로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 이후부터 국내커피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UNDP는 타 기관이나 공여국이 진행하는 사업일지라도 빈곤 탈출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민간부문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4. 시사점

국제사회의 중소기업분야 ODA 동향을 살펴본 결과, 모든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들은 중소기업발전을 개발도상국의 빈곤탈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공통적으로 민간부문개발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지원에 상당한 개발협력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음의 <표 5-28>에서 민간부문의 개발을 위한 중점분야에서 보다시피 국가간 상당부분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환경은 제시된 모든 국가와 기구들이 공

〈표 5-28〉 주요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PSD 중점분야

	투자여건						생산역량		
	사업 환경	인프라	노동 시장	거시적 안정	금융 서비스	무역 정책	경제적 향상	가치사슬 개발	기업 발전
일본	●					●	●	●	●
미국	●	●				●		●	●
독일	●	●	●		●	●	●	●	●
영국	●	●			●			●	●
스웨덴	●	●	●	●	●	●	●	●	●
노르웨이	●	●						●	●
네덜란드	●	●			●	●		●	●
EU	●	●		●	●		●	●	●
WB	●			●	●	●	●	●	●
ADB	●	●		●					
AfDB	●	●		●	●		●	●	●
IDB	●	●			●	●	●		●

자료 : OECD(2016).

통적으로 생각하는 중점분야였으며, 인프라, 기업발전, 가치사슬 개발, 금융서비스 등은 대부분의 국가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가별로 특성에 따른 비교우위 분야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보다 집중하는 분야가 있다. 일본은 전통적인 전자, 기계, 자동차 강국으로 일본기업의 해외공장 투자가 해당국가의 해당산업분야의 발전과 고용증대, 기술전수, 하위산업으로의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사업(supporting industry)의 중소기업 생산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련 개도국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도와주었다. 미국은 미소기업의 창업지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육성

에 집중하였다. 독일은 전통적인 기계산업의 강국으로 도제관계, 즉 직업훈련에 강점을 가진 자국의 특성을 살려 직업훈련 또는 기술이전의 형태로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발전과 민간부문개발을 지원하였다. 금융시장이 발달한 영국은 민간부문개발지원의 일환으로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의 금융접근성 증대와 투자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하였으며, 성장으로 유발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원과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였다. 북유럽 3개국으로 선정한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도 각자 자국의 정책기조를 살려 민간부문의 개발에 일조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는 일방적인 원조보다는 자국의 투자기업과 개도국의 중소기업이 모두 개발협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개도국의 발전측면에서 중소기업은 고용을 유발하고,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생산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과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공여국과 공여기구의 지원현황을 고려할 때 개도국의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역할은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소기업개발 ODA와 민간부문개발의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민간분야개발정책과 중소기업개발 ODA 정책에 대해 다음 장에서 논의해 본다.

제6장

한국의 중소기업 개발협력 현황

본 장에서는 한국이 지금까지 수행한 ODA 사업 중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ODA 사업으로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특징을 살펴본다. 한국의 ODA는 대부분이 주무기관인 KOICA와 EDCF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정책자문사업인 KSP에서 중소기업 관련 주제에 대한 지식공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2년부터 산업분야 ODA를 수행하고 있다. 물론 PSD 등 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된 보건, 교육, 여성 분야의 ODA도 광범위하게는 중소기업 ODA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 장에서는 주로 산업분야 중소기업 ODA를 중심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현황을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외교부가 OECD DAC에 중소기업 ODA로 분류하여 보고한 OECD DAC의 CRS code 32120에 보고된 내용을 우선 알아본다. 여기에는 주로 KOICA의 무상원조 사업 중 중소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들만 담겨져 있다. 다음으로 EDCF와 KOICA 등 원조 주무기관에

서 수행한 사업 중 중소기업 경쟁력과 관련이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사업을 살펴보기로 하자.

1. OECD DAC의 ODA 자료(CRS code(32120))

OECD DAC에 보고된 중소기업 ODA의 규모는 절대적인 액수에 있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 추세는 교육이나 보건 등 타 분야에 비해 뚜렷하지는 않다. OECD DAC의 중소기업 ODA 전체 공여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에 따라 들쭉날쭉하지만 0.1%에서 0.4% 정도이며, 타 선진공여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지원규모 면에서 상위 중소기업 ODA 수원국은 세르비아,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인데, 세르비아는 <표 6-3>에서 보듯이 2년에 걸쳐 수행된 프로젝트인 ‘세르비아 사업체 등록기관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규모가 컸기 때문이며, 콜롬비아의 경우도 ‘산업클러스터 기반 중소기업 생산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ODA 규모는 교육이나 보건분야 ODA나 중소기업 ODA로 분류되지 않은 타 프로젝트에 비해 적은 편이다.⁷⁹⁾ 따라서 예외적으로 지원액

<표 6-1> 2006~2014년 한국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DAC 전체	325	336	489	477	511	871	547	482	512
한국	0.6	0.4	1.7	2.1	0.5	0.7	2.1	1.7	1.3
비중	0.19	0.13	0.34	0.45	0.10	0.07	0.39	0.35	0.26

자료 : OECD CRS DB.

79) KOICA와 EDCF의 중소기업 관련 ODA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수가 큰 사업을 제외한다면 한국의 중소기업 ODA 수원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도 <표 6-3>에서 보듯이 정책자문, 초청연수를 통한 교육훈련 사업들이며, 이 외에도 소규모의 관련분야 퇴직자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파견, 전문가파견 등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다.

OECD DAC의 한국의 중소기업 ODA 사업을 종류별로 분류하면 <표 6-4>와 같다. 액수로 보면 프로젝트가 많은 편이지만, 건수로 보면 초청연수가 많다. 초청연수는 개도국의 중소기업 정책 담당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강의와 산업시찰을 통하여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이며, 이 외에도 개도국의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강의와 산업시찰을 한 바가 있다.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이 한-아세안 여성기업인 협력네트워크 사업이다. 정책자문사업은 중소기업정책관련 KSP 사업과 KOICA에서 시행한 알제리 산업정책 자문사업에서 중소기업관련 정책자문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석사학위 프로그램 사업은 중소기업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도국의 학생을 선발하여 KOICA가 국내 대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다.⁸⁰⁾

이렇게 볼 때, OECD DAC 통계상의 한국의 중소기업 ODA는 주로 초청연수, 봉사자 및 전문가 파견, 학위프로그램 등 인적교류와 지식 공유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로젝트 사업도 액수면에서 규모가 컸던 세르비아의 사업체 등록기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관련 행정 지원 사업이었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

80) 한국폴리텍대학과 한동대학이 2년 과정의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년간 강의와 한국 산업시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콜롬비아의 ‘산업클러스터 기반 중소기업 생산경쟁력 강화 사업’뿐이다. 이 사업도 실제 사업의 구성은 산업클러스터 컨설팅 및 시범사업 기술자문을 위한 전문가 파견, 국내자문, 국내초청연수, 기타 사업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다른 초청연수나 전문가 파견사업과 차이가 있다면 콜롬비아의 특정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실행전략 수립, 해당지역 전문가 초청연수, 시범사업 실행 관련 기술자문, 클러스터 개발경험 공유 등이 연계된다는 것이다.

〈표 6-2〉 한국의 중소기업 ODA 지원규모 상위 5개 국가(2006~2014 집행액)

단위 : 만 달러, 건수

순위	국가	지원액	프로젝트 건수
1	세르비아	235	2
2	베트남	186	33
3	콜롬비아	99	5
4	인도네시아	55	15
5	캄보디아	41	13

자료 : OECD CRS DB.

주 : 프로젝트 건수는 동일사업이라도 수행연도가 다르면 독립적인 사업으로 건수를 계산하였음.

〈표 6-3〉 2006~2014년 한국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단위 : 만 달러

수원국	프로젝트 명	금액	연도	기관
세르비아	세르비아 사업체 등록기관 지원 프로그램	158.6	2009	KOICA
세르비아	세르비아 사업체 등록기관 지원 프로그램	76.9	2008	KOICA
콜롬비아	산업클러스터 기반 중소기업 생산경쟁력 강화 사업	45.8	2012	KOICA
콜롬비아	산업클러스터 기반 중소기업 생산경쟁력 강화 사업	38.7	2013	KOICA
에티오피아	지식공유사업(KSP 2011)	18.0	2011	MOSF
가자지구	중소기업과 E-비즈니스 촉진 프로그램	16.8	2013	KOICA
알제리	중소기업 육성 정책자문 프로젝트	12.0	2009	KOICA
파라과이	중소기업 육성 정책자문 프로젝트	11.4	2012	KOICA

(계속)

수원국	프로젝트 명	금액	연도	기관
파라과이	교육훈련 프로그램 - 중소기업 진흥	11.2	2008	KOICA
이라크	중소기업 육성 정책	11.1	2012	KOICA
알제리	중소기업 육성 정책자문 프로젝트	11.0	2012	KOICA
페루	교육훈련 프로그램	10.6	2007	KOICA
콜롬비아	클러스터 기반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 프로젝트	9.8	2014	KOICA
케냐	교육훈련 프로그램	9.6	2007	KOICA
베트남	교육훈련 프로그램	9.3	2007	KOICA
우즈베키스탄	교육훈련 프로그램	9.2	2007	KOICA
이라크	교육훈련 프로그램	9.0	2006	KOICA

자료 : OECD CRS DB.

〈표 6-4〉 2006~2014년 한국의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

단위 : 만 달러, %, 개

사업	액수	비중	건수
프로젝트	366.23	32.9	7
초청연수	266.06	23.9	100
봉사자파견	202.61	18.2	28
석사학위프로그램	130.33	11.7	56
기타	78.55	7.1	10
정책자문	43.89	3.9	4
전문가파견	16.12	1.4	7
여성기업인	9.72	0.9	15
합계	1,113.52	100.0	227

자료 : OECD DAC 원조통계.

2. EDCF의 중소기업 관련 ODA 사업

OECD DAC에 보고된 중소기업 ODA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지원이 명시되는 사업만을 포함한다. 중소기업

업의 발전은 이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한정하는 법과 제도적 환경과 경제인프라, 중소기업의 생산력을 결정하는 기술과 인력, 그리고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접근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 ODA는 범분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5〉는 2010년 이후 EDCF가 승인한 차관사업 중에서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EDCF 사업 중에서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기술, 인력, 판로, 생산 등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을 선별하여 보았는데, 이들은 폐수 및 폐기물 처리, 산업기술, 직업훈련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다. 차관사업의 특징상 EDCF 사업은 규모가 무상원조에 비해 크고 대부분이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들이다. 이 사업은 이러한 시설이 건설되는 주변의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사업의 성과는 시설건립 이후 주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활용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표 6-5〉 EDCF의 중소기업 관련 ODA 프로젝트

단위 : 백만 달러

승인연도	수원국	프로젝트 명(승인액수)
2010	스리랑카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33.54)
2010	앙골라	산업고등기술센터 건립사업(34.8)
2010	니카라과	직업훈련소 확충사업(2차)(23.0)
2011	스리랑카	콜롬보 중앙직업훈련 및 감파하 고등기술센터 건립사업(2.54)
2011	아제르바이젠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22.0)
2012	베트남	홍옌시 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23.2)
2012	요르단	암만 남부 폐수처리시설 사업 보충용자(28.9)

자료 : EDCF 내부 자료.

3. KOICA의 중소기업 관련 ODA 사업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KOICA의 사업들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생산역량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은 별로 없다. 중소기업 생산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앞에서 살펴본 콜롬비아의 ‘산업클러스터 기반 중소기업 생산경쟁력 강화사업’과 인도네시아의 ‘섬유품질표준 및 품질보증검사 기술협력사업’ 정도이다.

이 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은 중소기업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폐기물 처리 인프라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이 입주하는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는데, 건수나 액수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기술대학, 기술고등학교, 종합기술원, 기술훈련센터, 과학기술연구원 등의 건립이나 시설지원사업 등이다. 다음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은 폐기물처리 시설 건립이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이다. 다음으로 공단이나 산업클러스터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사업이 다수 있다. 이 외에도 산업연구개발 역량 강화, 무역역량 강화 사업 등이 있으나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표 6-6) KOICA의 중소기업 관련 ODA 프로젝트

연도	국가	프로젝트 명(기간/예산)
2010	베트남	박장성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2010~2013/1,000만 달러)
2010	베트남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구축지원사업(2010~2012/150만 달러)
2010	스리랑카	콜롬보지역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시범구축(콜롬보지역)
2010	온두라스	종합기술훈련원건립사업(2010~2012/400만 달러)

(계속)

연도	국가	프로젝트 명(기간/예산)
2010	이집트	유해폐기물통합관리사업
2011	UNIDO	캄보디아친환경기술이전사업(2011~2013/90만 달러)
2011	네팔	카트만두대학교기술훈련센터설립사업(2011~2014/350만 달러)
2011	르완다	키추키로종합기술훈련원지원사업
2011	온두라스	종합기술훈련원건립사업(2010-2012/400만 달러)
2012	UNIDO	캄보디아친환경기술이전사업(2011-2013/90만 달러)
2012	네팔	카트만두대학교기술훈련센터설립사업(2011~2014/350만 달러)
2012	몽골	한몽기술대학교역량강화사업
2012	몽골	울란바타르폐기물처리시설정비사업(2009~2011/350만 달러)
2012	스리랑카	콜롬보지역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시범구축(콜롬보지역)
2012	온두라스	종합기술훈련원건립사업(2010-2012/400만 달러)
2012	인도네시아	섬유품질표준및품질보증검사기술협력사업(2012~2014/150만 달러)
2012	파키스탄	카라치의류생산기술훈련원지원후속사업(2012~2013/50만 달러)
2013	네팔	네팔 카트만두대학교 기술훈련센터 설립사업(2011~2014/350만 달러)
2013	동티모르	동티모르 베코라 기술고등학교 지원사업(2013~2016/800만 달러)
2013	르완다	르완다 키추키로 종합기술훈련원 2차지원사업(2013~2015/500만 달러)
2013	모로코	모로코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2013	모잠비크	모잠비크 마톨라 산업학교 역량강화사업(2013~2017/650만 달러)
2013	몽골	몽골 한몽기술대학교 역량강화사업
2013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사이버 범죄수사 역량강화 사업(2012~2015/300만 달러)
2013	베트남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2010~2013/1,000만 달러)
2013	베트남	베트남 폐기물재활용기술연구 역량강화 사업(2013~2015/150만 달러)
2013	수단	수단 농업기술훈련원 건립사업(2011~2013/600만 달러)
2013	스리랑카	스리랑카 기능대학(CoT) 및 훈련원(TC) 자동차공과 개선사업 (2013~2015/300만 달러)
2013	스리랑카	콜롬보지역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시범구축(콜롬보 지역)
2013	온두라스	온두라스 종합기술훈련원 건립사업(2010~2012/400만 달러)
2013	이집트	이집트 자동차 직업훈련 시스템 개선사업
201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에너지·환경·천연물질 연구소 건립사업
201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섬유품질표준 및 품질보증검사 기술협력사업 (2012~2014/150만 달러)

(계속)

연도	국가	프로젝트 명(기간/예산)
2013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쿠프르니마 기술고등학교 건립사업(2010~2012/370만 달러)
2013	파키스탄	파키스탄 카라치 의류생산기술훈련원 지원 후속사업(2012~2013/ 50만 달러)
2013	파키스탄	파키스탄 편잡지역 폐하수처리 및 식수공급사업(2011~2012/400만 달러)
2014	르완다	르완다 산업연구개발 역량강화사업(2014~2016/250만 달러)
2014	모로코	모로코 무역역량 강화사업(2013~2015/295만 달러)
2014	모로코	모로코 산업통계 측정 및 활용 역량강화(2014~2018/610만 달러)
2014	몽골	몽골 한몽 기술대학교 역량강화사업(2010~2016/576만 달러)
2014	베트남	베트남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설립지원 사업(2014~2017/ 3,500만 달러)
2014	베트남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지원사업(2014~2016/600만 달러)
2014	베트남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개발 역량강화사업(2013~2015/340만 달러)
2014	베트남	베트남 박장성 한베 기술대학 설립사업(2010~2014/1,000만 달러)
2014	베트남	베트남 폐기물재활용기술연구 역량강화 사업(2013~2015/150만 달러)
2014	스리랑카	스리랑카 기능대학(CoT) 및 훈련원(TC) 자동차공과 개선사업 (2013~2015/300만 달러)
2014	스리랑카	스리랑카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08~2014/450만 달러)
2014	아이티	아이티 까라콜 의류기술 훈련원 건립사업(2013~2015/350만 달러)
2014	온두라스	온두라스 특별개발지구 타당성조사사업(2012~2015/400만 달러)
2014	우간다	우간다 과일가공공장 건립사업(2011~2016/740만 달러)
2014	이라크	이라크 배전분야 에너지 효율개선 및 자동검침 시스템 구축사업 (2012~2016/430만 달러)
2014	이집트	이집트 라마단시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2014~2015/100만 달러)
201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섬유품질표준 및 품질보증검사 기술협력사업 (2012~2014/150만 달러)
201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섬유공단조성 타당성조사사업(2011~2014/ 480만 달러)
2014	콜롬비아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단지 역량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사업 (2013~2015/250만 달러)
2014	콜롬비아	콜롬비아 산업클러스터 기반 중소기업 생산경쟁력 강화사업 (2011~2015/300만 달러)
2014	파키스탄	파키스탄 건조농업대학 농축산 기술 역량강화센터 설립사업 (2012~2015/350만 달러)

(계속)

연도	국가	프로젝트 명(기간/예산)
2014	파키스탄	파키스탄 국립섬유대학 고성능섬유센터 설립사업(2013~2016/650만 달러)
2014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쿠프르니마 기술고등학교 건립사업(2010~2014/370만 달러)
2015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2015~2018/400만 달러)
2015	동티모르	동티모르 베코라 기술고등학교 지원사업(2013~2016/810만 달러)
2015	르완다	르완다 키추키로 종합기술훈련원 2차지원사업(2013~2017/500만 달러)
2015	르완다	르완다 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사업(2014~2016/250만 달러)
2015	모로코	모로코 무역역량 강화사업(2013~2015/295만 달러)
2015	모잠비크	모잠비크 마톨라 산업학교 역량강화사업(2013~2017/745만 달러)
2015	몽골	몽골 한몽 기술대학교 역량강화사업(2010~2016/576만 달러)
2015	미얀마	미얀마 기술교사 양성센터 설립 지원 사업(2015~2017/1,150만 달러)
2015	미얀마	미얀마 무역투자진흥기구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무역투자 분야 인적 역량강화 사업(2014~2016/300만 달러)
2015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화학산업 기술훈련원 역량강화사업(2013~2016/500만 달러)
2015	베트남	베트남 한베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지원사업(2014~2018/3,500만 달러)
2015	베트남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 지원사업(2014~2016/600만 달러)
2015	베트남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개발 역량강화사업(2013~2015/340만 달러)
2015	베트남	베트남 폐기물재활용 기술연구 역량강화사업(2013~2015/150만 달러)
2015	볼리비아	볼리비아 계량시험소 설립을 통한 계량표준 기반구축 사업(2015~2017/400만 달러)
2015	스리랑카	스리랑카 기능대학(CoT) 및 훈련원(TC) 자동차공과 개선사업(2013~2016/300만 달러)
2015	아이티	아이티 까라폴 의류기술훈련원 건립사업(2013~2017/373만 달러)
2015	우간다	우간다 과일가공공장 건립사업(2011~2017/740만 달러)
2015	우간다	우간다 농가공 및 마케팅 전략수립 사업(2013~2016/250만 달러)
2015	우간다	우간다 종합석유화학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2014~2016/150만 달러)
2015	이집트	이집트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14~2016/100만 달러)
201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고형폐기물 통합처리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 조사사업(2012~2016/200만 달러)

(계속)

연도	국가	프로젝트 명(기간/예산)
2015	캄보디아	캄보디아 기술교육 고등학교 개발사업(2013~2015/200만 달러)
2015	케냐	케냐 국가산업훈련청 역량강화사업(2014~2016/350만 달러)
2015	콜롬비아	콜롬비아 산업클러스터 기반 중소기업 생산경쟁력 강화사업 (2011~2015/300만 달러)
2015	콜롬비아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단지 역량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사업 (2013~2016/250만 달러)
2015	튀니지	튀니지 전기전자장비 재활용 시범사업(2010~2016/380만 달러)
2015	파키스탄	파키스탄 국립섬유대학 고성능섬유센터 설립 사업(2013~2017/650만 달러)
2015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바이오 연구센터 설립사업(2013~2016/300만 달러)

자료 : KOICA 내부 자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도 2012년부터 소액으로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관련 ODA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도국 중소기업의 생산역량 강화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국제기술협력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표 6-7>이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한 ODA 사업들이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베트남의 '인큐베이터파크 조성사업', 우즈베크의 '섬유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한-베트남 인큐베이터파크 조성사업은 베트남의 남부 견터시에 쌀·수산물 가공기계 부품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개조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관련 기업이 입주하여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즈베크의 섬유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우즈베크의 타슈켄트에 섬유테크노파크를 건립하고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ODA 프로젝트에서 예산이 가장 큰 사업이며, 다른 무상원조사사업과 비교해도 규모가 큰 사업이다.

〈표 6-7〉 산업통상자원부 ODA 프로젝트

	사업명	기간
프로젝트	한-베트남 인큐베이터파크 조성사업	2012~2015
	베트남 농업기계 개량보급사업	2015~2018
	우즈베크 섬유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2015~2019
	우즈베크 태양광 발전 협력사업	2014~2015
	한-인니정부간 신규경협과제발굴사업	2013~2015
Pre-F/S	페루 전력기자재 인프라 구축 사업	
	필리핀 금형산업기반 조성 사업	
	인도네시아 공작기계산업 육성 사업	
	캄보디아Recycle기반조성사업	
	탄자니아 농수산물가공 기반 구축 사업	
	몽골 광물가공 산업 육성 지원	
	에티오피아 섬유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콜롬비아 수처리 플랜트 조성사업		

자료 : KIAT 내부 자료.

4. 한국의 중소기업 관련 ODA 사업의 특징

한국의 중소기업 ODA는 주로 초청연수, 봉사자 및 전문가 파견, 교육, 정책자문 등 인적교류와 지식공유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은 콜롬비아의 산업클러스터 기반 중소기업 생산경쟁력 강화사업이지만 이것도 주로 인적교류와 지식공유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하고는 있지 않으나 KOICA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수행하고 있는 섬유산업 품질관리와 관련된 기술협력 사업이 중소기업 역량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다. 이 외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산업기술

연구센터나 교육기관 건립사업이다.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폐기물처리 시설건립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외에 산업연구개발 역량 강화나 무역역량 강화 사업이 중소기업 ODA의 주요 사업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은 건수도 적고 사업내용을 보면 정책자문사업에 유사하다. 그리고 SDGs에서 중시하는 빈곤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PSD 분야의 사업은 지금까지 수행한 적이 없다.

다음 장에서는 SDGs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한국의 중소기업 관련 ODA 사업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제7장

결론 : SDGs와 한국의 중소기업 개발 협력 정책 방향

본 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SDGs 달성을 위해 한국의 중소기업 ODA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지를 알아본다. 전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용성장을 추구하는 SDGs의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은 중요하며, 한국의 ODA도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우선 SDGs가 한국의 중소기업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제2절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해 한국의 중소기업 ODA사업으로 유망한 분야가 어떠한 것이 있을지 논의하여 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논의해 본다.

1. SDGs의 한국의 중소기업 ODA 정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ODA 정책 방향의 확립과 일관성 있는 중소기업 ODA 체계 구축

SDGs가 한국의 ODA정책에 제안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사점은 개발협력의 제공이 다면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 및 환경 사이에 서로 연결고리를 갖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MDGs 시기에는 그 비중이 주로 인간·사회개발에 두어졌으며, SDGs에서도 빈곤추방이 제1의 목표로 남고는 있다. 그러나 이 과제도 다른 목표들과 함께 균형을 이룸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빈곤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그간 한국의 ODA정책이 수원국의 개발촉진에 크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는 빈곤층의 소득증대, 여성 및 젊은 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참여자 간 동등한 대우,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방식 등을 ODA의 수행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국가차원에서 SDGs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빈곤감소, 포용성장, 지속가능한 환경 등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수행하는 기본목표부터 재확립한 후 여기에 맞추어 경제·산업부문별로 적절한 해당목표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표 3-4>에서도 보았듯이 국제개발기구를 포함하는 선진공여주체들은 국제개발협력의 대상을 민간부문개발(PSD)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산업부문 ODA도 여기에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접근방식에는

여러 배경이 작용하였으며, 특히 개도국들이 민간주도의 시장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확립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결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볼 때 SDGs 체제에서의 중소기업 ODA는 한국의 산업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SDGs 취지에 맞추어 개도국 내 민간부문개발을 지원한다는 접근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개발협력은 산업 ODA의 일환으로 개도국 중소기업의 역량제고를 추구하지만 SDGs가 추구하는 사회적 포용성,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SDGs의 추구하고 함께 더욱 강조되는 것은 개발협력정책의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유지이다. 또한 OECD는 MDGs 기간 동안 개발협력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성공요인으로 10개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개발협력대상 분야의 중복이나 분절을 지양해야 하는 것’이다(OECD, 2015, p.21). SDGs에서는 MDG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목표 및 이행목표수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문제는 한층 신경을 써야 할 절차이다. 또한 한국 ODA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어 온 사업의 분절성 문제는 중소기업 ODA에서도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도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무역, 투자, 기술이전과 관련된 한국의 정책은 개도국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도국과의 FTA를 한국이 확대시키고 있지만, 개도국 제품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 문제는 정책일관성 문

제에서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일관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SDGs 달성을 위해 정책 일관성 결여에서 오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했을 때의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 ODA의 경우에는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수원국과의 산업협력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실제로는 민간수준의 협력이 수행된다 하더라도 수원국 내 민간부문의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위 및 중위스트림 차원에서의 정부·공공차원의 협의를 통한 협력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소기업 ODA 집행과 병행하여 적절한 역량강화를 취지로 하는 프로그램을 수반하고 또 PPP형태의 진출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위 및 중위스트림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ODA는 한국이 지금까지 수행한 정책자문, 전문가과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효과성을 제고할 여지가 많다.

여기에 추가하여 중소기업 ODA협력사업의 내용과 관련하여 환경, 빈곤퇴치 및 포용성장,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등 SDGs 목표들 사이에 상호 상충(trade-off)되지 않음은 물론 나아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⁸¹⁾ 또 산업분야 내에서의 사업들 사이는 물론 이들과 다른 분야에서의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투자, 금융 및 기술 지원, 제도도입, 그리고 역량강화 등에 있어서 역시 SDGs를 중심으로

81) 예를 들어 한국의 시민단체인 푸른 아시아가 2001년부터 몽골 아이막 솜에서 전개하고 있는 수익성 조림사업은 대표적인 성공사례 중 하나이다.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소득증대 및 공동기금조성 등과 함께 사막화방지 및 환경복구 등의 업적을 쌓고 있다(주간 SUNDAY, 2016.9, pp.11~12).

사업이 일관성이 있는 체계를 유지하도록 면밀한 배려가 요구된다.

(2) 민간부문개발 측면의 중소기업 ODA 수행 방향

SDGs(8-9)는 민간부문개발(PSD)을 통해서 포용성장, 일자리창출, 산업화 및 인프라개발 등을 목표로 한다. 민간부문개발은 이제 개도국 내 빈곤추방,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서민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여성고용, 환경 친화적 (녹색)성장 등을 대변하는 대명사와도 같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개도국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시장의 골격을 구성하는 민간기업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SDGs는 소규모기업으로만 제시하고 있으며, PSD는 미소기업이나 자영업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제2장에서 살펴본 PSD관련 논의는 한국의 중소기업 ODA 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SDGs는 개도국 내 시장통합을 유도하는 민간부문의 개발과 함께 그 과정이나 방법 자체는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중소기업 ODA는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정책에 초점을 맞추되 개도국의 국내 기업 및 해외투자기업, 중소기업협회, NGO 등 중간매개기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부문개발은 단순한 빈곤층 대상 사업이라기보다는 개도국 내에서 부가가치생산 및 고용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미소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포함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기업들이 상업적, 유기적 연관활동을 통해서 지방, 지역 및 국제시장의 가치사슬(VC)속으로 통합됨으로써 시장경제체제

의 기반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SDG 9.3). 예를 든다면 생산과정에서의 비용절감을 위한 투입재의 거래나 빈곤층이 종사하는 기업 또는 빈곤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품을 거래하는 유통서비스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의 중소기업 ODA는 이러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한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개도국 내 시장왜곡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장순응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 기업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설되는 경우에 이러한 측면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해야 한다. 또 ODA 집행주체를 통해서 일정한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제까지는 선진공여국 및 국제개발기구들의 협력은 주로 수원국 내 자금부족이나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미소 및 중소기업들에게 보조금 지급 및 인력개발 등을 취지로 하는 양허적 성격의 지원형태를 택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방식은 SDGs의 취지인 빈곤해소, 일자리창출, 환경보존적 성장 등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 또 협소한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개도국 내 시장개입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조성함으로써 잠재적인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자율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개발협력의 선정대상은 1차적으로 해당기업이 여성, 젊은이 및 빈곤층 등을 고용함으로써 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또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일 필요가 있다. 예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 농식품 가공 및 관광 상품, 여성 직업교육, 주택사업, 태양열 이용을 비롯한 신

재생 에너지사업, 저가의 ICT 상품, 보건·위생서비스, 소액 및 농촌 금융 등과 같은 소위 포용적 사업(inclusive business)을 들 수 있다.

이렇게 SDGs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SDGs의 모든 취지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개발협력을 현실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단지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며, 앞으로 민간부문개발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개발협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본문에서 소개하였듯이(〈글상자 3-1〉 참조) 선진공여주체들이 도전기금(Challenge Funds)과 같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원조를 집행하는 이유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까다로운 요구조건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금들이 제시하는 조건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우선조건의 하나는 ‘혁신적인(innovative)’ 접근이다. SDGs의 취지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초기에는 경쟁을 통해서 수원국 내 개발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음과 동시에 SDGs의 취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원조사업 수행주체를 잘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중소기업 ODA 수행방식의 개선

원조사업 수행주체로서의 개발협력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선진공여국이나 국제개발기구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가능한 한 중간매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원

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관련 조직이나 기업들과 접촉하여 ‘실 수요자’에게 직접 원조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로써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다.

선진공여국들은 이러한 접근의 일환으로 수원국 정부, 비정부기관,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업협회, 노조, 대학, 연구기관 및 해당기업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현지사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도전기금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원조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아직 한국은 도전기금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고 있으나 다른 공여주체들의 경험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KOICA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현장사무소의 자율적 사업여지를 넓히고 사업의 형성과 평가 등을 현장 중심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 개도국 내 민간부문의 육성에 취지가 있다는 점에서 잘 알려진 공공-민간 개발 파트너십(PPP)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의 큰 이점은 개도국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기업가 정신, 혁신 및 기술의 제고, 기업경영의 노하우 및 마케팅방식 등을 개발하는 데 폭넓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국 내에서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순응하여 생존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따라서 기업자체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수입(收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지원받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혜택이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의 고용 등을 통해 이들에게 전반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들 기업은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CSR)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환경친화적인 생산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위

녹색성장과 같은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도 개도국 내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개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개발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시장에서의 가치사슬(value chain)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민간부문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수원국 특정지역 내에서 기업들 간 원자재, 중간재 및 최종재 거래를 통해서 생산 및 유통 활동 과정에서 유기적인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동으로 연결되도록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장에서 선진공여주체들의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지원방식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수의 공여국이나 국제금융기구가 민간중소기업이 용이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제도의 도입을 중시하고 있다. SDGs(8-9)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민간부문개발(PSD)을 위해 필수적인 관건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부분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선진공여주체 모두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대부, 자본참여, 보험 및 보증 등의 형태로 소규모 및 미소금융지원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일부는 농촌을 비롯한 최빈곤 지역 내 미소기업, 기업가 양성, 중소기업의 창업, 환경, 교육, 관광 산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프로그램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이 분야의 지원을 수행한 경험이 없지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만하다.

금융지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역량강화사업이 중소기업 개발협력에 속한다. 예로 농촌지역 내 청년 및 부녀자 교육, 미소·중소기업에 대한 자문, 직업훈련, 혁신경영교육 및 지식공유프로그램, 경제자유지역의 도입, 기업가 양성 학습, 지

역기업의 경영 노하우, 보건·위생서비스, 비공식기업의 공식부문 전환자문, 국내 시장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편입, 녹색경제의 정착, 지역 및 지방자본시장의 육성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자문, 교육훈련, 지식공유자문 등 역량강화의 방법은 다양하다.

2. S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중소기업 ODA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중소기업 ODA가 SDGs 달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ODA 정책방향과 수행방식을 많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SDGs 달성과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의 중소기업 ODA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할지를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하여 본다.

(1) SDGs 취지와 한국 ODA 역량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ODA 목표 설정

사회개발에 집중한 MDGs와는 달리 SDGs는 경제개발과 개도국의 내재적인 성장 동인을 촉발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은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서 SDGs의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중소기업의 생산역량의 제고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 환경을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이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ODA는 범분야적 접근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관련 ODA는 명

확한 목표를 정하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

SDGs의 포용성장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개발협력은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분야, 특히 최빈국의 경우에는 청년이나 여성 및 빈곤층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하고,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러한 산업의 발전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산업분야 ODA의 목표를 중소기업의 발전에 두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의 채택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초청연수나 봉사자 파견 등 소액의 예산의 인적교류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점차 중소기업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 있는 다년간 사업프로그램이 추진될 것이므로 중소기업 ODA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것이 한국의 중소기업 ODA의 SDGs에 대한 부합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일자리 창출이 활발한 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한국 중소기업 ODA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유망사업과 사업대상에 대한 설정을 하위목표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SDGs의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PS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최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ODA 사업 경험이 없고 정부주도적 성향이 강한 한국의 ODA 역량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한국의 중소기업 ODA는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생산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경주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SDGs는 포괄적인 목표 하에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모두 포함하는 전 세계 국가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도국 중소기업 발전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중소기업 ODA 지원을 넘어서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에 미치는 한국의 정책에 대한 규율을 포함한다.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한국의 무역정책은 개도국 중소기업의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한국은 개도국과의 FTA를 확대하고 있으나,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개도국 중소기업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의 확대는 개도국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다. 시장접근 문제는 개도국에 대한 투자확대와 기술이전 등 다양한 효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부 내에 깊이 침투되어 있는 보호주의적 성향, 특히 관세정책당국의 방어적 자세로 인하여 무역정책이 잘 운용될 경우 가능한 한국기업과 개도국 중소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기회를 놓치고 있지 모른다.

또한 앞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해외진출이 계속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관세정책에 있어서 최빈국에 대한 특혜무역관세 부여를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전향적 무역정책과 해당 개도국에 대한 중소기업 ODA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개발협력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특혜무역관세는 한국 중소기업의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유인으로 나타날 것이며, 중소기업 ODA는 직·간접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무역정책 외에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운용도 단순히 국내의 저임금 노동자의 수급을 넘어서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개도국의 양질의 노동자나 기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단순히 한국어 시험만을 기준으로 산업기술 훈련이 없이 외국노동력을 수입하는 데서 벗어나 개도국의 직업훈련 개발협력 사업과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개도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감안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란이 있으나, SDGs에서 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환경정책과 개발협력의 일관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ODA가 개도국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감이나 환경오염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존 중소기업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

전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의 중소기업 ODA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인적교류와 지식공유에 집중되어 왔다. 타 선진공여국에 비하여 ODA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금까지 다수의 국가에 소액의 지원을 해온 한국 ODA의 특성상 단기 정책자문, 초청연수, 봉사자 및 전문가 파견에 사업이 집중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나 지금까지의 개발협력의 경험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역량 강화에 한국의 비교우위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내실화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인적교류와 지식공유 사업이 실제 개도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공유 사업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ODA의 확장이 필요하다. 즉, 중소기업 ODA이 개도국의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결실을 맺음으로써 모범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ODA 예산의 증가와 함께 프로젝트 사업의 규모도 증가하고 다년간 사업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소기업 ODA가 실제 개도국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인적교류 및 지식공유를 위한 정책자문이나 초청연수 및 파견사업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

1) 사업의 분절성 시정을 통한 사업의 연계 및 패키지화

〈표 6-4〉의 한국 중소기업 ODA의 사업형태별 예산규모를 보면 프로젝트사업의 경우 평균 52만 달러, 초청연수의 경우 2.7만 달러, 정책자문의 경우 11만 달러 정도이다. 사업관리와 여비 등을 제외한다면 실제 사업에 집행되는 액수는 매우 소액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도 다수의 국가에 일률적으로 나누어 집행되고 있다.

우선 프로젝트 사업은 건수도 적지만 세르비아 사업체 등록기관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콜롬비아 산업클러스터 기반 중소기업 생산력 강화 사업,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육성센터 구축 지원사업 등도 정책자문 사업이 주된 사업이며, 중소기업 ODA로 분류는 되지 않지만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품질관련 기술협력사업, 우즈베크 섬유테크노파크 건립사업 등이 실제로 개도국의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앞으로 정책자문 등 지식공유 사업이 실제 개도국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유망분야를 찾고 이러한 유망분야에서 개도국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발굴하고 이 분야에 사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국 ODA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분절적 사업구조를 극복하는 것인데, 특정 분야나 특정 지역에 대한 사업을 정책자문, 인적교류, 실제 사업과 연계하고 패키지화함으로써 사업이 실제 성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표 7-1〉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의 산업 및 중소기업 ODA 유망 사업 분야들이다. 주동주 외(2012)는 한국의 발전경험에 비추어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ODA 사업분야를 선정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수립과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자문, 산업단지 클러스터 구축, 산업표준화 및 인증체제 등 산업인프라 구축, 경공업이나 녹색산업 육성, 폐기물관리나 에너지 절약과 같은 환경관련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종일 외(2012)는 한국의 산업역량에 비추어 기대되는 사업분야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산업기술개발 기반, 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이 유망한 사업이

〈표 7-1〉 한국의 산업 및 중소기업 ODA 유망 사업 분야

연구	유망사업
주동주 외(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 중소기업 육성 전략 자문 · 경공업 육성 지원 ·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 산업표준화 및 인증체제 수립지원 · 녹색산업 육성지원 · 폐기물 관리 체계구축 · 에너지절약 기술보급 및 효율정책 수립지원
김종일 외(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 · 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정책 인프라 지원
임소영 외(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전기에너지 접근성 강화 ·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개발 · 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 및 금융지원 · 수출활성화 정책 및 지원시스템(금융, 통관구축)

라고 제시하였다. 임소영 외(2013)은 한국의 ODA 역량과 함께 개도국의 수요를 모두 감안하여 전기에너지 접근성, 산업클러스터 개발, 중소기업 육성전략 및 금융지원, 수출활성화 등 네가지 분야가 유망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 ODA 사업 분야는 중소기업 육성정책 관련 자문이나 정책역량 강화, 산업단지 클러스터 역량 강화, 수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분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와 함께 SDGs의 기본취지에 맞추어 폐기물 관리나 에너지 절감 등에 필요한 개도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협력 등이 필요하며, 한국 ODA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산업분야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경공업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한

국의 ODA 경험을 고려할 때, 경공업 분야 중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섬유산업은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개도국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수준의 제고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2) 정책자문의 수원국 중소기업 정책과의 일치성 확충

기술협력을 수반하는 역량강화(capacity-building)분야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춘 부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최초로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식공유사업(KSP)은 대표적인 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단순한 자문, 교육, 훈련제공으로부터 기술협력에 이르기까지 극히 다양하며, 그 대상 역시 분야 및 부문별 경제·산업은 물론 정책, 제도 및 경제개발계획 등 범위가 극히 넓다. 한국은 개발경험에 기초하여 부문별로는 산업(제조업), ICT 및 농업부문 등에서 그리고 경제부문별 정책운영이나 경제계획의 수행 등에서 폭넓게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SP나 KOICA의 정책자문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자문이 실제 개도국의 중소기업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개도국 산업발전전략에 부응해야 한다. 즉 중소기업 정책자문이 개도국의 중소기업 정책이나 산업발전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융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을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정책이 실제로 내실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

며, 나아가 산업 육성이나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결여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따라서 정책자문 사업이 실제 개도국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정책집행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기사업보다는 다년간 사업구조가 되어야 하며, 사업의 주제도 거시-산업-미시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기초로 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 자문의 경우에는 개도국의 경제계획이나 산업전략 수립 과정에 내포적으로 사업이 구성되어야 한다. 즉, 자문사업의 일정이 개도국 전략수립을 위한 행정적 조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문사업의 일정이 개도국의 전략수립 일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문의 내용이 전략수립에 반영될 수 없다.

3) 초청연수와 파견 사업의 내실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청연수 예산은 2.7만 달러이며, 전문가 파견 예산도 2.3만 달러이다. 대부분의 초청연수는 일회성이며, 이것도 단기 초청이다. 대부분의 초청연수에는 산업시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산업시찰기간을 제외한다면 초청연수를 통하여 실제로 개도국의 정책담당자나 기업인의 내실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또한 전문가 파견도 일회성이 많아, 실제로 전문가 파견을 통하여 개도국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적, 정책적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책연수는 가능한 다수의 국가에서 단기에 관련 담당자를 초청하여 국내 산업을 홍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간을 늘리고 이

를 통하여 국내 정책 담당자와의 실질적인 교류와 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KOICA가 한동대, 한국폴리텍대 등과 협력하여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초청연수와 파견사업이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가에서 중소기업 정책 담당자를 한자리에 초청하기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유망 사업 분야의 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기술인력이나 기업인을 초청하여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전문가 파견이나 봉사자 파견도 실제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사업추진과 관련되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것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ODA가 패키지화되어야 가능하다.

(4) 중소기업 ODA 수행 방식의 개선

1) 현장 중심의 사업수행 방식의 확충

파리선언에서 제시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원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원조과정에서의 개도국 정부나 주민의 사업 참여의 활성화 등 주인의식의 제고와 원조 대상 개도국의 정책이나 현장상황에 대한 부합성이다. 한국의 ODA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것이 현장 중심의 사업수행방식의 결여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KOICA 등 원조주무기관의 사업운영방식이 현장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⁸²⁾

82) KOICA의 현장사무소에 위임된 권한과 책무가 거의 없다는 한국개발연구원(2011)의 지적 이후 사업 형성이나 위임, 전결할 수 있는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부처나 지자체의 ODA 사업의 경우 현장조직이 없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 ODA의 경우 지금까지 수행한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정책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지역중심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현장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과 협의 채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빈곤층의 경제활동 확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 개발 서비스(BDS)는 지역의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협의가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금융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는 현장지식이나 현장의 이해당사자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기업단체, 미소금융기관, NGO와의 협의, 사업 과정에서의 이들 조직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이나 수행방식이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훈련, 자문, 마케팅, 정보화, 기술이전 등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현장에 기반한 사업운영체계 하에서 체계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BDS 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사업구조 하에서 국가별 수준에 맞는 중소기업 ODA가 추진될 수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 ODA의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저소득 개도국의 경우에는 주로 빈곤해소를 위한 미소기업 육성을 위해 비공식부문의 중소기업의 공식화, 법적·제도적 기업경영 장애 해소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지식공유,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영관리 등을 주요 지원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다.⁸³⁾ 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ODA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83) OECD(2016), p.12.

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초청연수, 시설건립 사업을 일률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지양하기 위해서도 현장 중심의 사업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2) 민간기업의 최대한 활용

이러한 현장 중심의 ODA 사업운영 방식의 도입과 함께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 ODA의 민관협력의 확대이다. 특히 중소기업 ODA는 개도국의 중소기업의 육성이 목표이며, 사업의 궁극적인 수혜자도 개도국의 중소기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개도국의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기업보다는 지역의 관련 협회나 기술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수요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업분야 중소기업의 발전에 있어서 개도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편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도국에 투자하는 해외기업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 등 북구 선진공여국은 중소기업 ODA에 있어서 개도국 현지 사업과 관련된 자국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공여성 원조보다는 자국 기업의 이윤동기를 활용하여 자국의 투자기업과 개도국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동인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이윤동기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개도국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방적인 공여성 원조는 원조가 중단되

면 사업 자체가 중단되고 사업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반면 이러한 민관협력 사업은 ODA가 중소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공여국 기업과 수원국 기업의 협력을 타깃으로 한 ODA 사업은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기업들은 해외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며 적극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특히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된다.⁸⁴⁾

한국의 대규모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산업기지를 건설하고 개도국에서의 가치사슬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해오고 있으나, 해외에 진출한 한국의 중소기업은 이러한 여력이 없다. 특히 의류, 봉제, 식품, 액세서리 등 경공업 분야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은 산업 인프라와 인력수급 등에서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활동 영역이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산업분야 중소기업 ODA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지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산업분야 중소기업 ODA는 한국의 경공업 분야 중소기업이 진출할 유인이 있으나, 해당 지역의 비즈니스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산업클러스터를 타깃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산업분야 중소기업 ODA는 앞으로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84) 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정책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5) Bottom-up 방식의 중소기업 ODA 사업의 발굴 및 확충

SDGs가 지향하는 포용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PSD를 위한 개발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개도국 중소기업 정책자문이나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등 정부 대 정부(G2G) 사업을 주로 수행해 왔다. 이러한 G2G 사업은 전형적인 top-down 방식의 사업으로서 이들 사업이 빈곤층의 경제활동 촉진과 소득불평등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Bottom-up 방식의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타 공여국에 비해 ODA 역사가 길지 않으며, 현장 밀착형 사업을 해 온 경험이 부족한 한국이 이러한 사업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기보다는 UN, ADB, 세계은행 등이 수행하는 다자간 ODA 사업에서 PSD 관련 사업에 출연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공여국에서도 이미 다양한 PS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 중 한국이 보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공조적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선진공여국의 ODA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현재의 사업 과정에서 현장 밀착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새마을 운동 ODA를 한국 ODA의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새마을 운동 ODA는 초청연수 프로그램, 마을협의체를 통한 소규모 사업 프로그램, 농촌개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여 왔다. 프로젝트 사업은 마을환경개선, 가축은행, 직물 재배 등 소득증대, 보건·의료·위생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

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도 여전히 일회성 마을지도자 초청연수나 물리적 시설의 구축지원이 중심인 형태로 사업의 수행방식도 top-down 방식이다.⁸⁵⁾

개도국의 농촌지역은 빈곤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새마을 운동사업 과정에서 빈곤층의 창업이나 시장접근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에서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서비스나 생산 인프라 분야에서 지원할 사업분야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⁸⁶⁾

(6)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부문적 접근 강화

산업분야 중소기업의 발전에는 금융, 기술, 인력, 판로 등에서 양호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는 거시적, 산업적, 기업적 수준에서의 다양한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나아가 빈곤층의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PSD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적 요인 외에도 의료, 보건, 교육, 양성평등 등 사회개발적 요인에서도 우호적인 조건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렇게 중소기업 개발을 위해서는 폭넓은 범분야적 전략(cross-cutting strategies)이 요구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DGs에서는 MDGs와는 달리 사회개발과 함께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도 하나의 목표로 설정

85)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4) 참조.

86) 일본의 경우 자국에서 유래한 일촌일품 운동(지역 특산품 발굴 생산 판매 운동)을 말라위에서 미소금융 프로젝트로 수행한 바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1970년대 이후 농공단지 등의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을 새마을 운동 ODA 사업과정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있으며, 사회-경제-환경의 상호보완적 발전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에서 살펴본 산업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ODA와 빈곤층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PSD ODA뿐만 아니라 한국 ODA 전반에서 개도국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기회와 지원 수요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중소기업 육성을 범분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환경 등과 함께 개도국 주민의 소득창출 기회 확장을 모든 ODA 사업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교육, 보건 등의 사업에서 이것이 개도국 주민의 경제활동이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사업방식도 이러한 영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ODA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현지의 중소기업에서 조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OECD DAC의 동료평가에서 지적되고 있는 한국 ODA의 구속성을 해소하는 길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18-1호.
- 기획재정부(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정책자문 평가보고서」.
- 김세원·강인수·김종일·임소영(2015a),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산업ODA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2015-774, 산업연구원(KIET).
- 김세원·김종섭·박복영·이은석(2015b), 「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ODA정책연구 15-03, 국제경제정책연구원(KIEP).
- 김종일·윤미경(2012),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 산업역량 구축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김주권(2016),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연구자료 16-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미하일보네트(2013), “독일의 개발협력 정책”, 「FES Information Series」, 2013-01,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박영호(2015),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연구자료 15-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수출입은행(2015), 2016 세계국가편람.
- 이효정(2015), “미국의 농업부문 ODA 현황과 사례”, 「세계농업」, 166호 1-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2011), 「한국국제협력사업단사업 심층평가」.
- 한국금융연구원(2013), 「녹색금융활성화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 해외문헌

- ADB(2015),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 Ayyagari, M, T. Beck and A. Demirgüç-Kunt(2005),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ross the Globe”, working paper.

- Beck, T., A. Demirguc-Kunt and R. Levin(2005), “SMEs, Growth and Poverty: Cross-Country Evidence”, working paper.
- Biggs, T. and Srivastava, P.(1996), “Structural aspects of manufacturing in sub-Saharan Africa: findings from a seven country enterprise survey”, World Bank.
- CAFOD(2014), What is Inclusive Growth?, CAFOD discussion Paper(full version), London.
- DCED(2009), Making Markets Work for the Poor.
- DFID(2008), Prosperity for all: Making Markets Work, London.
- EU(2014), Evaluation of the User Guide to the SME Definition, Final Report.
- Friedman, E., Johnson, S., Kaufmann, D., Lobaton, P. Z(2000), “Dodging the grabbing hand: the determinants of unofficial activity in 69 countr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6, pp.459~493.
- Gibson, T. and H. J. Van der Vaart(2008), “Defining SMEs: A Less Imperfect Way of Defin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Developing Countries”, Brookings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 Haltiwanger, J. C., R. Jarmin and J. Miranda(2013), “Who Creates Jobs? Small Versus Large Versus Young”,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2), 347-361, May 2013.
- Hatiwanger, J. C. and S. Schul(1993), “Gross Job Flows in U.S. Manufacturing”, U.S. Department of Commerce.
- Heesen, B.(2016), *Effective Strategy Execution - Improving Performance with Business Inteligence*, Springer, 2nd Edition.
- Hubbard, G. and W. Duggan(2009), *The Aid Trap: Hard Truths about Ending Poverty*, Columbia University Press.
- IMF Working Paper(2013), R. Anand, S. Mishra, and S. J. Peiris, Inclusive Growth: Measurement and Determinants.
- JICA(2013), Thematic Guidelin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 _____(2015), JICA 2015 Annual Report.

- Le Blanc, D.(2015), Towards integration at last?, DESA(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Affairs) Working Paper No. 141, ST/ESA/2015/DWP/141, UN, March 2015.
- Moyo, D.(2009), *Dead Aid: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 Better Way for Africa*, Farrar, Straus and Giroux.
- OECD(2004), Promoting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ve SMEs in a Global Economy, Towards a More Responsive and Inclusive Globalisation, 2004, Istanbul, Turkey.
- _____(2006), Promoting Pro-Poor Growth: Private Sector Development.
- _____(2014),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Happen.
- _____(2015), 2015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Paris.
- _____(2016a),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 Overview of relevant OECD Analysis, tools and approaches, Paris.
- _____(2016b), Towards An OECD Strategic Respons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onsultation draft, Feb. 2016, Paris.
- _____(2016c),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6: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Business Opportunities, Highlights, Paris.
- _____(2016d), The Productivity and Inclusiveness Nexus.
- _____(2016e), Ministerial Meeting 2016, Enhancing Productivity for Inclusive Growth.
- _____(2016f), Production Transformation Policy Reviews(PTPRs): A Policy Assessment and Guidance Tool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oduction Transformation Strategies, DEV/GB(2016)2, 27-Jan-2016, 내부자료, Paris.
- _____(2016g), Development Co-operation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Analytical Framework and Measuring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DAC meeting, 20 May 2016, DCD/DAC/Agid92016)1/Rev1, 내부자료, Paris.
- OECD, World Bank Group(2015), Inclusive Global Value Chains, Policy Op-

- tions in Trade and Complementary Areas for GVC Integration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6 Oct. 2015, Istanbul, Turkey.
- Pack, H. and Westphal(1986), “Industrial strategy and technological change: Theory versus realit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22, issue 1, pp.87~128.
 - Prahalad, C. K.(2004), *The Fortun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Eradicating Poverty Through Profits*, Wharton School Publishing.
 - Schmitt-Degenhardt, S, A. Stamm and M. Zehdnicker(2002), “The Growth Gap: A Small Enterprise Phenomenon”, Report.
 - Springfield Centre(2008), *A Synthesis of the Making Markets Work for the Poor Approach*, Bern: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SIDA)(2003), *Making Markets Work for the Poor: Challenges to Sida’s Support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Stockholm, October 2003.
 - _____(SIDA)(2016), *Challenge Funds, Guidelines*(http://www.sida.se/contentassets/3aa2456211934e8dac038ea55fcddccd/guidelines--challenge-funds_3466.pdf).
 - Tambunan, T.(2016), *SMEs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Palgrave Macmillan.
 - UN(2012), *The Future We Want*,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NY.
 - _____(2013),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NY.
 - _____(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Synthesis Report of Secretary-General on the Post-2015 Agenda, NY.
 - _____(2015a), *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e International Confer-*

- 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Addis Ababa.
- _____(2015b),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NY.
 - _____(2015c),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Y.
 - _____(2016b),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6, NY.
 - _____(DESA, 2016a),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6 Edition, Advanced Unedited Vers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Y.
 - UNCTAD(2011), Best Practices in Investment for Development: How to create and benefit from FDI-SME Linkages Lessons from Malaysia and Singapore.
 - UNDP, International Policy Center(2013), After All, What is Inclusive Growth?,
 - UNEP(1989),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_____(1998),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 _____(2001),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USITC(2013b), *Global Value Chains: Investment and Trade for Development, World Investment Report*, UNCTAD, Geneva.
 - Wharnholz, J.-L.(2007), "Poverty Reduction for Profit? A Critical Examination of Business Opportunities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Queen Elizabeth House Working Paper 160, Oxford University.
 - World Bank(2002), Private sector development Strategy - Direction for The World Bank Group.
 - _____(2009), What is Inclusive Growth?.
 -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Report, R. Semans, J. Blanke, G. Corrigan, M. Drzeniek ed.
 - WSIS Forum(2015), WSIS-SDGs Matrix Linking WSIS Action Lines with Sus-

tainable Development Goals.

- WTO· OECD(2013a), Interconnected Economies
- _____(2013b), Aid for Trade in Action.

3. 인터넷 자료

- ADB, <http://www.adb.org/documents/private-sector-development-revised-strategic-framework>
- AfDB, <http://www.afdb.org/en/topics-and-sectors/sectors/private-sector/>
- EU, http://ec.europa.eu/europeaid/sectors/economic-growth/private-sector-development_en
- GIZ, <https://www.giz.de/en/worldwide/17815.html>
- http://www.business-in-asia.com/vietnam/sme_in_vietnam.html
- JICA, <https://www.jica.go.jp/philippine/english/office/topics/news/160530.html>
-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 SMEinfo, <http://www.smeinfo.com.my/>
- UN 글로벌 컴팩트, <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
- USAID, <https://www.usaid.gov/macedonia/fact-sheets/business-without-borders-project>
- 미얀마 중소기업청, <http://www.smedevelopmentcenter.gov.mm/>
- 비즈니스 인 아시아.
- 중소기업청, <http://m.smba.go.kr/subMain.do>

Abstract

An In-depth Analysis on ODA Policy for Development of SMEs in Developing Countries in SDGs Era

Sewon Kim *et al.*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was adopted as a new global goals for development in 2015. The SDGs which replace the MDGs is a comprehensive set of goals with the 169 targets to be achieved by 2030. While the MDGs narrowly focused on the aspects of social development, the new SDGs pay attention to various aspects of development including the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The SDGs will change the paradig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next 15 years and will influence the direction of the ODA policy in Korea as a result.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achieving inclusive economic growth in SDGs paradigm because the SMEs sector take a large share of total em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offers various economic opportunities for the poor in developing countries. It implies that the SME development will become an important agenda to accomplish the SDGs next 15 years.

Although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was driven by the large conglomerates, the Korean government regarded the SMEs as important partners in designing economic policies and endeavored the development of the SMEs through various policy measures. The experience of Korea's SME development is a valuable asset which could be utilized in helping other developing countries for SME development.

Thus,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Korea's ODA for SME development in the spirit of the SDGs. Specifically, this study tries to find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kind of the SMEs should be the target of Korea's ODA for SME development? How could we design the assistance program in order for the ODA for SME development to be effective? What are the promising areas where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SME development assistance? These questions are important because since the SMEs in developing countries are everywhere with different kinds of problems. They are also different in their potentials in creating jobs and generating economic growth. For instance, the bottlenecks for the development of SMEs in manufacturing sector are different from those in services sector. The assistance to private sector

development(PSD) for the bottom of pyramid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assistance to the SMEs working for the global value chains. The role of SMEs should change as the income of countries grows.

Thus, Korea should focus on the areas where Korea could do best in assisting the SMEs in developing countries. To answer the ques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isting research in the fields related with SMEs in developing countries, current issu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lated with SME development, the SME development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It also studies the ODA programs for SME development in selected OECD/DAC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llowing the introduction in chapter 1, the chapter 2 overviews the SDGs paradigm and studies the role of the SMEs in achieving the SDGs. Since the poverty reduction through economic growth is one of key targets in SDGs, we also discuss the development of SMEs as a way of PSD.

In chapter 3, we survey the definition of SMEs in various countries and discuss the role of SMEs in production and employment. Here, we investigate the role of ODA for SME development and suggest a group SMEs which could be a target of SME development assistance.

Chapter 4 briefly overview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ME sector and the SME policies in Asian countries such as Vietnam, Indonesia, Thailand, Malaysia, Philippines, Myanmar, Laos, Cambodia. These countries are selected because they are the major candidates of Korea's ODA for SME development.

Chapter 5 lists up the ODA program of selected doner countries

which are quite active in ODA for SME development, such as the USA, Japan, Germany, the UK, and the Nordic countries. We also investigate the programs for SME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EU, World Bank, ADB, IDB, AfDB, and UNDP.

Chapter 6 evaluates the Korea's ODA for SME development based on the data from the OECD/DAC and existing ODA programs related with SME development in KOICA and EDCF.

Finally, chapter 7 concludes the study by suggesting the direction of Korea's ODA for SME development under the SDGs paradigm.

연구보고서 2016-784

SDGs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ODA 정책의 심층 연구

인쇄일 2016년 12월 17일

발행일 2016년 12월 20일

발행인 유병규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문 의 자료·편집팀 044-287-3215

인쇄처 이호문화사

값 11,000원

ISBN 979-11-88165-03-2 93320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역제를 금합니다.